

주요국 예산안 2019

2019. 3



연구진

연구책임자

박한준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강희우 부연구위원

강동익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정은 · 최경진 · 한혜란 (국제기구)

구윤모 (미 국)

장광남 (일 본)

엄동욱 (독 일)

이정인 (프랑스)

김은숙 (영 국)

박신아 (캐나다)

김인유 · 장광남 (호 주)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PART

1

총 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3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3
가. 세계 경제 전망	3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7
2. 세계 재정 전망	12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12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14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18
가. 통화정책	18
나. 재정정책	19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21
1. 미국(FY2019: 2018.10~2019. 9)	21
2. 일본(FY2019: 2019.4~2020.3)	22
3. 독일(FY2019: 2019.1~2019.12)	24
4. 프랑스(FY2019: 2019.1~2019. 12)	27
5. 영국(FY2019-20: 2019.4~2020.3)	29
6. 캐나다(FY2019-20: 2019.4~2020.3)	31
7. 호주(FY2018-19: 2018.7~2019.6)	33

I. 미 국	39
1. 경제 및 재정 전망	41
가. 경제 전망	41
나. 재정 전망	43
2. 예산기준	46
3. 예산안 내용	47
가. 세입	47
나. 세출	48
4. 주요 재정정책	55
가. 인프라 투자	55
나. 이민제도	56
다. 의료정책	58
라. 주요 재정사업 절감(savings) 및 개혁(reforms)	59
II. 일 본	63
1. 경제 및 재정 전망	66
가. 경제 전망	66
나. 재정 전망	69
2. 예산기준	71
3. 예산안 내용	75
가. 세입	75
나. 세출	78
4. 주요 재정정책	84
가. 경제성장	84
나. 안전·재해 예방	85

다. 지역 발전·창생	86
라. 재정건전화	87
Ⅲ. 독일	91
1. 경제 및 재정 전망	94
가. 경제 전망	94
나. 재정 전망	96
2. 예산기준	98
3. 예산안	100
가. 재정수입	100
나. 재정지출	101
4. 주요 재정정책	105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105
나. 재정건전화	106
다. 에너지 정책	108
Ⅳ. 프랑스	109
1. 경제 및 재정 전망	112
가. 경제 전망	112
나. 재정 전망	113
2. 예산기준	118
3. 예산안 내용(PLF 2019)	119
가. 세입	119
나. 세출	121
4. 주요 재정정책	125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125
나. 재정건전화	127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128

V. 영국	133
1. 경제 및 재정 전망	137
가. 경제 전망	137
나. 재정 전망	139
2. 예산기조	142
3. 예산안 내용	145
가. 세입	145
나. 지출	150
4. 주요 재정정책	156
가. 경제성장	156
나. 복지 및 공공서비스	158
다. 브렉시트(Brexit) 대응	160
라. 재정건전화	161
VI. 캐나다	167
1. 경제 및 재정 전망	170
가. 경제 전망	170
나. 재정 전망	171
2. 예산기조	173
3. 예산안 내용	174
가. 세입	174
나. 세출	176
4. 주요 재정정책	179
가. 중산층에 대한 투자	179
나. 재정건전화	181

VII. 호주	183
1. 경제 및 재정 전망	186
가. 경제 전망	186
나. 재정 전망	187
2. 예산기조	191
3. 예산안 내용	195
가. 세입	195
나. 세출	197
4. 주요 재정정책	201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201
나. 복지	203
다. 안전	204
라. 재정건전화	205

표 목차

PART 1 총론

〈표 I-1〉 세계경제 전망	3
〈표 I-2〉 WEO 세계경제 전망(GDP 성장률)	4
〈표 I-3〉 EU의 경제 전망	6
〈표 I-4〉 OECD의 주요국 경제 전망	9
〈표 I-5〉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11
〈표 I-6〉 OECD의 재정 전망	12
〈표 I-7〉 EU의 재정 전망	13
〈표 I-8〉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	15
〈표 I-9〉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16
〈표 II-1〉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21
〈표 II-2〉 일본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23
〈표 II-3〉 거시 전망 주요수치	24
〈표 II-4〉 FY2019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25
〈표 II-5〉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27
〈표 II-6〉 영국 경제 및 재정 전망	29
〈표 II-7〉 캐나다 경제 전망	31
〈표 II-8〉 캐나다 재정 전망	31
〈표 II-9〉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33
〈표 II-10〉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34

〈표 I-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41
〈표 I-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42
〈표 I-3〉 미국 재정 전망	44
〈표 I-4〉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47
〈표 I-5〉 FY2019 예산안 기능별(Function) 재정지출 규모	49
〈표 I-6〉 항목(Category)별 지출 전망	51
〈표 I-7〉 기관별(재량)지출 순예산권한 내역	54
〈표 I-8〉 주요 재량지출 예산권한 폐지(안) 규모	61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68
〈표 II-2〉 FY2019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69
〈표 II-3〉 FY2019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76
〈표 II-4〉 FY2019 조세 및 인지도입	77
〈표 II-5〉 FY2019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제외)	79
〈표 II-6〉 FY2019 주요 분야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포함)	80
〈표 III-1〉 거시 전망 주요수치	94
〈표 III-2〉 경제성장률 추이	95
〈표 III-3〉 FY2019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96
〈표 III-4〉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99
〈표 III-5〉 항목별 재정수입	100
〈표 III-6〉 부처별 재정지출	103
〈표 III-7〉 2017-2022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104
〈표 III-8〉 재정 전망	107
〈표 III-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108

〈표 IV-1〉 거시경제 전망	112
〈표 IV-2〉 FY2019 예산안	114
〈표 IV-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114
〈표 IV-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116
〈표 IV-5〉 FY2018 세입전망	120
〈표 IV-6〉 2019년 예산법안 주요 세제개편안	120
〈표 IV-7〉 정부지출	122
〈표 IV-8〉 2019 미선별 세출 내역	123
〈표 IV-9〉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129
〈표 IV-10〉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지출	130
〈표 IV-11〉 2019년 프랑스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	131
〈표 V-1〉 주요 경제 전망(2018년 10월 기준)	137
〈표 V-2〉 주요 경제 전망(2019년 3월 기준)	138
〈표 V-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2018년 10월 기준)	139
〈표 V-4〉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2019년 3월 기준)	141
〈표 V-5〉 2018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144
〈표 V-6〉 경상수입 전망	146
〈표 V-7〉 2018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148
〈표 V-8〉 총관리지출(TME) 전망	150
〈표 V-9〉 2018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153
〈표 V-10〉 NHS England 경상지출 부처별한도(RDEL)	158
〈표 V-11〉 복지지출 한도 및 복지지출 전망	162
〈표 V-12〉 재정준칙 기준 및 달성 여부 평가	162
〈표 VI-1〉 캐나다 경제 전망	171
〈표 VI-2〉 캐나다 재정 전망	172
〈표 VI-3〉 2018년 FES 이후 조정내역	172
〈표 VI-4〉 세입 전망	175

〈표 V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177
〈표 VI-6〉 2019년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181
〈표 VI-7〉 FY2019-20 시장채무(Market Debt)	182
〈표 VI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187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188
〈표 VII-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193
〈표 VII-4〉 재정수입 전망	195
〈표 VII-5〉 FY2018-19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196
〈표 VII-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198
〈표 VII-7〉 FY2018-19 예산안 기능별지출	198
〈표 VII-8〉 FY2018-19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200
〈표 VII-9〉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206

그림 목차

PART 2 각국 예산안 분석

[그림 I-1]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자 수 추이	58
[그림 II-1]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81
[그림 II-2]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구성(임시특별조치 제외)	81
[그림 III-1] 독일 국가채무 추이	97
[그림 III-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99
[그림 III-3]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102
[그림 IV-1] 재정지출증가율 추이 및 전망	113
[그림 IV-2]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115
[그림 IV-3]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추이 전망	131
[그림 V-1] 경상지출 부처별 지출한도(Resource DEL, 감가상각 제외)	142
[그림 V-2] FY2019-20 경제유형별 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	147
[그림 V-3] FY2019-20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416억파운드)	152
[그림 V-4] 공공부문 순차입	163
[그림 V-5]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163
[그림 V-6] 공공부문 순채무	163
[그림 V-7] 복지지출 한도	163
[그림 VI-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182

[그림 VII-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190
[그림 VII-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190
[그림 VII-3] FY2018-19 재정수입 구성	195
[그림 VII-4] FY2018-19 재정지출 구성	199
[그림 VII-5] 호주 인프라 투자 계획	201
[그림 VII-6] GDP 대비 지출 추이 및 전망	206

제 1 부
총 론

I. 세계 재정정책 흐름

1 세계 거시경제 전망

가. 세계 경제 전망

〈표 I-1〉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IMF 전망)				실질GDP(OECD 전망)				실질GDP(EU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2017	2018	2019	2020
미국	2.2	2.9	2.5	1.8	2.2	2.9	2.6	2.2	2.2	2.9	2.6	1.9
유로지역	2.4	1.8	1.6	1.7	2.5	1.9	1.0	1.2	2.4	2.1 (1.9)	1.9 (1.3)	1.7 (1.6)
일본	1.9	0.9	1.1	0.5	1.7	0.9	0.8	0.7	1.7	1.1	1.0	0.5
중국	6.9	6.6	6.2	6.2	6.9	6.6	6.2	6.0	6.9	6.6	6.2	5.9
세계	3.8	3.7	3.5	3.6	3.6	3.7	3.3	3.4	3.7	3.7	3.5	3.5

주: 1.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2019.3.6.

참고: EU 전망에서 유로지역의 괄호 안 숫자는 2019년 겨울 중간 전망(2019.2.) 기준, 그 외에는 2018년 가을 전망(2018.11.) 기준 전망치임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9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Table 1.1.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3, p.2.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9(Interim), 2019.2.

□ (IMF 전망¹⁾) 유럽 및 아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경기 부진으로 의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9년 3.5%로 예측(2018년 10월 예측 대비 0.2%p 하향조정)

- (주된 요인) ① 무역긴장 상존 ② 영국의 노딜(No Deal) 브렉시트,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금융시장 심리 위축 ③ 기타 요인* 및 '18년 하반기 둔화된 경제 모멘텀을 반영

* 미국 정부 섯다운, 지정학적 위험(중동 및 동아시아지역),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터키 경제 축소, 신저동차배기가스 배출 기준 도입에 의한 독일 경제 위축 등 국가별 요인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9

- (위험)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한 주요 위험 원인은 무역 협상의 결과 및 향후 몇 달간 금융 여건의 방향에 있음. 각 국가들이 왜곡된 무역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시장 심리가 개선되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작년 10월 WEO 경제 전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전히 하방위험으로 작용
- (무역 긴장) 지난해 11월 30일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했으나 내부 비준이 필요하며, 12월 1일 미국과 중국은 관세 인상에 대해 90일간 ‘휴전(truce)’한다고 발표하였고 미국 자동차 수입에 대해 관세 인하를 결정하였으나 최종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함.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 및 기타 무역 긴장은 여전히 세계 무역, 투자 및 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음
- (금융시장 심리) 무역긴장의 고조,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 중국 경기 침체, 연말 미국 정부의 섀도우 등에 대한 우려로 2018년 하반기 주가가 하락

〈표 1-2〉 WEO 세계경제 전망(GDP 성장률)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2018년 4월 WEO		2018년 7월 WEO Update		2018년 10월 WEO		2019년 1월 WEO Update		
	'18	'19	'18	'19	'18	'19	'17	'18	'19
세계경제	3.9	3.9	3.9	3.9	3.7	3.7	3.8	3.7	3.5
선진국	2.5	2.2	2.4	2.2	2.4	2.1	2.4	2.3	2.0
미국	2.9	2.7	2.9	2.7	2.9	2.5	2.2	2.9	2.5
유로존	2.4	2.0	2.2	1.9	2.0	1.9	2.4	1.8	1.6
일본	1.2	0.9	1.0	0.9	1.1	0.9	1.9	0.9	1.1
그 외 선진국 ¹⁾	2.7	2.6	2.8	2.7	2.8	2.5	2.8	2.8	2.5
신흥국 및 개도국	4.9	5.1	4.9	5.1	4.7	4.7	4.7	4.6	4.5
아시아	6.5	6.6	6.5	6.5	6.5	6.3	6.5	6.5	6.3
중국	6.6	6.4	6.6	6.4	6.6	6.2	6.9	6.6	6.2
인도 ²⁾	7.4	7.8	7.3	7.5	7.3	7.4	6.7	7.3	7.5
아세안-5 ³⁾	5.3	5.4	5.3	5.3	5.3	5.2	5.3	5.2	5.1

주: 1) G7 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과 유로지역 국가들 제외

2) 실적/전망치 데이터는 회계연도를 기초, 2011년부터 2011-12년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한 시장가격 기준 GDP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8, Update July 2018, October 2018, Update January 2019 편집

- (EU 전망²⁾) EU 경제는 2019년에 7년 연속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³⁾⁴⁾
- (경제성장률) 2019년 2월 전망 기준, 2019년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2018년 가을 전망 대비 0.6%p 하향 조정된 1.3%, 2020년은 0.1%p 하향 조정된 1.6%로 전망됨
 - EU의 GDP 성장률은 2019년 1.5%, 2020년 1.7%로 전망되어 2018년 가을 전망 대비 각각 0.4%p, 0.1%p 하향 조정됨
 - 교역 증가세 둔화 및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고조, 제조업 생산 감소, 일부 회원국의 사회적 갈등 및 재정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올해 초 경제 모멘텀이 감소함
 - 그러나 펀더멘털은 계속 양호하며 향후 2년간 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여건 개선, 다소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 매우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에 따른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 등은 유럽 경제에 긍정적 요인임
 - (물가)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19년 1.4%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2020년 1.5%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기저 효과와 원유 선물가격 가정 하향 조정으로 2019년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지난 가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EU의 물가상승률은 2019년 1.6%, 2020년은 1.8%로 전망됨
 - (노동) 경제성장, 구조개혁, 일부 국가의 정책 등으로 향후 2년간 실업률 하락과 일자리 창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도는 약화될 전망이다⁵⁾
 - 2018년 3분기 유로지역 고용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고 2018년 12월 유로 지역 실업률은 7.9%로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2)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9(Interim)*, 201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월 1호, 2019.2.

3) European Commission, *Winter 2019 Economic Forecast: growth moderates amid global uncertainties*, 2019.2.7.

4) 현재 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2019~2020년에 대한 전망은 EU-영국 간 교역 조건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술적 가정을 근거로 이루어짐

5)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 최근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었으나 회원국 간 실업률에서 여전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가을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 실업률은 2019년 7.9%, 2020년 7.5%, EU의 실업률도 2019년 6.6%, 2020년 6.3%로 하락할 전망
- (리스크)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 있으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함
 - (세계 경제 리스크)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미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한 재정 관련 리스크, 투자 심리 및 성장 전망 변화에 취약한 글로벌 금융시장 및 다수 신흥시장 등이 리스크 요인임
 - (EU 경제 리스크)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일부 국가의 금융부문 부실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negative sovereign-bank loops), 배출가스 규제에 의한 자동차 산업 둔화 등이 주요 하방 리스크임
- 반면 적극적인 EU 기금 활용을 통한 추가 투자 유발, 우호적 노동시장 여건에 의한 내수 강화 등은 상방 리스크로 작용

〈표 1-3〉 EU의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전망 시점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유로 지역	2018년 11월 전망	2.1	1.9	1.7	1.8	1.8	1.6	8.4	7.9	7.5
	2019년 2월 전망	1.9	1.3	1.6	1.7	1.4	1.5	-	-	-
EU27	2018년 11월 전망	2.2	2.0	1.9	1.8	1.9	1.7	7.4	7.0	6.6
	2019년 2월 전망	2.1	1.5	1.8	1.8	1.6	1.7	-	-	-
EU28	2018년 11월 전망	2.1	1.9	1.8	2.0	2.0	1.8	6.9	6.6	6.3
	2019년 2월 전망	1.9	1.5	1.7	1.9	1.6	1.8	-	-	-

주: 1. EU의 겨울 중간 경제전망(2019년 2월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만 발표

2. EU 27은 영국을 제외한 전망치임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9(Interim)*, 2019.2.

나.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

□ IMF의 주요국 경제 전망⁶⁾

- (미국) 지난 가을 전망과 변함없이 2.5%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재정경기부양책 중단과 연방 기금 금리가 일시적으로 자연이자율을 상회함에 따라 2020년 1.8%까지 낮아질 전망
- (유로지역) 2018년 1.8%에서 2019년 1.6%, 2020년에는 1.7%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됨. 이는 독일의 자동차 배출가스기준 개정 후 공업생산 약화, 이탈리아의 높은 국채 금리 및 내수 부진, 프랑스의 거리 시위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된 결과임
- (일본) 2019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전망 대비 0.2%p 상승한 1.1%로 전망되며, 2020년은 0.5%로 전망(지난 10월 전망보다 0.2%p 상승), 이는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효과 완화를 위한 조치 등 재정부양책을 반영한 것임
- (영국) 2019-20년 베이스라인을 1.5%로 예측하였으나, 불확실성이 존재함. 현재 예측은 브렉시트 결과의 부정적인 영향이 2019년 재정부양책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가정한 예측임

□ OECD의 주요국 경제전망⁷⁾

- (주요국 전망) G20 대부분 국가들의 전망치가 11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유로 지역은 대폭 조정됨
 - G20 : '19년 3.7% → 3.5%, '20년 3.7% → 3.7%
 - EU : '19년 1.8% → 1.0%, '20년 1.6% → 1.2%
- (미국) 재정지원 효과가 약화되면서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19년 2.6%, '20년 2.2%으로 전망
 - 견고한 노동시장 성과와 완화적 금융여건이 가계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높은 관세로 인해 기업투자와 수출성장은 둔화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9

7)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3월 1호.

- 연방정부 폐쇄(shutdown)에 따른 성장 둔화는 2019년 1분기로 제한되며 이후는 개선될 전망
- (일본) 기업이익의 호전과 노동력 부족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하지만, 최근 산업생산과 수출은 매우 둔화되어 GDP 성장률은 '19년 0.8%, '20년 0.7%로 전망
 - 사회지출 확대, FY2018의 추경, FY2019 예산안의 세율인하 및 임시지출 증가로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단기영향은 일부 완화될 전망
- (유로지역) 산업 생산의 약화, 지역내 무역의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심리 악화 등으로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19년 1%, 2020년 1.2%로 전망
 -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비중을 반영하여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
- (영국) 강한 노동시장이 가계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과 유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둔화는 기업심리, 투자 및 수출 전망에 악영향을 주어 경제성장률은 '19년과 '20년 모두 1% 미만으로 전망
- (중국) 산업생산 및 수익 약화, 대외무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19년 6.2%, '20년 6.0%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지속적인 재정책확장과 낮은 물가상승률이 수요를 뒷받침하지만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은 급격히 하락하여 경제성장률은 '19년, '20년 모두 2.6%로 전망

〈표 I-4〉 OECD의 주요국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미 국	1.6	2.2	2.9	2.7→2.6	2.1→2.2
일 본	1.0	1.7	0.9	1.0→0.8	0.7→0.7
영 국	1.8	1.7	1.3	1.4→0.8	1.1→0.9
프랑스	1.1	2.3	1.6	1.6→1.3	1.5→1.3
독 일	2.2	2.5	1.6	1.6→0.7	1.4→1.1
중 국	6.7	6.9	6.6	6.3→6.2	6.0→6.0
한 국	2.9	3.1	2.7	2.8→2.6	2.9→2.6
실업률					
미 국	4.9	4.3	3.9	3.5	3.5
일 본	3.1	2.8	2.4	2.4	2.4
영 국	4.9	4.4	4.1	4.0	4.1
프랑스	10.1	9.4	9.0	8.8	8.6
독 일	4.2	3.8	3.4	3.0	2.7
중 국	-	-	-	-	-
한 국	3.7	3.7	3.9	4.0	4.0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 국 ¹⁾	1.1	1.8	2.1	2.1	2.4
일 본 ²⁾	-0.1	0.5	1.0	1.4	1.9
영 국 ³⁾	0.6	2.7	2.5	2.3	2.1
프랑스 ³⁾	0.3	1.2	2.2	1.8	1.8
독 일 ³⁾	0.4	1.7	1.9	2.2	2.2
중 국 ²⁾	2.1	1.5	2.0	3.0	3.0
한 국 ²⁾	1.0	1.9	1.6	1.9	1.9

주: 1)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2) Consumer price index

3)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Ch.3에서 국가별 표 통합·재구성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3, p.2.

□ EU의 주요국 경제 전망

○ EU 국가⁸⁾

- (독일)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에 1.1%로 둔화되고 2020년에 캘린더 효과(calendar effect)에 힘입어 1.7%로 다소 반등할 전망
 - 세계 무역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수출과 신규 기업 투자 전망은 밝지 않지만 우호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가계 소득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에 힘입어 주택 투자와 민간소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영국) EU-영국 간 교역 관계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2019년과 2020년 GDP 성장률은 모두 1.3%로 예상됨
 - 2018년 가을예산안의 확장적 재정 조치가 2019년 성장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증가세 약세, 대외 수요 증가세 둔화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전망
- (프랑스) 민간 소비는 2019년 1분기에 반등한 후 점차 회복되고 투자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며, 2019년 GDP 성장률은 1.3%, 2020년은 1.5%로 예상됨

○ 비EU 국가⁹⁾

- (미국)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2019년에 2.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점진적인 통화 긴축, 재정 부양책 효과 완화 등으로 2020년 GDP 성장률은 1.9%로 성장세가 완화될 전망
- (일본)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소비세 인상(2019년 10월)에 대응한 선행 수요 등으로 2019년 GDP 성장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계획된 재정건전화로 인한 단기적 변동이 반영되어 2020년은 성장 속도가 둔화될 전망
- (중국) 소비 및 수출 증가세 약화,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이전보다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무역 분쟁의 영향은 확장적 정책으로 일부 상쇄될 전망

8)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9(Interim)*, 2019,2.

9)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표 I-5〉 EU의 국가별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전망 시점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독일	2018년 11월 전망	1.7	1.8	1.7	1.8	1.9	1.6	3.5	3.2	3.0
	2019년 2월 전망	1.5	1.1	1.7	1.9	1.4	1.5	-	-	-
영국	2018년 11월 전망	1.3	1.2	1.2	2.6	2.0	1.9	4.3	4.5	4.7
	2019년 2월 전망	1.4	1.3	1.3	2.5	1.8	2.0	-	-	-
프랑스	2018년 11월 전망	1.7	1.6	1.6	2.1	1.7	1.6	9.0	8.8	8.4
	2019년 2월 전망	1.5	1.3	1.5	2.1	1.4	1.7	-	-	-
미국	2018년 11월 전망	2.9	2.6	1.9	2.5	2.4	2.2	3.9	3.5	3.5
	2019년 2월 전망	-	-	-	-	-	-	-	-	-
일본	2018년 11월 전망	1.1	1.0	0.5	0.8	1.0	1.3	2.7	2.6	2.5
	2019년 2월 전망	-	-	-	-	-	-	-	-	-
중국	2018년 11월 전망	6.6	6.2	5.9	1.8	2.0	-	-	-	-
	2019년 2월 전망	-	-	-	-	-	-	-	-	-

주: EU의 겨울 중간 경제전망(2019년 2월 전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만 발표하며 미국, 일본, 중국의 구체적인 경제 전망치를 포함하지 않음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9(Interim)*, 2019.2.

2 세계 재정 전망

가. 세계 재정에 대한 전반적 전망

□ IMF 전망¹⁰⁾

- (재정수지) 2019년 선진국의 GDP 대비 평균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5%p 악화된 -3%, 2020년은 -2.8%로 전망¹¹⁾
 - 신흥국 및 중위소득 국가의 2019년 GDP 대비 평균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0.1%p 악화된 -4.0%로 전망되고, 2020년 역시 -4.0%로 전망됨
- (채무비율) GDP 대비 일반정부 순채무의 경우 선진국은 2019년 73.8%(전년 대비 1.6%p 증가), 2020년 73.5%로 전망되고, 신흥국 및 중위소득 국가는 2019년 38.9%(전년 대비 0.1%p 감소), 2020년 39.9%로 전망
 -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는 전년 대비 1.6%p 감소하여 2019년 103.6%, 2020년 103.3%로 전망됨
 - 신흥국 및 중위소득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채무는 전년에 비해 2.1%p 증가한 52.2%로 전망되고, 2020년의 경우 53.7%로 증가할 전망

□ OECD 전망¹²⁾

- (재정수지)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19년 3.1%, '20년 3.0%로 전망

〈표 I-6〉 OECD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11~18평균	2017	2018	2019	2020
재정수지	-4.1	-2.3	-2.9	-3.1	-3.0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10)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8

11) General Government Cyclically Adjusted Balance 기준

12)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 (EU 전망¹³⁾) 2019년 유로지역의 재정정책 기조¹⁴⁾는 다소 확장적으로 변화할 전망
 - (재정수지) 유로지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¹⁵⁾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해왔으나 2019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 유로지역의 2020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0.7%로 2019년(0.8%)에 비해 다소 감소할 전망
 - 한편 EU 회원국 중 약 절반이 전망기간 동안 재정흑자를 유지하지만 일부 회원국은 상당한 재정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19년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루마니아가 3%를 상회(2020년은 4%를 초과)하고, 이탈리아도 3%에 가까워질 전망이며(2019년은 3%를 초과), 스페인 및 프랑스도 2018년과 2019년에 2%을 넘을 것으로 보임
 - (정부채무)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GDP 대비 채무비율은 2014년 이후 감소해왔으며 2019년(84.9%)과 2020년(82.8%)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
 - 2020년에 GDP 대비 채무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키프로스임

〈표 I-7〉 EU의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구분	재정수지			총채무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유로지역	-0.6	-0.8	-0.7	86.9	84.9	82.8
EU27	-0.6	-0.8	-0.6	80.6	78.6	76.7
EU28	-0.7	-0.8	-0.7	81.4	79.5	77.6

주: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재정수지 기준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13)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14) 구조적 재정수지의 변동으로 측정

15) headline budget balance 기준

나. 주요 국가별 재정 전망

□ IMF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⁶⁾

- (미국) 2019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5.6%로 전년에 비해 -1.6%p 악화될 전망이며, 2020년은 -5.5%로 전망됨
 - GDP 대비 순채무는 2019년 77.9%로 전망되고(전년 대비 3.2%p 감소), 2020년의 경우 79%로 전망됨
- (유로지역) 2019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망되고, 2020년은 -0.9%로 전망됨
 - 2019년 GDP 대비 순채무는 전년 70.3%에 비해 2.6%p 개선된 67.7%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65.9%로 전망됨
- (일본) 2019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2.8%로 전년에 비해 0.4%p 개선될 전망이며, 2020년은 -2.1%로 전망됨
 - GDP 대비 순채무는 2019년 154.8%(전년 120.7%)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154.2%로 전망됨
- (한국) 2019년 경기조정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로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1.1%로 전망됨
 - 2019년 GDP 대비 순채무는 전년 5.1%에 비해 7.2%p 악화된 12.3%로 전망되고, 2020년에는 13%로 전망됨

□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⁷⁾

- (미국) 2017년부터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으며 2019년에도 약하게 재정책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적지는 '19년 6.9%, '20년 7.1%로 확대될 전망
- (일본) 재정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상세한 재정건전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적지는 '19년 3.0%, '20년 2.6%로 전망

16)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18

17)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8 No.9]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 (영국) 2019년 재정충격이 예상되는데, 브렉시트 협상의 결과로 수요가 크게 약해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GDP 대비 재정적자는 '19년 1.6%, '20년 1.3%로 전망
- (프랑스) 2019년 세제개혁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19년 2.7%, '20년 7%로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독일) 인프라, 교육 주택 및 디지털 기술 분야의 임시적 감세와 지출증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년 1.1%, '20년 1.0%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중국) 무역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져 재정적자는 GDP 대비 '19년 3.3%, '20년 3.5%로 전망
- (한국)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단기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년 2.1%, '20년 1.6%로 전망

〈표 I-8〉 OECD의 주요국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정수지					
미 국	-5.4	-4.3	-6.6	-6.9	-7.1
일 본	-3.4	-3.7	-3.2	-3.0	-2.6
영 국	-2.9	-1.9	-1.3	-1.6	-1.3
프랑스	-3.6	-2.7	-2.7	-2.9	-1.7
독 일	0.9	1.0	1.6	1.1	1.0
중 국	-3.0	-3.1	-3.1	-3.3	-3.5
한 국	2.4	2.8	2.7	2.1	1.6
국가채무					
미 국	106.6	105.1	106.8	109.9	113.3
일 본	222.3	224.2	226.4	227.9	227.6
영 국	119.5	117.0	115.6	114.6	113.6
프랑스	125.6	124.3	125.0	125.5	124.7
독 일	76.1	71.4	68.1	65.8	63.7
중 국 ¹⁾	-	-	-	-	-
한 국	45.1	44.5	43.3	43.3	43.8

주: 1) 중국의 국가채무 자료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공하지 않음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2018의 Ch.3에서 국가별 표 통합·재구성

□ EU의 주요국 재정 전망¹⁸⁾

○ EU 국가

- (독일) 연정 합의(2018년 3월)의 조치들이 발효됨에 따라 2018년(1.6%) 정점을 기록했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가 2019년(1.2%)에는 하락할 전망이며, GDP 대비 정부 채무는 2019년 약 57%, 2020년 약 54%까지 계속 감소할 전망
* 개인소득세 감면, 가족 수당 확대로 정부 수입이 감소하고 연금 및 안보 관련 추가 지출로 정부 지출이 증가할 전망
- (영국) FY2019-20~FY2020-21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1.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FY2019-20 83.7%에서 FY2020-21 82.0%로 하락할 전망¹⁹⁾
- (프랑스)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²⁰⁾)를 사회보장 기여금 인하로 전환함에 따라 2019년에 GDP 대비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2.8%까지 증가한 후 2020년에는 1.7%로 감소할 전망

〈표 I-9〉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일반정부 기준)

구분	재정수지			총채무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독일	1.6	1.2	1.1	60.1	56.7	53.7
영국	-1.3	-1.0	-1.0	86.0	84.5	82.6
프랑스	-2.6	-2.8	-1.7	98.7	98.5	97.2
미국	-5.8	-6.0	-6.0	105.8	107.3	109.6
일본	-3.3	-3.1	-2.8	236.2	235.2	234.5

주: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재정수지 기준

출처: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18) EU,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18*, 2018.11.

19) 회계연도 기준의 전망치이므로 '〈표 I-9〉 EU의 국가별 재정 전망'의 전망치와 차이가 있음

20) cré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 비EU 국가
 - (미국) 세수 감소 등 경기부양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18년 5.8%, 2019년 6%로 증가할 전망
 - 의회가 재정 절벽 방지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다면 2020년에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에서 매우 긴축적으로 바뀔 수 있음
 - (일본) 경제활동 회복세와 2019년에 계획된 소비세율 인상에 힘입어 전망기간 동안 재정 성과는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 정책

가. 통화정책

□ IMF의 통화정책 권고²¹⁾

- 통화정책 권고사항은 2018년 10월 논의와 대체로 비슷함
 - 선진국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접근이 필요
 - 신흥개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에서 유지시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함

□ OECD의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 권고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일시중단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여 경제 전망을 개선해야 함²²⁾
- (신흥국)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단과 유가하락은 단기 리스크를 감소시켰으나, 세계 무역의 악화, 금융안정 위협 등 근본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국가별 정책 요구 사항은 다를 수 있음
 - (미국) 단기간 강한 성장과 재정완화 이후 낮은 실업률에 의한 중기적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 정상화는 계획대로 지속될 필요
 - (일본) 2%대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전망
 - (유로지역) 추가적 통화정책 지원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 (중국) 중국은 수요약세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며 높은 기업 부채와 중기적 디레버리징 과제를 고려해 신중한 목표 설정이 필요
 - (한국) 낮은 물가상승률과 금융리스크를 고려하여 통화정책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8

22)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

나. 재정정책

□ IMF의 재정정책 권고

- 중기 성장 전망을 높이고 경제적 포용을 강화해야 할 것임. 무역 협력, 금융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함²³⁾
 - (선진국)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참여 제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재정 완충 여력 보강 필요
 - (신흥·개도국) 거시건전성 체계 강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 운용
- 하방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구축하며, 통화정책의 국가별 경기상황에 따른 운용, 재정 여력 확충,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함²⁴⁾
 - (국제 협력) 구조적 변화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국제 협력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함
 - (구조 개혁)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한 시기에 정책 입안자는 중기 소득을 늘리는 개혁(기술 혁신 장려, 노동 참가율 개선 등) 시행을 목표로 해야 함
 - (금융여건 긴축에 대비) 초과 생산능력이 줄어들고 하방위험이 높아졌으므로 재정여력을 구축하고, 금융시장 여건의 갑작스러운 긴축에 대비하여 회복력을 강화해야 함

□ OECD의 재정정책 권고²⁵⁾

- 2018년 재정완화 노력이 확산되면서 OECD 국가의 재정정책은 2년 동안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OECD 국가(미국, 한국, 독일, 이탈리아 제외)의 경기여건 개선과 낮은 이자 비용은 재정수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재정우선순위는 거시경제 여건과 불균형을 반영하여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uary 2019

24)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8

25)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18

-
- (미국) 견고한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속된 재정부양책은 미래 경기침체 시 정책대응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일본) 2020년 중반까지 1차 균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조치가 필요
 - (독일) 견실한 공공채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및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행할 전망
 - (이탈리아) 공공채무가 높고 생산성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가부도 위험(sovereign risk)을 유지 혹은 증가시켜 성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 존재
 - (한국) 가계 소득 및 지출을 높이기 위해 상당 규모의 재정완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²⁶⁾

26)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2019

II. 주요국 재정운용 방향 및 재정지표

1 미국(FY2019 : 2018.10 ~ 2019.9)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19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8,330억달러) 추정치 대비 18.1% 증가한 9,840억달러(GDP 대비 4.7%) 전망
- (국가채무)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FY2019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5조 7,900억달러, GDP 대비 78.8%) 추정치 대비 6.9% 증가한 16조 8,720억달러(GDP 대비 80.3%) 전망

〈표 II-1〉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8
명목 규모	18,037	18,624	19,372	20,262	21,263	22,345	23,482	...	32,991
실질 GDP (2019 예산안 전망치)	2.6	1.6	2.2	3.0	3.2	3.1	3.0	...	2.8
실업률 ¹⁾	5.3	4.9	4.4	3.9	3.7	3.8	3.9	...	4.8
CPI-U ²⁾	0.1	1.3	2.1	2.1	2.0	2.2	2.3	...	2.3

* 0.05 percent or less

주: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Analytical Perspectives」 Table 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예산기조

- ① 美 국민의 안전과 보안 ② 더욱 튼튼하고 건실한 미국 경제 ③ 근면 성실한 美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④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9 세입은 전년 (추정치) 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GDP 대비 16.3%) 전망
- (지출) FY2019 총재정지출은 전년 (추정치) 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 달러(GDP 대비 21%)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인프라 투자) 1조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FY2028) 2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재정 투입 계획
- (국경안보 강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총 180억달러를 투입 계획
- (약물 남용 및 마약 과다 복용 확산 대응) 약물 통제(drug control)를 위해 총 300억달러 투입 계획

2 일본(FY2019: 2019.4 ~ 2020.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9년 10월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한 임시특별조치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2019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9.4% 감소한 8.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9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896.7조엔(GDP 대비 158.4%)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표 II-2〉 일본 경제전망 및 재정 전망

(단위: %, 조엔)

구분	FY2017	FY2018	FY2019
실질 GDP성장률	1.9	0.9	1.3
물가상승률 ¹⁾	0.7	1.0	1.1
기초재정수지	-10.8	-10.4	-8.4
국채잔고(GDP 대비 %)	155.9	159.3	158.4
국채의존도	35.3	34.5	32.1

주: 1)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율을 의미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 예산기조

- 「신경제·재정재생계획」상의 세출 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지원책들과 방재·감재(減災)·국토 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 및 사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에 역점을 둠
 - － (임시특별조치) 소비세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총 2조 280억엔 투입)
 -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에 따라 긴급 대책 160개 항목을 2020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 － (사회보장 강화)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세증액분을 활용하여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사회보장에 충실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91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2조 4,95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9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91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9조 9,359억엔을 편성
 - － (임시특별조치) 소비세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준화하기 위한 임시특별조치로 2조 280억엔을 추가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Society 5.0을 위한 전파이용 니즈 확대에 대응, 관광 콘텐츠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모노즈쿠리’²⁷⁾ 보조금을 예산으로 계상, 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 및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가속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
 - － (전파이용 니즈 확대 대응) 고도무선시스템을 지원하는 전파이용기반 정비, 전파의 유효 활용을 위한 이용상황조사 및 주파수공용기술의 정립 등을 실시
 - － (관광) 얼굴인증게이트를 이용한 출입국 수속의 고도화, 무료 와이파이와 다언어안내 등 지원체제 정비, 문화재나 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충
- (재정건전화) 구조의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임시재정대책채(債) 발행량 대폭 감축 및 세출 개혁 노력 지속

3 독일(FY2019 : 2019.1 ~ 2019.1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8년 12월 연방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1.6%, 실업률 4.8%,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로 각각 집계됨

〈표 II-3〉 거시 전망 주요수치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2.5	1.5	1.6	1.6
실업률	5.7	5.2	4.8	4.5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1.9	1.4	1.8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8. 12. 14.

27)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품질 제품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중소기업의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표 II-4〉 FY2019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18	2019	중기재정계획		
			2020	2021	2022
재정지출	3,436	3,568	3,632	3,693	3,755
전년 대비 증감률(%)	3.9	3.8	1.8	1.7	1.7
재정수입	3,436	3,568	3,632	3,693	3,755
조세수입	3,213	3,330	3,338	3,468	3,597
신규차입	-	-	-	-	-
투자	374	379	379	379	379
국가채무(GDP 대비 %)	61	58	55.75	54	52

자료: 연방 재무부,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 7.

- (재정 전망) '19년 7월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기록적인 고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이 지속될 전망

□ 예산기조

- (인프라투자)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지방투자기금, 건설지원 기금 등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²⁸⁾에 24억유로를 투자할 전망
- (교육·연구) 교육, 과학, 연구분야 지원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2년까지 총 95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내치) 연방경찰과 관세청 인력 강화를 위해 내무부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유로 증액할 계획
- (국방·개발협력)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0억유로 증액될 예정이며, 국제경제개발협력 분야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한 97억유로(전년 대비 10억유로증가)로 집계
- (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20년, '21년 각각 1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자녀수당(Baukindergeld)²⁹⁾을 통한 자가 부동산 취득을 촉진할 계획

28) 특별기금(Sondervermögen):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설된 회계로 기본적으로는 각급 정부의 예산과는 별도의 회계를 가지며, 공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특별기금의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원칙법에 규정된 연방과 주의 예산에 관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됨

□ 예산안 내용

- (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18년 3,436억유로에서 2022년 3,755억유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다이며, 교통인프라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기반투자, 교육·연구, 사회적 평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 (교육연구부) 연방교육지원법 개혁에 따라 청년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고등교육협약에 대한 지원계획
 - － (국방부) 군수장비 유지보수 및 국방인원 보충과 NATO 협의에 의한 독일연방군의 해외공관 지원 강화
 - － (경제협력개발부) 인도주의적 구호, 위기방지 지출 등 공적개발원조의 지속적인 지원
 - － (환경부)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지원
 - － (에너지경제부) 혁신 및 성장촉진 연구, 중소기업 디지털 활성화 지원
 - －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22년까지 계획된 간선도로망 건설, 대기질 개선프로그램을 지원
 - － (노동사회부) 구직자 지원, 실업수당 지출증가
 -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녀양육비 지원, 주간 탁아소 등 보육시설 질 향상과 전일제학교 지원
 - － (내무부) 연방경찰 및 연방형사청에 지원

□ 주요정책

- (교육·연구) 우수대학 육성정책, 고등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
-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디지털화 지원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
- (재정건전화) 2018년 독일안정화 프로그램에서는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growth friendly consolidation) 정책으로 교육·연구, 인프라에 집중 투자
-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정책) '19년 연방정부는 58.7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29) 주택자녀수당은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1명당 연 1,200유로를 10년간 지급

4 프랑스 (FY2019: 2019.1 ~ 2019.12)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유로지역의 지속적 경기회복 및 글로벌 수요의 개선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 2018년과 2019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총재정수지 적자는 2019년 2.8%, 특별조치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1.9%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적자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에 다소 안정화되어 2018년보다 0.1%p 낮은 98.6%를 기록하고, 이후 5년 동안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여 국가채무는 하향 추세를 이어가 2022년 92.7%를 기록할 전망

〈표 II-5〉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실질 GDP성장률(%)	1.8	1.7	1.7
물가상승률(%)	1.0	1.8	1.4
구조적 재정수지	-2.3	-2.2	-2.0
총재정수지	-2.7	-2.6	-2.8
국가채무	98.5	98.7	98.6

자료: PLF 2019

□ 예산기조

-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 ② 자국민 보호 ③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함
 -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기 개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실업자를 모두 지원하여 구매력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자국민 보호) 빈곤 개선 정책에 투자하고, 국방 및 정의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택 개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 재정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9%(149억유로) 감소한 2,914억유로로 전망
 - 2019년 조세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8%(140억유로) 감소한 2,789억유로로 전망
- (세출) 2019년 재정지출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1%(40억유로) 증가한 3,908억유로로 전망
 - 마크롱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인하는 이번 예산안은 주권을 강조하여 국방(17억 유로), 치안(3억유로), 정의(3억유로), 그리고 이민 및 통합정책(2억유로)의 미션 지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취약 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구매력을 높여 경기 선순환이 작용하도록 함
 -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기업활동 비용 절감 등의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 (복지지출 관리) 2019년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재정수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노령연대기금(FSV)을 포함한 총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9년 사회보장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2.0%로, 2018년도의 2.3%보다 조금 낮아질 전망

5 영국(FY2019-20: 2019.4 ~ 2020.3)³⁰⁾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9년 경제성장률은 1.2%로 독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은 1.4%, 2021~2023년은 모두 1.6%로 전망
- (재정 전망)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09-10 이래 5분의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FY2023-24까지 GDP 대비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FY2016-17에 정점(GDP 대비 85.1%)을 찍은 공공부문 순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23-24에 7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II-6〉 영국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 %p,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1.8	1.4	1.2	1.4	1.6	1.6	1.6
10월 전망 대비 변화분	0.1	0.1	-0.4	0.0	0.1	0.1	0.0
실업률(LFS)	4.9	4.4	4.3	4.4	4.6	4.6	4.6
10월 전망 대비 변화분	0.0	-0.1	0.0	-0.1	-0.1	-0.1	0.0
공공부문 순차입	2.0	1.2	1.3	0.8	0.7	0.6	0.5
공공부문 순채무	84.7	83.3	82.2	79.0	74.9	74.0	73.0

출처: 재정지출분석센터(2019), 〈표 8〉 및 〈표 9〉 재구성

30) 영국의 경우, 2018년 10월 OBR의 경제-재정 전망과 함께 가을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2019년 3월 경제-재정 전망이 수정되면서 Spring Statement를 통해 예산안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음. 따라서 '경제 및 재정 전망'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그 외 '예산기준', '예산안 내용', '주요 재정정책'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됨. 또한 관련 내용은 다음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음.(Spring Statement를 통해 업데이트된 예산안 관련 내용은 V장 〈참고〉에 정리함.) 재정지출분석센터, 「VI. 영국」, 『재정동향』, 제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3., pp.22-23; 박한준·강희우·한혜란, 『주요국 예산안 - 영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8.12., 〈요약〉

□ 예산기조

- Hammond 재무부 장관은 ‘긴축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힘
 - 영국이 EU를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경제 구축,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공공서비스 및 생활수준 제고 관련 조세·재정 정책 제시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9-20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225억파운드 증가한 8,098억파운드(GDP 대비 36.8%)
- (지출)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288억파운드 증가한 8,416억파운드(GDP 대비 38.3%)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기금 증액, 연구개발 관련 자금 지원, 도심 상가(High Street)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감면 등 추진
- (복지 및 공공서비스) 향후 5년간 NHS 지원 예산 증액, 통합급여 관련 지원 확대, 성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 재정 추가 지원 등
- (브렉시트 대응) EU 탈퇴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파운드(FY2019-20)를 편성
- (재정건전화) 2019년에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발표할 예정

6 캐나다(FY2019-20: 2019.4 ~ 2020.3)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9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1.8%, 3.4%,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각각 5.7%, 1.9%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19-20 재정적지는 198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9-20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는 30.7% 수준으로 전망

〈표 II-7〉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3
실질 GDP 성장률	1.9	1.8	1.6	1.7	1.9	1.9	1.8
명목 GDP 성장률	3.8	3.4	3.5	3.7	3.9	4.0	3.7
실업률	5.8	5.7	5.9	6.0	6.0	5.9	5.9
CPI 상승률	2.3	1.9	2.0	1.9	2.0	2.0	2.0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1 일부 발췌

〈표 II-8〉 캐나다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수입	311.2	332.2	338.8	351.4	366.7	380.7	395.5
총지출	330.2	347.1	355.6	368.2	378.4	389.8	402.2
재정수지	-19.0	-14.9	-19.8	-19.7	-14.8	-12.1	-9.8
연방채무	671.3	685.6	705.4	725.1	739.8	751.9	761.7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4 일부 발췌

□ FY2019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8-19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9-20 총세입은 3,38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7%),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출) FY2018-19 전년 대비 4.9% 증가한 3,235억캐나다달러, FY2019-20 3,29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 FY2019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캐나다 경제성장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중점 투자할 계획
 -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변화(Delivering Real Change)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투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증가,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을 통해 이뤄지며 정부의 이전지출을 기반으로 함
 - (발전) 캐나다 플랜에 대한 투자(The Investing in Canada Plan) 프로그램의 개선 및 신규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조화) 원주민과 화해 및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과의 격차 해소, 원주민 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변화) 건강과 복지, 문화 및 예술을 위한 지원, 캐나다 재향군인 및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공정한 세금시스템에 중점 투자

□ 재정건전화

- FY2019 예산안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나 2018년 FES의 전망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향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18-19 0.7%에서 FY2023-24 0.4%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7 호주(FY2018-19: 2018.7 ~ 2019.6)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광산 투자 호황에 이어 비광산 부문 투자 개선으로 실업률 감소 및 성장 강화를 전망
- (재정 전망) FY2018-19 예산수지³¹⁾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되며, FY2021-22에 166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자 전환 전망

〈표 II-9〉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단위: %)

구분	실적(Outcomes)	추정(Forecast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실질 GDP 성장률 ¹⁾	2.10	2.75	3.00	3.00
고용률 증가율 ²⁾	1.90	2.75	1.50	1.50
실업률 ³⁾	5.60	5.50	5.25	5.25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²⁾	1.90	2.00	2.25	2.50
명목 GDP 성장률 ¹⁾	5.90	4.25	3.75	4.75

주: 1)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2) 고용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평균 증가율

3)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출처: Budget 2018-19 Overview, The Treasury, 2018. 5.

31) 예산수지는 현금주의 기준(Future Fund 예상수익금 제외)이며, 재정수지는 발생주의 기준. 호주 예산은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두 가지 회계가 혼합되어 사용되며, 예산편성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는 현금주의를 이용하는 반면 세출, 예산집행 및 보고 등에는 발생주의 적용.

〈표 II-10〉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재정수입(Revenue) ¹⁾	456.2	486.1	512.8	537.9	568.2
GDP 대비 비율	(24.9)	(25.5)	(25.7)	(25.8)	(26.1)
재정지출(Expenses) ¹⁾	468.8	488.6	504.2	518.2	540.8
GDP 대비 비율	(25.5)	(25.7)	(25.3)	(24.9)	(24.9)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13.4	-7.4	3.7	12.9	19.4
GDP 대비 비율	(-0.7)	(-0.4)	(0.2)	(0.6)	(0.9)
예산수지 (Underlying Cash Balance) ³⁾	-18.2	-14.5	2.2	11.0	16.6
GDP 대비 비율	(-1.0)	(-0.8)	(0.1)	(0.5)	(0.8)
순채무(Net debt) ¹⁾	341.0	349.9	344.0	334.3	319.3
GDP 대비 비율	(18.6)	(18.4)	(17.3)	(16.1)	(14.7)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 5.

□ 예산기조: FY2018-19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 ① 개인소득세 감면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지원 ③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 ④ 국민 안보 보장 ⑤ 정부 지출 및 세금 시스템 관리에 초점

□ 예산안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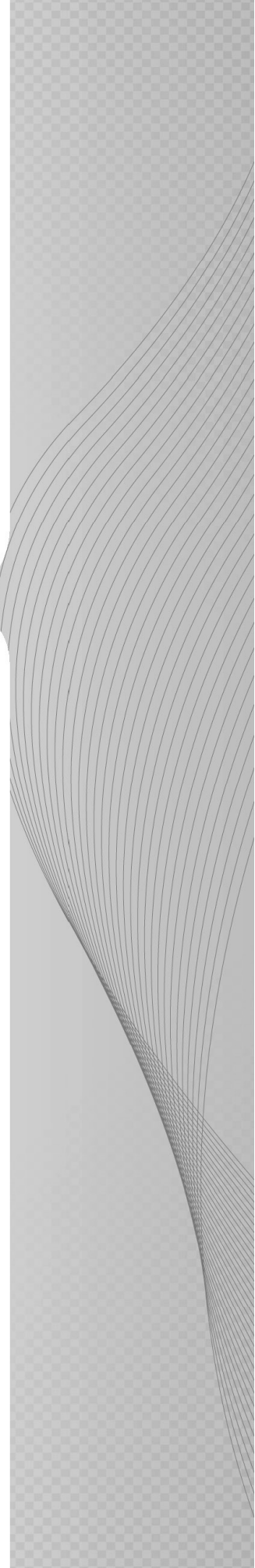
- (수입) FY2018-19 재정수입은 FY2017-18 전망 대비 6.6% 증가한 4,861억호주달러 (GDP 대비 23.4%)로 편성
- (지출) FY2018-19 재정지출은 FY2017-18 전망 대비 4.2% 증가한 4,886억호주달러 (GDP 대비 25.7%)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인프라투자, 기업지원, 농업·관광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지역 불균형 완화 기대
- (복지) 의료·복지혜택 확대 및 초·중·고등 교육 지원
- (안전) 국가 안전 보장 강화 및 국가 및 지역 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 (재정건전화) FY2018-19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30년 평균수준을 밑도는 GDP 대비 24.8% 규모로 감소할 전망
 - 정부지출 실질증가율 연평균 1.9% 유지를 목표로 지출 통제
 - 총 18억 6,700만호주달러 절감 계획

제 2 부

각국 예산안 분석



I. 미 국

□ FY2019: 2018년 10월 ~ 2019년 9월

□ 출처:

-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19,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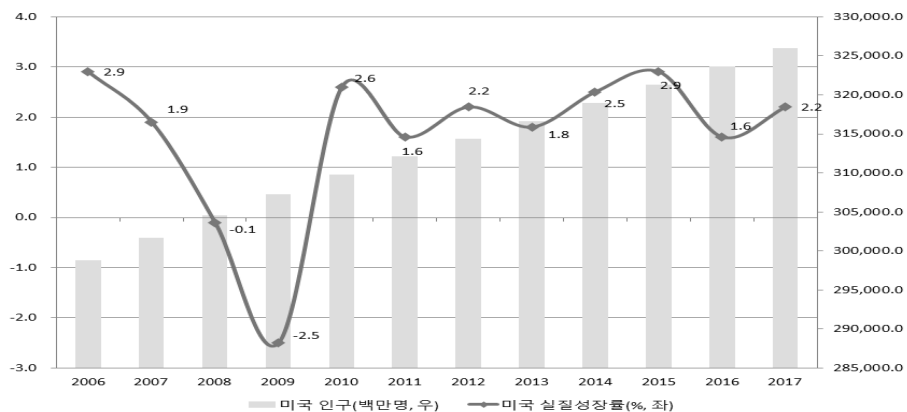
□ 환율: 1USD = 약 1,100.30원(2018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7년 경상GDP 19조 4,854억달러(우리나라의 약 12.7배 수준)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17년 기준 27.1%(우리나라는 80.8%)

□ 인구: 3억 2,598만명(2017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요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19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8,330억달러) 추정치 대비 18.1% 증가한 9,840억달러(GDP 대비 4.7%) 전망
- (국가채무)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FY2019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5조 7,900억달러, GDP 대비 78.8%) 추정치 대비 6.9% 증가한 16조 8,720억달러(GDP 대비 80.3%) 전망

□ 예산기조

- ① 美 국민의 안전과 보안 ② 더욱 튼튼하고 견실한 미국 경제 ③ 근면 성실한 美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④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9 세입은 전년(추정치) 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 (GDP 대비 16.3%) 전망
- (지출) FY2019 총재정지출은 전년(추정치) 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달러(GDP 대비 21%)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인프라 투자
- 국경안보(border security) 강화
- 약물 남용(drug abuse) 및 마약 과다 복용 확산(opioid overdose epidemic) 대응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³²⁾

□ (경제성장률) '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중/장기 경제는 약 3%대로 전망)

* CBO가 전년도 중순(2017.6.29.)에 발표한 「'17~'27년 예산·경제 수정 전망³³⁾」 보고서는 '18년 경제성장률 2.2%, '19~'20년(평균)은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후 '21~'27년(평균)에 1.9% 유지

- 정부의 2018년 경제전망은 CBO와 Blue Chip Survey³⁴⁾ 등 다른 주요 전망에 비해 0.6~0.8%p 정도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
- 명목경제 규모(nominal GDP level)는 2018년에 20조달러대에 진입하고, 2026년에 30조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표 I-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8
실질 GDP ¹⁾	2.2	2.4	2.6	1.5	정부	2.2	3.0	3.2	3.1	3.0	...	2.8
					CBO	2.1	2.2	1.7	1.4	1.7	...	N/A
					Blue Chip	2.2	2.4	2.1	2.1	2.0	...	2.1

주: 1) 전년 대비 변화율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32) 경제 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33)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CBO, 2017.1 (2017.6.29.)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2801-june2017outlook.pdf>

34)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한 수치

□ (노동시장) 2019년 실업률은 약 3.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4.8%로 전망

○ 2015년에 5.0%였던 실업률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 4.7%, 2017년에 4.4%, 2018년 1월에 4.1%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8년에 4.8% 전망

○ 2017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16년 62.8% 수준에서 안정(stabilized)하였으나,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참가율: (2015년) 62.7% → (2016년) 62.8%

□ (물가) 2018년 물가 상승률은 1.9%, 2019년에는 2.0%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전망

○ (소비) 소비는 2017년 4분기에 2.8% 증가하였고, 경제성장(overall growth)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소비는 다양한 범주에서 증가)

* 소비증가율: (자동차 및 부품, motor vehicles and parts) 4.5% / (가구 및 가사용품, furnishings and household equipment) 9.5% / (오락용품 등, recreational goods and vehicles) 9.3% / (식·음료, food and beverages) 3.0%

〈표 I-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8
명목 규모	18,037	18,624	19,372	20,262	21,263	22,345	23,482	...	32,991
실질 GDP (2019 예산안 전망치)	2.6	1.6	2.2	3.0	3.2	3.1	3.0	...	2.8
실질 GDP (2018 예산안 전망치)			2.3	2.4	2.7	2.9	3.0	...	3.0
실업률 ¹⁾	5.3	4.9	4.4	3.9	3.7	3.8	3.9	...	4.8
CPI-U ²⁾	0.1	1.3	2.1	2.1	2.0	2.2	2.3	...	2.3
국채 91일물 ³⁾	*	0.3	0.9	1.5	2.3	2.9	3.0	...	2.9
국채 10년물 ¹⁾	2.1	1.8	2.3	2.6	3.1	3.4	3.6	...	3.6

* 0.05 percent or less

주: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Analytical Perspectives」 Table 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나. 재정 전망³⁵⁾

- (재정수입) FY2019 세입은 전년 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GDP 대비 16.3%) 전망
- (재정지출) FY2019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달러 (GDP 대비 21%) 편성(순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17.1% 증가한 3,630억달러)
 - (재량지출) FY2019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 3,040억달러 계획
 - 국방분야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6,780억달러, 비국방분야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6,26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FY2019 의무지출(순이자지출 포함)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조 7,390억달러 전망
 - (기타 의무지출)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를 위한 준비금(allowance)에 450억달러 배정
- (재정수지) FY2019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8,330억달러) 대비 18.1% 증가한 9,840억달러 (GDP 대비 4.7%) 전망
 -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총누적 재정적자는 7조달러를 상회할 전망
 - FY2019에 트럼프 집권 후 가장 높은 재정적자(GDP 대비 4.7%)를 기록 한 후, FY2020부터 점차 감소하여 향후 10년(~FY2028) 안에 1.4%로 하락할 전망
- (국가채무) FY2019 연방채무³⁶⁾(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5조 7,900억달러, GDP 대비 78.8%) 대비 6.9% 증가한 16조 8,720억달러(GDP 대비 80.3%) 전망
 - * FY2019 연방총채무³⁷⁾(22조 7,030억달러)중 정부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 소유채무는 5조 8,310억달러

35) 2018회계연도 기간은 2017.10~2018.9이며, FY2019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를 기준으로 작성

36)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37) 연방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 부문 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 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 FY2018 GDP 대비 연방채무³⁸⁾는 전년(76.5%) 대비 2.3%p 증가한 78.8%를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다가 FY2023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
 - 향후 10년(~FY2028) 안에 GDP 대비 72.6%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I-3〉 미국 재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08 ¹⁾	2009 ²⁾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2027	2028	2019-2028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2,524	2,105	3,316	3,340	3,422	3,609	3,838	4,089	...	5,506	5,818	45,520
지출	2,983	3,518	3,982	4,173	4,407	4,596	4,754	4,941	...	5,955	6,181	52,615
재정적자	459	1,414	665	833	984	987	916	852	...	450	363	7,095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5,803	7,544	14,665	15,790	16,872	17,947	18,950	19,946	...	23,194	23,684	-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7.7	14.8	17.3	16.7	16.3	16.4	16.5	16.8	...	17.7	17.8	17.1
지출	21.0	24.7	20.8	21.0	21.0	20.8	20.5	20.3	...	19.2	19.0	20.0
재정적자	3.2	9.9	3.5	4.4	4.7	4.5	3.9	3.5	...	1.4	1.1	2.8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40.8	53.0	76.5	78.8	80.3	81.3	81.7	81.9	...	74.6	72.6	-

주: 1) 금융위기 발생 당해 연도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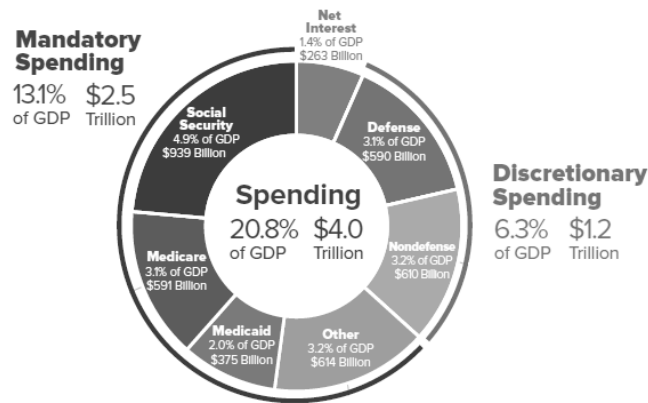
2) 금융위기 발생 직후 연도 수치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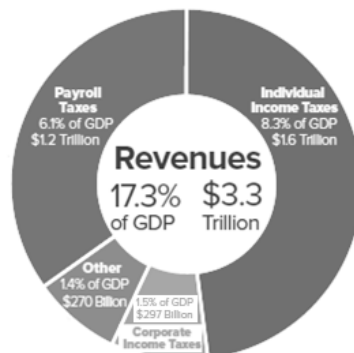
38) 정부 내부 거래 제외

(참고) 2017년 연방재정 CBO 인포그래픽 자료

- CBO가 발표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부문을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GDP 대비 규모는 각각 13.1%(2.5조달러), 6.3%(1.2조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의무지출) 사회보장지출이 GDP 대비 4.9%로 전체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메디케어지출(GDP 대비 3.1%)이 차지하고 있음
 - (재량지출) GDP 대비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는 각각 3.1%, 3.2%를 차지하고 있음



- 2017년 세입부문을, 개인소득세가 GDP 대비 8.3%로 전체 세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급여세¹⁾(Payroll taxes)가 GDP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음 (법인세는 GDP 대비 1.5% 수준)



주: 1)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 병원 보험(Medicare's Hospital Insurance) 등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세입

자료: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3624>, 2018.3

2 예산기조

□ 2018년 2월 12일에 발표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크게 4개의 화두 제시

- ① 美 국민의 안전과 보안
- ② 더욱 튼튼하고 건실한 미국 경제
- ③ 근면 성실한 美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④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4개의 화두를 바탕으로 국경(특히 남서지역 국경) 안보 강화 및 국가안보 증대, 국방재건, 낭비지출 종식, 경제성장 및 기회 확대, 인프라 재건 등에 대한 투자를 언급

- 2019 예산안 서문 (원문) -
(An American Budget - President's Budget FY2019)

“The Budget creates a steady vision inspired by the hardworking spirit of the Nation that will lead us toward prudent spending choices that will promote a safer, more prosperous, and secure America.”

“Economic growth coupled with fiscal restraint is not just the end goal, it is the means by which a vision for a New America can be realized. The pillars of this vision, and thus the Budget, are:

- ①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 ② a stronger, healthier American economy;
- ③ an enhanced quality of life for hardworking Americans; and
- ④ a commitment to a better future.”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9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GDP 대비 16.3%) 전망
 - 올해(FY2018) 재정수입은 FY2017 대비 약 0.7%(240억달러) 증가한 3조 3,400억달러 (GDP 대비 16.7%)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3년에 17%대로 진입 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19-28 기간 동안 GDP 대비 평균 수입비율은 17.1%로 전망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기타 주요 세입의 GDP 대비 비중은 향후 10년간 현재 (FY2018)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 GDP 대비 개인소득세: ('18) 8.3% → ('19) 8.0% → ('20) 8.1% → ('21) 8.3%

〈표 I-4〉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

구분	실적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7	2028	2019- 2028
개인소득세	1,587	1,660	1,688	1,791	1,919	2,053	2,202	2,353	...	2,890	3,070	8.7
법인세	297	218	225	265	273	314	374	417	...	406	413	1.3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¹⁾	1,163	1,169	1,238	1,288	1,362	1,439	1,514	1,596	...	1,864	1,975	-
소비세	84	108	108	112	119	106	109	111	...	121	125	0.4
유산세, 증여세	23	25	17	18	19	21	23	24	...	29	31	0.1
관세	35	40	44	47	48	50	51	52	...	56	58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²⁾	81	72	55	49	53	60	68	73	...	87	92	0.3
기타 수입	48	48	51	47	47	49	50	52	...	56	58	0.2
총재정수입	3,316	3,340	3,422	3,609	3,838	4,089	4,386	4,675	...	5,506	5,818	-
GDP 대비 %	17.3	16.7	16.3	16.4	16.5	16.8	17.1	17.4	...	17.7	17.8	17.1

주: 1)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Medicare payroll taxes, Unemployment insurance, Others

2)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나. 세출³⁹⁾

- FY2019 재정지출은 전년(4조 1,730억달러) 대비 약 4.6% 증가한 4조 4,070억달러(GDP 대비 21%) 계획
 - FY2017 재정지출 실적은 3조 9,815억달러로 GDP 대비 20.8%를 기록
 - 주요 부처 중 가장 많은 지출 규모를 보이는 기관은 국방부, 보훈부⁴⁰⁾, 보건·복지부⁴¹⁾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주요 기능별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⁴²⁾
 - (국방) 전년 대비 7.1% 증가한 6,88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5.6% 전망
 - * 기능별 분류에 따른 국방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16%)의 총지출 대비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7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FY2019 재원배분에서 사회보장지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 대비 0.2% 소폭 증가한 약 5,00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1.3% 전망
 - 소득보장 관련 총지출은 증가하였으나 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분야지출 제외), Housing Assistance(주거지원) 및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 (식품·영양지원) 등의 사업지출은 감소
 - (보건, Health) 전년 대비 0.4% 소폭 증가한 5,942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3.5% 전망
 - 보건관련 연구/교육(health research and training)은 감소하였으나, 건강관리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와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등에 대한 지출규모는 증가

39) 2018회계연도 기간은 2017.10~2018.9이며, FY2019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안 부속서류인 historical table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40)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4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42)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사회보장⁴³⁾)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 52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23.9% 전망
 - FY2018 사회보장지출 추정액은 9,925억달러로 FY2017 실적(9,449억달러) 대비 5.0% 증가
- (메디케어⁴⁴⁾)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10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14.3% 전망
 - 정부는 향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fraud), 남용(abuse) 등을 개선하고, 낭비지출 종식에 대한 재정개혁안을 제시
 - * 자세한 사항은 <4. 주요재정정책 → 라. 주요 재정절감 및 개혁안 참고>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1,006억달러로 총지출 대비 2.3% 전망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기능 관련 총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초중고 및 직업교육, 일반교육 지원(research and general education aids), 훈련/고용(training and employment) 및 기타 노동 서비스 등의 예산은 감소, 대학교육 예산은 증가

<표 I -5> FY2019 예산안 기능별(Function)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7	2018 (a)	2019 (b)	금액 (b-a)	증가율
Defense	598,722	643,266	688,636	45,370	7.1
International Affairs	46,309	47,320	63,312	15,992	33.8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30,394	31,720	32,462	742	2.3
Energy	3,856	3,960	3,223	-737	-18.6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7,896	40,400	38,258	-2,142	-5.3
Agriculture	18,870	26,943	20,513	-6,430	-23.9
Commerce and Housing Credit	-26,834	4,894	-23,423	-28,317	-578.6
Transportation	93,552	94,364	93,983	-381	-0.4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24,907	54,323	70,352	16,029	29.5

43)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44)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제도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7	2018 (a)	2019 (b)	금액 (b-a)	증가율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143,976	98,599	100,613	2,014	2.0
Health	533,129	594,051	594,273	222	0.04
Medicare	597,307	588,373	631,028	42,655	7.2
Income Security	503,484	498,815	499,592	777	0.2
Social Security	944,878	992,533	1,052,073	59,540	6.0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176,543	177,230	197,930	20,700	11.7
Administration of Justice	57,944	69,550	65,216	-4,334	-6.2
General Government	23,896	26,309	29,292	2,983	11.3
Net Interest	262,551	310,313	363,375	53,062	17.1
Others(상계수입 포함)	-89,826	-129,971	-104,115	25,856	19.9
재정지출 (GDP 대비 비율)	3,981,554 (20.8)	4,172,992 (21.0)	4,406,696 (21.0)	243,601	5.6

출처: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주요 항목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재량지출과 법정(의무)지출로 구분되며,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 지출로 나누어짐
- 국방분야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비국방분야는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향후 10년 안에 2018년 추정치 대비 약 31% 정도 하락한 4,36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I-6〉 항목(Category)별 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2026	2027	2028	2019-2028
재량지출 프로그램												
국방	590	634	678	721	730	744	759	...	755	768	783	7,426
비국방	610	636	626	584	549	498	483	...	452	443	436	5,002
소계: (GDP 대비 %)	1,200 (6.3)	1,270 (6.3)	1,304 (6.2)	1,305 (5.9)	1,280 (5.5)	1,242 (5.1)	1,243 (4.9)	...	1,139 (4.1)	1,145 (3.9)	1,151 (3.7)	12,428 (4.8)
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939	987	1,046	1,108	1,173	1,243	1,317	...	1,562	1,652	1,748	13,720
메디케어	591	582	625	656	703	798	824	...	1,024	1,107	1,257	3,605
메디케이드 ¹⁾	375	400	412	483	480	495	512	...	564	579	597	5,19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574	577	567	575	590	626	621	...	664	662	680	6,238
Exchange Subsidies ²⁾³⁾	39	48	45	11	56
인프라 이니셔티브 충당금	-	-	45	11	18	25	31	...	11	4	1	193
소계 (GDP 대비 %)	2,519 (13.1)	2,593 (12.9)	2,739 (13.0)	2,845 (12.9)	2,964 (12.8)	3,187 (13.1)	3,303 (12.9)	...	3,825 (12.9)	4,004 (12.9)	4,283 (13.1)	34,199 (12.9)
순이자 (GDP 대비 %)	263 (1.4)	310 (1.5)	363 (1.7)	447 (2.0)	510 (2.2)	568 (2.3)	619 (2.4)	...	717 (2.4)	740 (2.4)	761 (2.3)	6,070 (2.3)
총재정지출	3,982	4,173	4,407	4,596	4,754	4,996	5,165	...	5,748	5,955	6,263	52,697
GDP 대비 %	20.8	20.8	21.0	20.8	20.5	20.5	20.2	...	19.4	19.2	19.2	20.0

주: 1) Medicaid and Market-based Health Care Grant

2) including Basic Health Program

3)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의료보험 시장을 exchange 또는 marketplace라고 불림 (CMS설명자료)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Proposed Budget by Category (Table S-4 & S-5),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주요 부처(기관)별 2019년 재량지출⁴⁵⁾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

- 해외비상작전(OCO⁴⁶⁾)에 사용되는 890억달러를 포함한 국방부 총예산은 6,860억달러로 2017년⁴⁵⁾ 의회 확정예산(2017 enacted level) 대비 13% 증가
 -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unwavering commitment)를 반영한 EDI⁴⁷⁾(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에 63억달러 배정
 - 미국 및 동맹국들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 3대 전략(해양/육지/상공)의 유지와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 예산에 240억달러 배정
 - 남아시아의 안보와 안정(stability) 확립의 일환으로 이슬람국가 국제 테러단체(ISIS⁴⁸⁾), 알 카에다(Al Qaeda)에 대항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0억 달러 배정

○ 교육부

- 주·지방정부의 초·중·고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한 이번 교육부 예산은 599억달러로 2017년 의회 확정예산 대비 10.5% 감소
 - 이번 예산에서는 초·중·고 전 과정에서 연방재원이 투입되는 중복·비효율적 17개 프로그램(약 44억달러 규모)에 대한 간소화·재정립 계획 포함

○ 보건·복지부

- 마약성 치료제 의약품 위기⁴⁹⁾(opioid epidemic crisis)를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의약품 가격 인하와 오바마 케어의 폐지 및 대체를 표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6,840억 달러로 2017년 의회 확정예산 대비 21% 감소

45) 현재 미국의 2018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의회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번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서의 전년 비교는 2018회계연도가 아닌 2017 회계연도 의회 확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46)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47) EDI: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투력 재건과 러시아의 억압(coercion) 및 침략(aggression)으로부터 협력대응체계 구축(building partner capacity)을 위한 다년도 사업(multi-year program)

48)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하여, 의약품 관련 파트인 메디케어 파트 D의 현대화와 함께 더 많은 일반 의약품이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FDA)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일반의약 생산자들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

* opioid crisis 관련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참고

-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 (DS & USAID⁴⁹)
 - 미국의 전략목표를 지원할 외교 및 개발 사업 등을 위해 258억달러(base funding)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2017년 의회 확정예산 대비 26% 감소한 수준
 - 이스라엘의 방위력 지원을 위해 대외 군사차관⁵⁰) 33억달러 배정
 - 상호 호혜적(reciprocal)이며 공평(fair)한 무역 원칙을 내세우며, 오래된 협정(outdated agreements) 재협상 및 새로운 무역협상 등을 위한 예산 6,300만달러를 무역대표부 (USTR⁵¹)에 배정
- 보훈부(VA⁵²)
 - 보훈부의 재량지출 총예산은 831억달러로 2017년 의회 확정예산 대비 11.7% 증가
 -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맞추어 사업의 현대화 및 비의료적 혜택 전달체계(non-medical benefit delivery)의 적시성과 효율성 개선
 - 재향군인의 더 나은 선택(options)과 혜택(benefits)의 다양화 등을 위한 인프라 관리 및 현대화에 42억달러 배정
 - 부처 사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투명성(transparency) 개선 및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소를 위한 예산으로 감찰부서에 1,720만달러 배정

49) DS: Department of State / USAI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50) Foreign Military Financing grant assistance

51)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52)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표 I -7〉 기관별 (재량)지출 순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17 의회승인규모	2018 추정 (estimated)	2019 예산요청 (request)	증가율 (2017 확정예산 대비 2019 예산안)
내각 부처(Cabinet Departments)				
농무부(Agriculture)	22.7	22.5	19.0	-16.4
상무부(Commerce)	9.3	9.3	9.9	6.15
국방부(Defense)	523.2	574.5	597.1	14.1
교육부(Education)	66.9	67.8	59.9	-10.5
에너지부(Energy)	30.2	30.0	29.2	-3.4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2.8	12.8	15.1	17.5
보건복지부(Health & Human Services)	87.2	86.3	69.5	-20.3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	42.4	44.1	46.0	8.6
주택·도시개발부 ¹⁾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8.0	47.7	39.2	-18.3 ²⁾
내무부(Interior)	13.5	13.4	11.2	-16.8
법무부(Justice, DOJ)	28.4	28.1	28.0	-1.3
노동부(Labor)	12.0	12.0	9.4	-21.4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38.7	38.1	28.3	-26.9
교통부(Transportation)	19.3	19.2	15.6	-19.2
재무부(Treasury)	12.7	12.6	12.3 ²⁾	-3.0
보훈부(Veterans Affairs)	74.4	77.3	83.1	11.7
주요 정부기관(Major Agencies)				
Corps of Engineers	6.0	6.0	4.8	-22.2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1	8.0	5.4	-33.7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6	-0.9	0.6	N/A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19.3	19.5	19.6	-0.3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5	7.4	5.3	-29.5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8	0.6	-24.5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9.3	9.3	8.8	-4.9
Other Agencies	20.6	20.6	18.0	-13.5
Others	...	-78.3	-18.6	N/A
합계³⁾	1,085.9	1,065.0	1,092.0	0.6

주: 1) 연도별 HUD Receipts 수치 제외: (FY2017) -14.0 / (FY2018) -10.3 / (FY2019) -10.0

2) HUD Receipts 증가율 제외: -28.2%

3) 기관별 재량지출 합계는 cap adjustment를 제외한 Base Discretionary funding 수치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8), 2018.2.12

4 주요 재정정책

- 행정부 우선순위 정책 -

- ◇ 2018년 2월 12일에 개최된 예산안 언론 브리핑⁵³⁾에서 대통령실 소속 예산관리처(OMB)의 Mulvaney 처장(Director)은 美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administration's priorities)으로 ①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와 ② 남부지역 국경 장벽(southern border wall) 및 ③ 마약(opioids) 과다복용 확산 등을 언급
-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주요 재정사업 절감 및 개혁안」을 FY2019 예산안과 함께 발표

가. 인프라 투자

- 1조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FY2028) 2천억달러의 연방정부 재정 투입 계획
 - (인센티브 보조금, Incentive Grants) 주·지방 정부와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직접 교부금(competitive grants) 형식으로 1천억달러 투입
 - * 주 간 고속도로, 철도(commuter railroads), 통신, 공항, 항만 등 모든 공공인프라의 소유권은 사실상 주 및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
 - 동 보조금은 혁신적·현대적 조달 방법(procurement practices)과 함께 새로운 수입 창출 프로젝트 및 사회·경제적 투자 수익 창출 등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책임자(project sponsor)에게 주어질(awarding) 계획
 - (농업지역 계획 기금, Rural Formula Funds) 인프라 관련 연방 총 예산(약 2천억달러)의 4분의 1 규모인 500억달러를 초고속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농업지역에 정액 교부금 형식(formula distribution)으로 투입
 - (탈바꿈 프로젝트, Transformative Projects) 기존의 인프라 상태 및 서비스의 혁신적 개선(significant improve)을 위해 총 200억달러 투입

53)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s-briefing-omb-director-mick-mulvaney-president-trumps-fy2018-budget/>

- (신용 프로그램, Credit Programs) 연방신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financing)을 위해 추가보조금 140억달러 투입
- (기타) 범부처에 대한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 처리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연방 소유의 부동산과 연방시설을 처분하여 및 민간 목적으로 사용 계획 → 이를 통해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할 계획

나. 이민제도

-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집권 이후 미국 이민 제도의 일관성(integrity)과 질서(order)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동 정책목적을 위해 3대 정책 과제 제시
 - 2019년 예산안에서는 이민 관련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주무부처(primary responsible agencies)인 국토안보부(DHS⁵⁴)와 법무부(DOJ⁵⁵)에 총 282억달러 배정

- 이민제도 3대 과제 -

- ① 국경안보 강화 (Strengthening border security)
- ② 이민법 집행 확립 (Ensuring enforcement of immigration laws)
- ③ 이민법체계 개혁 (Reforming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1) 국경 안보 강화

- 국경장벽 건설⁵⁶)을 위해 총 180억달러를 투입하고, 이 중 관세국경보호청(CBP⁵⁷)에 16억 달러를 배정하여 남서부 지역 국경의 작전통제권을 지원할 예정

5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5) Department of Justice

56)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의지의 재천명 및 의회에 관련 예산 요청을 언급하였으며, 연방 이민정책에 반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sanctuary policies) 등을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를 비판하기도 하였음
관련 링크,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review-border-wall-prototypes-san-diego-ca/>

57)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한편, 2019년에 약 2억 1천만달러를 투입하여 750명의 국경수비대 증원 계획
- 국경장벽 건설을 통해 범법자, 테러집단, 갱 조직원 활동을 방어하고, 마약밀수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남서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이민법 집행 확립

-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확인(identify), 체포(arrest), 기소(prosecute), 적출(removal)의 역할을 담당할 신규 요원 채용 및 지원활동을 위해 이민세관국(ICE⁵⁸)에 5억 7,100만달러 배정
 - 이민세관국의 체포 및 추방 건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구금시설(하루 평균 47,000명)을 위한 예산 25억달러 배정
 - 이민행정법원(EOIR⁵⁹)의 신속한 이민관련 재판을 위한 예산으로 판사(75명) 신규채용에 4천만달러, 이민세관국(ICE)의 검사(338명) 신규채용을 위해 4천만달러 배정(최근 65만건의 이민관련 소송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

3) 이민제도 개혁

- 전국적인 의무 전자확인 프로그램⁶⁰(E-Verify Program) 확대 예산으로 2,300만달러 배정
- 가족동반의 이주 시스템(family chain migration) 및 추첨식 비자 시스템을 종결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민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불법 이민 개선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⁶¹)을 개정하여 주 및 지방정부가 이민집행활동(immigration enforcement activities) 등에 협조하는 안 제시

58)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59)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60) E-Verify Program을 통해 사업주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했는지를 파악할 계획

61)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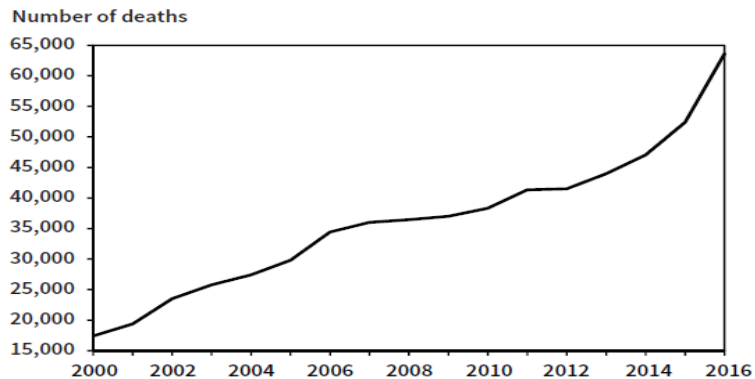
다. 의료정책

〈약물 남용(drug abuse) 및 마약성 치료제 과다 복용 확산(opioid overdose epidemic) 대응〉

□ 약물 통제(drug control)를 위해 총 300억달러 투입 계획

- 미국 대통령실 산하기구인 마약 통제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에 따르면, 약물 통제 관련 총예산 중 마약성 치료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한 확산 방어, 치료, 차단(interdic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operation) 등을 위해 약 7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
* 2017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에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64,000명이었음(하루 174명 사망)
- 미국국립보건원(NIH)에 1억달러를 배정하여 약물산업에서의 민간협력을 통해 약물치료 및 예방, 중독성을 초래하지 않는 통증완화요법(non-addictive therapy for pain)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
- 기타 세부 사업을 보면, 언론 광고(media campaign)에 5천만달러, 주정부 위기 대응지원 예산에 6,250만달러, 약물법원⁶²⁾(drug courts)에 2천만달러 등 배정

[그림 1-1]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자 수 추이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WONDER

62) Drug Courts: 약물법원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약물 중독자에 대해 통상적인 사법시스템 대신에 활용되는 제도로, 대상자들은 약물법원 판사의 면밀한 감시와 명령을 받게 됨(자료: NADCP (National Association of Drug Court Professionals))

링크: <http://www.nadcp.org/learn/what-are-drug-courts/>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26000190>

- 약물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계획 중
 - 메디케이드 관련, 이번 예산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약물 지원 치료 프로그램(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options)을 확대할 예정
 - 동 제도를 통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⁶³⁾가 정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임상 오·남용(clinical abuse)을 줄이고 주정부가 모범 기준(best practices)을 불이행하는 처방자(prescribers)를 추적하여 대응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
 - 메디케어 관련, 파트 D⁶⁴⁾(처방약)에서의 처방의약품 남용(prescription drug abuse)을 줄이고, 수혜자(beneficiaries)들을 유해약물(potentially harmful drugs)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제공
 -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공조하여 의약품 처방을 남용하는 처방자들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방안 계획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한 예산으로 마약중독자 치료지원과 더불어 마약밀매(수) 조직 타진을 위해 마약단속국에 22억달러 예산 배정

라. 주요 재정사업 절감(savings) 및 개혁(reforms)

-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 부속서류(제목: Major savings and reforms-FY2019)를 통해 재량·의무지출 절감 및 개혁방안을 발표
 -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사업의 폐지(eliminations) 및 규모 삭감(reductions) 등을 통해 연방지출을 통제 가능(under control)한 수준으로 만들고, 향후 10년간(budget window) 3조 6천억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 (재량지출) 2019년 재량지출 사업의 경우, 총 484억달러 절감 전망
 - 사업폐지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총 258억달러, 사업규모 감축을 통해 226억달러 절감 계획

63)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64) 메디케어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파트 A, B, C, D 등으로 구분되며,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에 해당됨
(자료 링크: <https://www.medicare.gov/supplement-other-insurance/medigap/whats-medigap.html>)

- (의무지출) 절감방안대로 이행될 경우, 5년(FY2019-FY2023)간 총 5,568억달러를 절감하고, 10년(FY2019-FY2028)간 총 2조 1,290억달러 절감 전망

주요 재정사업절감/개혁안 복지부¹⁾ 예시

〈재량지출 예산권한 폐지사업 예시〉

① 지역서비스 포괄보조금 사업(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 (폐지 규모)
 - (2017 의회승인) 7억 1,500만달러 → (2019 예산요청) 전액 폐지
- (사유)
 - 동 예산은 빈곤(poverty) 종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CAAs²⁾)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대상(target)이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수혜받는 기관들이 이미 다양한 기관을 통해 중복지원(duplicative of services)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예산이 성과를 기반으로 한 배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혁신 유인책이 없는 실정

②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³⁾)

- (폐지 규모)
 - (2017 의회승인) 33억 9천만달러 → (2019 예산요청) 전액 폐지
- (사유)
 - 동 연방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정수급(fraud)과 남용이 발견되는 등 감독이 허술했으며, 2010년 회계감사원(GAO)은 사망자(deceased)나 투옥된 자(incarcerated individuals)를 대상으로 예산자금이 집행된 사례 지적
 - 또한, 이미 주정부에서 동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기에 필요없게 됨

〈의무지출 절감 개혁안 예시〉

①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Social Services Block Grant)

- (절감안 계획 규모)
 - (2019~2023년) 81억 6천만달러 → (2019~2028년) 166억 6천만달러
- (사유)
 - 동 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에 대한 보호(child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및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⁴⁾로, 관련 예산에 대한 강한 성과지표가 부족(lacks strong performance measures)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수혜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고유 사업(core function)이 아닐 뿐더러 주/지방정부에서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② 메디케어: 낭비지출 폐지(Eliminate Wasteful Federal Spending)

- (절감안 계획 규모)
 - (2019~2023년) 782억 9,400만달러 → (2019~2028년) 2,661억 9,100만달러
- (사유)
 - 과도한 지출(excessive spending) 및 왜곡된 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메디케어 의료기관(providers)에게 지급하는 대금손실⁵⁾(bad debts)의 65%를 3년간 25%로 감축
 -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급성질환 치료 후 케어(post-acute care) 지급 시스템의 일원화 및 필요에 기반한 치료(clinical needs) 등 다수의 메디케어 절감안 계획

주: 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 Community Action Agencies
 3) LIHEAP
 4) 자료: 이미리, 「국내보육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방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9.9
 5) 수혜자들(beneficiaries)이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못한 co-payments 또는 deductibles 등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금
 자료: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19」,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표 I -8〉 주요 재량지출 예산권한 폐지(안) 규모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17 의회 승인 (2017 Enacted)	2019 예산요청 (2019 Request)	폐지 및 감축 규모 (2019 change from 2017)
농무부	938	...	938
상무부	669	20	649
교육부	5,659	...	5,659
에너지부	657	278	379
보건·복지부	4,968	88	4,880
국토안보부	45	...	45
주택·도시 개발부	4,142	138	4,280
내무부	158	...	158
법무부	210	...	210
국무부 및 국제개발	4,629	...	4,629
교통부	500	...	500
재무부	53	...	53
NASA (미국항공우주국)	338	...	338
기타 정부기관	2,822	324	2,498
총폐지 규모	26,331	572	25,759

자료: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19」,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에서 부처별 최종 규모 발췌

II. 일 본

□ FY2019: 2019년 4월 ~ 2020년 3월

□ FY2019 예산편성 일지

- 2018.7.10. FY2019 예산의 개산요구 기준 발표
- 2018.9.7. FY2019 일반회계 개산요구액 발표
- 2018.11.20. FY2019 예산편성 등에 관한 건의 발표
- 2018.12.7. FY2019 예산편성 기본방침 발표
- 2018.12.21. FY2019 예산 정부안 각의결정

□ 출처

- 平成30年度補正予算(第1号) (2018.10.15.)
- 平成31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8.12.7)
- 平成3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8.12.18)
- 平成30年度補正予算(第2号) (2018.12.21.)
- 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 平成31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8.12.21.)
-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概算の変更) (2019.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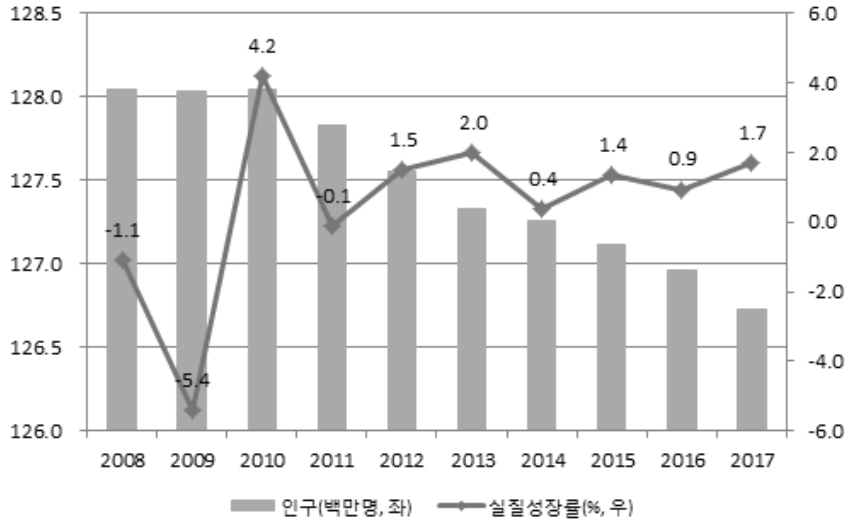
□ 환율: 100엔 = 약 1,008,52원(2017년도 평균) OECD stat

□ 경제규모: 2017년 경상GDP 5조 3,198억달러(우리나라 약 2.7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7년 기준 34.4%(우리나라 80.8%, 2017년 기준)

□ 인구: 1억 2,673만명(2017년 기준)

□ GDP 및 인구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9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한 임시특별조치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재정수지) 2019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지는 전년 대비 19.4% 감소한 8.4조엔을 나타낼 전망
- (국가채무) 2019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896.7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예산기조

- 「신경제·재정재생계획」상의 세출 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지원책들과 방재·감재(減災)·국토 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에 역점을 둠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91억엔으로 전망되며,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2조 4,950억엔으로 전망
- (세출) 2019년도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91억엔이며,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59조 9,359억엔을 편성
 - (임시특별조치) 소비세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준화하기 위한 임시특별조치로 2조 280억엔을 추가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Society 5.0을 위한 전파이용 니즈 확대에 대응, 관광 콘텐츠 확충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
- (재정건전화) 구조의 재검토를 통해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달성, 사회보장관계비 인상에 대해 ‘경제·재정재생계획’의 기준을 달성, 임시재정대책채(債) 발행량 대폭 감축 및 세출 개혁 노력 지속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총평) 2019년도에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하여, 당초 예산에서 계획한 임시특별조치 강구 등 「2019년도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적 태도」상의 정책⁶⁵⁾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성장률) 2019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3%, 명목 GDP 성장률은 2.4%로 전망
 - 정책 효과와 더불어 고용 및 소득 환경 개선을 이어가는 경제 선순환이 더욱 진전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 (민간최종소비지출) 고용·소득환경의 개선과 소비세율 인상 대응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1.2% 증가 전망
 - － (민간주택투자) 완화적 금융환경과 소비세율 인상 대응 효과로 전년 대비 1.3% 증가 전망
 - － (민간기업설비투자) 견조한 기업 이익과 일손 부족 대응책으로 인해 전년 대비 2.7% 증가 전망
 - － (공적수요) 사회보장관계비 및 방재·감재(減災), 국토 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에 따른 공공사업 관계비의 증가로 인해, 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공적수요의 기여도가 전년 대비 0.2% 증가할 전망
 - － (해외수요) 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한편, 국내 수요를 반영하여 수입도 증가함에 따라 보합 전망(실질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해외수요의 기여도 전년 대비 $\Delta 0.0\%$ 전망)
- (노동·고용) 고용환경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 및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노동참가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자 수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6,006만명으로 전망되며, 완전실업률은 소폭 감소한 2.3%로 전망

65) ① 지속적인 성장 경로의 실현을 위한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인재육성혁명'과 '생산성혁명'을 최우선적 추진 ②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희망출산율 1.8명 달성, 개호이직 제로 달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개혁 지속 ③ 지방창생·국토 강인화·여성과 장애인의 활약·외국인력 수용 등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확고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세율 인상 전후 수요 변동이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출처: 일본 내각부, 「平成3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8.12.18.).

- (광공업 생산) 국내수요와 수출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 물가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급을 견인하며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점차 탈피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지수는 1.1%, GDP디플레이터 역시 1.1% 상승 전망
- (국제수지) 해외에서의 소득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하여,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가 3.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1〉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 대비 %, 조엔)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대비증가율					
	실적	추정	전망	2017		2018		2019	
	(명목)	(명목)	(명목)	(명목)	(실질)	(명목)	(실질)	(명목)	(실질)
국내총생산(조엔)	547.4	552.5	566.1	2.0	1.9	0.9	0.9	2.4	1.3
민간최종소비지출	303.2	306.6	313.4	1.4	1.0	1.1	0.7	2.2	1.2
민간주택투자	17.2	16.7	17.3	1.1	△0.7	△2.8	△4.2	3.3	1.3
민간기업설비투자	86.2	90.2	93.1	5.4	4.6	4.7	3.6	3.2	2.7
민간재고품증가(기여도)주	0.7	1.0	0.9	(0.1)	(0.1)	(0.1)	(0.0)	(△0.0)	(△0.0)
재화·서비스수출	98.2	102.5	107.4	10.5	6.4	4.4	2.7	4.8	3.0
(공제) 재화·서비스수입	93.3	100.7	104.7	11.7	4.1	7.9	2.8	4.0	3.3
내수기여도				2.1	1.4	1.5	0.9	2.3	1.4
민간수요기여도				1.7	1.3	1.3	0.9	1.8	1.1
공적수요기여도				0.4	0.1	0.2	0.0	0.5	0.2
외수기여도				△0.1	0.4	△0.6	0.0	0.2	△0.0
국민총소득(GNI)	567.3	573.3	587.8	2.2	1.6	1.1	0.5	2.5	1.6
노동·고용(만명)									
노동력인구	6,750	6,831	6,871			1.0	1.2	0.6	
취업자수	6,566	6,665	6,711			1.4	1.5	0.7	
고용자수	5,848	5,950	6,006			1.5	1.7	0.9	
완전실업률(%)	2.7	2.4	2.3						
생산(%)									
광공업생산지수(증감률)	2.9	1.4	2.4						
물가(%)									
생산자물가지수(변화율)	2.7	2.7	2.0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7	1.0	1.1						
GDP디플레이터(변화율)	0.1	0.0	1.1						
국제수지(조엔)									
무역·서비스수지	4.1	1.0	2.0						
무역수지	4.6	1.5	1.0						
수출	78.3	83.0	86.4	10.6	6.0		4.1		
수입	73.7	81.5	85.4	13.4	10.6		4.8		
경상수지	21.8	20.4	22.3						
명목GDP 대비 경상수지(%)	4.0	3.7	3.9						

주: () 안 수치는 GDP 성장 기여도를 의미

자료: 내각부, 「平成31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2018.12.18.

나. 재정 전망

- (재정수지) 2019년도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9.4% 감소한 8.4조엔을 나타낼 전망
 - (세입) 2019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예산안 대비 5.8% 증가한 62.5조엔, GDP 대비 비중은 11.0%로 전망되며, GDP 대비 세수 및 기타수입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p 상승한 11.9%로 전망
 - (세출) 2019년도 일반회계세출총액은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4조엔(GDP 대비 17.6%)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세출 중 국채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75.9조엔(GDP 대비 13.4%)으로 전망
- (국가채무) 2019년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896.7조엔을 나타낼 전망이며, 국채의존도는 전년 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GDP 대비 국채잔고는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8.4%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국가 및 지방의 장기채무잔고는 전년 대비 약 2%p 감소한 198% 규모로 전망

〈표 II-2〉 FY2019 주요 재정지표(일반회계)

(단위: 조엔, %)

구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정부안)
일반세출 ²⁾	54.0	56.5	57.4	57.8	58.4	58.9	59.9 (62.0)
기초재정수지 대상경비 ³⁾	70.4	72.6	72.9	73.1	73.9	74.4	75.9
GDP 대비 %	13.9	14.0	13.7	13.6	13.5	13.5	13.4
일반회계세출총액	92.6	95.9	96.3	96.7	97.5	97.7	99.4
GDP 대비 %	18.3	18.5	18.1	18.0	17.8	17.7	17.6
조세 및 인지수입 ⁴⁾	43.1	50.0 (4.5)	54.5 (6.2)	57.6 (6.3)	57.7 (6.3)	59.1 (6.4)	62.5 (7.9)
GDP 대비 %	8.5	9.6	10.2	10.7	10.5	10.7	11.0
국채발행 수입	42.9	41.3	36.9	34.4	34.4	33.7	31.9 (32.7)

구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FY2019 (정부안)
국채잔고	743.9	774.1	805.4	830.6	853.2	880.2	896.7
GDP 대비 %	146.6	149.4	151.1	154.7	155.9	159.3	158.4
국가 및 지방 장기채무잔고	971.8	1,000.6	1,032.7	1,056.1	1076.6	1,104.6	1,122.0
GDP 대비 %	192	193	194	197	197	200	198
기초재정수지 ⁵⁾	-23.2	-18.0	-13.4	-10.8	-10.8	-10.4	-8.4 (-9.2)
국채의존도(%) ⁶⁾	46.3	43.0	38.3	35.6	35.3	34.5	32.1 (32.2)

주: 1) 당초 예산기준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는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를 제외한 것을 의미

4) 괄호안 이텔릭체의 수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의미(국세부분)

5)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조세 및 인지도수입+기타수입-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6) 국채의존도=국채발행액/일반회계세출총액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2 예산기조

□ FY2019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2018.12.7.)⁶⁶⁾

- 2019년 예산편성은 구조개혁을 지속함과 동시에, 금융정책과 성장 지향적인 재정정책의 적절한 결합을 추진
 - －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는 한편, 유아교육 무상화, ‘인재육성혁명’ 추진, 제4차 산업 혁명 대비 생산성 혁명 실현을 위한 투자와 연구 개발 혁신 촉진 등 중요 정책 과제 지원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아울러 연말에는 추가적인 재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함
-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하여,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총동원
 - － 또한 경제의 회복 기조를 지속하기 위해 2019·2020년도 기존 예산에 임시특별조치를 강구
- 중요 인프라 긴급 점검 결과를 근거로 방재·감재(減災) 및 국토 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을 3년간 집중적으로 실시
 - － 이 가운데 첫 번째 해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하는 것은 이번 제2차 추경예산으로 대응하고, 이외의 것은 2019·2020년도 기존 예산의 임시특별조치를 활용하기로 함
- 이번 2019년 예산을 새로운 경제·재정 재생계획으로 자리매김한 사회보장개혁과 기반 강화를 꾀하는 첫해 예산으로 삼고, 사회보장관계비와 비사회보장관계비에 대한 지속적인 세출 개혁 노력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함
 - － 현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세출 전반에 걸쳐 성역 없는 철저한 검토를 계속 추진하고, 지방에서도 국가의 노력과 기조에 맞게 철저한 검토를 진행

66) 내각부, 「平成31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8.12.7.

https://www.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18/31_yosanhensei.pdf

- PDCA 사이클⁶⁷⁾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세출 분야에 걸쳐 행정사업 리뷰를 철저히 실시하고, 근거기반 정책입안(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을 추진하여 예산의 질 향상 및 효과 검증을 꾀함
 - － 또한 행정 절차 전자화로 행정 절차 비용을 20% 이상 절감하고, 공공조달개혁의 일환으로 다양한 PPP/PFI⁶⁸⁾와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 위탁 등의 노력을 가속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함
 - － 이러한 성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재검토
 - － 세출 효율화 및 경제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전략적으로 전국으로 전개를 진행하며, 대응 상황의 지역 차이를 가시화하여 개혁 노력의 목표로 활용

□ FY2019 예산의 주요 내용 (2018.12.21.)⁶⁹⁾

- 2019년도 예산안은 「신경제·재정재생계획」상의 세출 개혁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소비를 평준화하기 위한 지원책들과 방재·감재·국토 강인화를 위한 긴급 대책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실시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사회보장 강화)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소비세증액분을 활용하여 유아교육 무상화 등 사회 보장에 충실(총 8,110억엔 추가 투입)
 - － 유아교육·보육 무상화(2019년 10월~)에 3,882억엔 추가 투입
 - － 간호인력 처우 개선(2019년 10월~)에 421억엔 추가 투입
 - － 연금생활자지원금부금 지급에 1,859억엔 추가 투입
 - － 저소득고령자의 개호보험료 부담 경감에 654억엔 추가 투입 등
- (임시특별조치) 소비세율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준화하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총 2조 280억엔 투입)

67) 예산편성에서의 PDCA 사이클은 Plan(정책기획입안, 성과목표 설정)→Do(정책시행)→Check(행정사업 리뷰·정책평가)→Action(예산요구)을 의미

68) PPP는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FI는 민간투자개발사업 (Private Finance Initiative)임

69)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를 정리하여 작성

https://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9/seifuan31/01.pdf(검색일자: 2019.1.21.)

- 중소·소규모 사업자의 매장에서 카드 결제 등 무현금 거래 수단을 사용(캐쉬리스 결제)한 경우, 소비세율 인상분만큼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는 데 2,798억엔 책정
- 저소득·자녀양육세대를 위한 프리미엄 상품권 지급에 1,723억엔 책정
- 주택 매입자 등 지원에 총 2,085억엔 책정(주거급여금 785억엔, 차세대주택 포인트제도에 1,300억엔)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대책에 1조 3,475억엔 등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에 따라 긴급 대책 160개 항목을 2020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과 2019·2020년도 임시특별조치를 활용(2020년도까지 3년간 사업 규모는 약 7조엔 정도)
- (재정건전화) 「신경제·재정재생계획」하에 세출개혁 노력을 지속함
 - 사회보장관계비: 고령화에 기인한 증가분만 반영하는 방침 달성을 통해 증가액을 4,768억엔으로 억제
 - 비사회보장관계비: 세출개혁 노력 지속으로 330억엔 확보
 - 아베내각 출범 이후 국채발행액을 7년 연속 감축
 - 2018년도 33.7조엔 → 2019년도 32.7조엔
 - 일반회계 기초재정수지 개선
 - 2018년도 -10.4조엔 → 2019년도 -9.2조엔

〈참고 II-1〉 2019년도 10월 1일 예정, 소비세율 인상 개요와 대응

□ 소비세율 인상 개요와 기본 개념⁷⁰⁾

- (인상률) 2019년 10월 1일 현 8%의 소비세율이 10%로 2%p 인상됨
- (대응 원칙) 지난 3%p 인상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여 현 경제의 회복 기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대응
 - 임시특별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2019년·2020년도 예산을 통해 각 조치의 규모와 실시 시기를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전체적인 재정규율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함
 - 각 조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함
 - 미래와 경제 구조 개혁에 이바지하는 관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
- 소비세율 인상의 필요성과 그 영향을 완화하는 조치 등에 대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형태로 홍보를 실시

□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과 대응⁷¹⁾

-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 5.2조엔 정도로 예측됨
 - 국가·지자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5.7조엔) + 지난해 실시한 담배세와 소득세 재검토 등에 의한 재원확보의 영향(0.6조엔) - 경감세율제도의 실시에 따른 영향 억제(1.1조엔)
- 이 가운데 유아교육 무상화 등의 조치로 그 영향은 2조엔 정도로 억제될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2.3조엔(임시특별조치 2조엔 + 제도상 지원 0.3조엔) 가량의 지출을 수반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악영향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70) 재무성,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71) 재무성,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9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85억엔으로 전망되며, 기타수입 및 국채발행액을 통해 추가 조달되는 임시특별조치분 2조 280억엔을 포함한 총세입은 101조 4,564억엔임
 - (조세 및 인지수입) 조세 및 인지수입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2조 4,950억엔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조세 및 인지수입의 비중은 11.0%로 전망
 - － 원천소득세(5.6%), 신고소득세(0.9%), 법인세(5.7%), 소비세(10.4%), 담배세(1.7%), 관세(1.2%)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상속세(-0.4%), 주세(-3.1%), 자동차증량세(-4.8%), 휘발유세(-1.2%) 등이 감소⁷²⁾
 -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조 566억엔으로 전망
 - － 임시특별조치분(1조 2,461억엔)을 포함할 경우, 전년 대비 27.5% 증가한 6조 3,016억엔임
 - (국채발행액) 국채발행액은 전년 대비 5.4% 감소한 31조 8,779억엔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국채의존도도 전년 대비 2.4%p 하락한 32.1%로 전망
 - － 임시특별조치분(7,819억엔)을 포함할 경우, 감소폭이 일부 상쇄되어 전년 대비 3.1% 감소한 32조 6,598억엔임

72) 재무성, 「平成 31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8.12.21.

〈표 II-3〉 FY2019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분	FY2018 당초(A)	FY2019 정부안(B) ¹⁾		증감액 (B-A)	증감률 (B/A-1)	
			임시특별 ²⁾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90,790	624,950	624,950	34,160	5.8
	2. 기타 수입	49,416	50,556	63,016	1,140	2.3
	3. 국채발행액	336,922	318,786	326,605	△18,136	△5.4
	(1) 공채금(건설국채)	60,940	61,701	69,520	761	1.2
	(2) 특례공채금(적자국채)	275,982	257,085	257,085	△18,897	△6.8
	합계³⁾	977,128	994,291	1,014,571	17,163	1.8
세출	1. 국채비 ⁴⁾	233,020	235,082	235,082	2,062	1.2
	2. 기초재정수지대상경비	744,108	759,209	779,489	15,101	2.0
	(1) 일반세출	588,958	599,359	619,639	10,401	1.8
	사회보장관계비	329,882	339,914	340,593	10,031	3.0
	사회보장관계비 외	259,076	259,445	279,045	370	0.1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⁵⁾	155,150	159,850	159,850	4,701	3.0
	합계³⁾	977,128	994,291	1,014,571	17,163	1.8

주: 1) 일반회계 통상분만 산출시

2) 일반회계 통상분+소비세율 인상에 대응한 임시특별조치분 2조 280억엔 포함 산출시

3)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4) 국채비는 국채의 상환 및 이자지불을 위한 경비로, 국채잔고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비

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概算の変更)」, 2019.1.18.

〈표 II-4〉 FY2019 조세 및 인지수입

(단위: 억엔, %)

구분 세 목 (일반회계)	FY2018		FY2019	전년대비			
	(당초)예산	보정후	예산안	(당초)예산 대비		보정후예산 대비	
	(A)	(B)	(C)	(C-A)	증감률	(C-B)	증감률
원천소득세	157,250	161,800	166,100	8,850	5.6	4,300	2.7
신고소득세	32,950	32,950	33,240	290	0.9	290	0.9
(소득세 계)	(190,200)	(194,750)	(199,340)	(9,140)	(4.8)	(4,590)	(2.4)
법인세	121,670	122,960	128,580	6,910	5.7	5,620	4.6
상속세	22,400	22,400	22,320	-80	-0.4	-80	-0.4
소비세	175,580	178,230	193,920	18,340	10.4	15,690	8.8
주 세	13,110	13,110	12,710	-400	-3.1	-400	-3.1
담배세	8,740	8,740	8,890	150	1.7	150	1.7
휘발유세	23,300	23,300	23,030	-270	-1.2	-270	-1.2
석유가스세	80	80	70	-10	-12.5	-10	-12.5
항공기연료세	520	520	520	0	0.0	0	0.0
석유석탄세	7,090	7,090	7,070	-20	-0.3	-20	-0.3
전원개발촉진세	3,230	3,230	3,300	70	2.2	70	2.2
자동차중량세	3,950	3,950	3,760	-190	-4.8	-190	-4.8
국제관광여객세	60	60	500	440	733.3	440	733.3
관 세	10,220	10,220	10,340	120	1.2	120	1.2
톤 세 ¹⁾	100	100	110	10	10.0	10	10.0
인지수입	10,540	10,540	10,490	-50	-0.5	-50	-0.5
합 계	590,790	599,280	624,950	34,160	5.8	25,670	4.3

주: 1) 외국무역선 입항 시 무역선의 톤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으로 납부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 2018.12.21.

나. 세출⁷³⁾

- FY2019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일반회계 통상분 기준) 전년 예산안 대비 1.8% 증가한 99조 4,291억엔으로 책정되었음
 - (임시특별조치) 여기에 임시특별조치로 추가로 편성된 일반세출 2조 280억엔을 더할 경우, 총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1조 4,571억엔임
 - (국채비) 채권 잔액의 누증(累増)에 따른 채무상환비용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0.9% 증가한 23조 5,082억엔을 편성
 - (일반세출) 전년 대비 1.8% 증가한 59조 9,359억엔이 편성되었으며, 임시특별조치로 추가 편성된 2조 280억엔을 더할 경우 편성액은 61조 9,639억엔임
 - (지방교부세교부금) 전년 대비 3.0% 증가한 15조 9,850억엔을 편성
 -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국세 증가 등을 반영하며,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지방정부의 일반재원 총액에 대해 2018년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확보

- FY2019 분야별 세출
 - (사회보장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34.2%를 차지하는 사회보장관계비는 전년 대비 1조 31억엔(3.0%) 증가한 33조 9,914억엔 규모
 - － 또한 임시특별조치로 679억엔이 사회보장관계비로 추가 편성되어, 이를 더할 경우 전년 대비 1조 710억엔(3.2%) 증가한 34조 593억엔임
 - (공공사업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6.1%를 차지하는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 대비 807억엔(1.3%) 증가한 6조 596억엔 규모
 - － 여기에 임시특별조치로 8,503억엔이 공공사업관계비로 추가 편성되어, 이를 더할 경우 전년 대비 9,130억엔(15.6%) 증가한 6조 9,099억엔임
 - (문교 및 과학진흥비) 일반회계 세출 중 5.4%를 차지하는 문교 및 과학진흥비는 전년 대비 311억엔(0.6%) 증가한 5조 3,824억엔으로 편성, 이 중 과학기술진흥비는 전년 대비 204억엔(1.5%) 증가한 1조 3,378억엔 규모

73) 재무성,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概算の変更)」, 2019.1.18.에서 수정된 내용을 포함하였음(사회보장관계비 세출 예산 증가)

- 더하여 임시특별조치로 2,201억엔이 문교 및 과학진흥비로 추가 편성되어, 이를 더할 경우 전년 대비 2,513억엔(4.7%) 증가한 5조 6,025억엔임
- (방위관계비) 일반회계 세출 중 5.2%를 차지하는 방위관계비는 전년 대비 155억엔(0.3%) 증가한 5조 2,066억엔 규모
 - 중기방위대상경비를 682억엔 증액한 반면, 정부 전용기 관련 경비에서 250억엔 감액, SACO(Special Action Committee on Okinawa)·미군재편경비에서 277억엔 각각 감액함
 - 더하여 임시특별조치로 508억엔을 방위관계비로 추가 편성하여, 이를 반영할 경우 방위 관계비는 전년 대비 663억엔(1.3%) 증가한 5조 2,574억엔임

(표 II-5) FY2019 주요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제외)

(단위: 억엔, %)

구분	FY2018 ¹⁾	FY2019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3,020	235,082	2,062	0.9
일반세출 ²⁾	588,958	599,359	10,401	1.8
사회보장관계비	329,882	339,914	10,031	3.0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12	53,824	311	0.6
(과학기술진흥비)	(13,175)	(13,378)	(204)	(1.5)
연금관계비	2,504	2,097	△407	△16.3
방위관계비	51,911	52,066	155	0.3
공공사업관계비	59,789	60,596	807	1.3
경제협력비	5,089	5,021	△68	△1.3
중소기업대책비	1,771	1,740	△31	△1.8
에너지대책비	9,186	9,104	△82	△0.9
식품안정공급관계비	9,924	9,816	△108	△1.1
기타 경비	61,888	60,181	△1,707	△2.8
예비비	3,500	5,000	1,500	42.9
지방교부세교부금	155,150	159,850	4,701	3.0
합계 ³⁾	977,128	994,291	17,163	1.8

주: 1)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과의 비교를 위해 재조합하였음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재무성,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概算の変更)」, 2019.1.18.

〈표 II-6〉 FY2019 주요 분야별 세출 내역(임시특별조치분 포함)

(단위: 억엔, %)

구분	FY2018 ¹⁾	FY2019	증감액	증감률
	(A)	(B)	(B-A)	(%)
국채비	233,020	235,082	2,062	0.9
일반세출 ²⁾	588,958	619,639	30,680	5.2
사회보장관계비	329,882	340,593	10,710	3.2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12	56,025	2,513	4.7
(과학기술진흥비)	(13,175)	(13,597)	(423)	(3.2)
연금관계비	2,504	2,097	△407	△16.3
방위관계비	51,911	52,574	663	1.3
공공사업관계비	59,789	69,099	9,310	15.6
경제협력비	5,089	5,021	△68	△1.3
중소기업대책비	1,771	1,790	19	1.1
에너지대책비	9,186	9,760	574	6.2
식품안정공급관계비	9,924	9,823	△101	△1.0
기타 경비	61,888	67,856	5,968	9.6
예비비	3,500	5,000	1,500	42.9
지방교부세교부금	155,150	159,850	4,701	3.0
합계³⁾	977,128	1,014,571	37,44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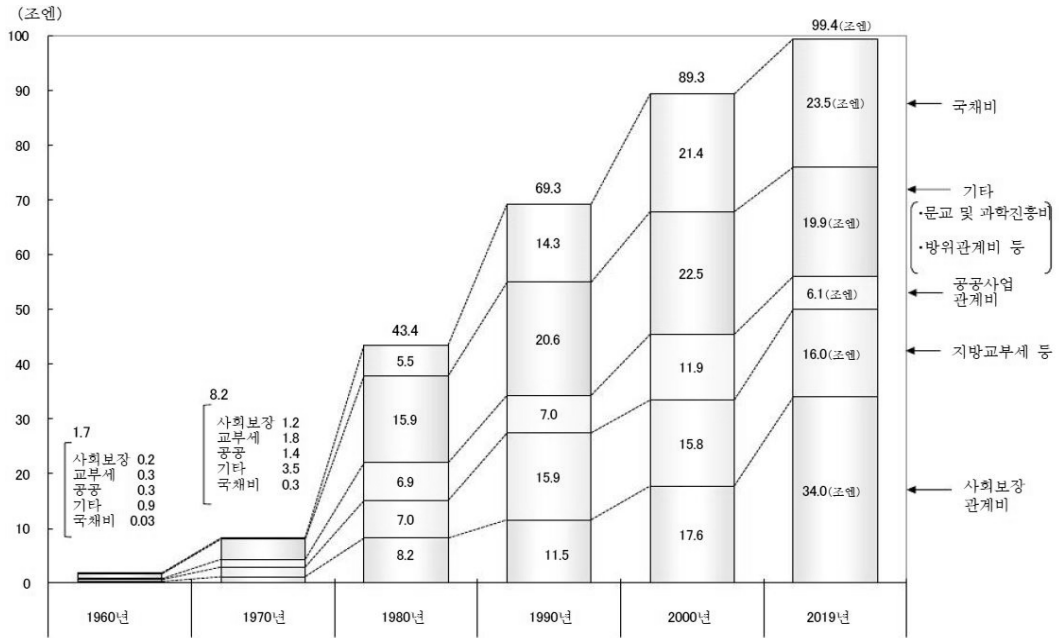
주: 1) 2018년도 예산은 2019년도 예산과의 비교를 위해 재조합하였음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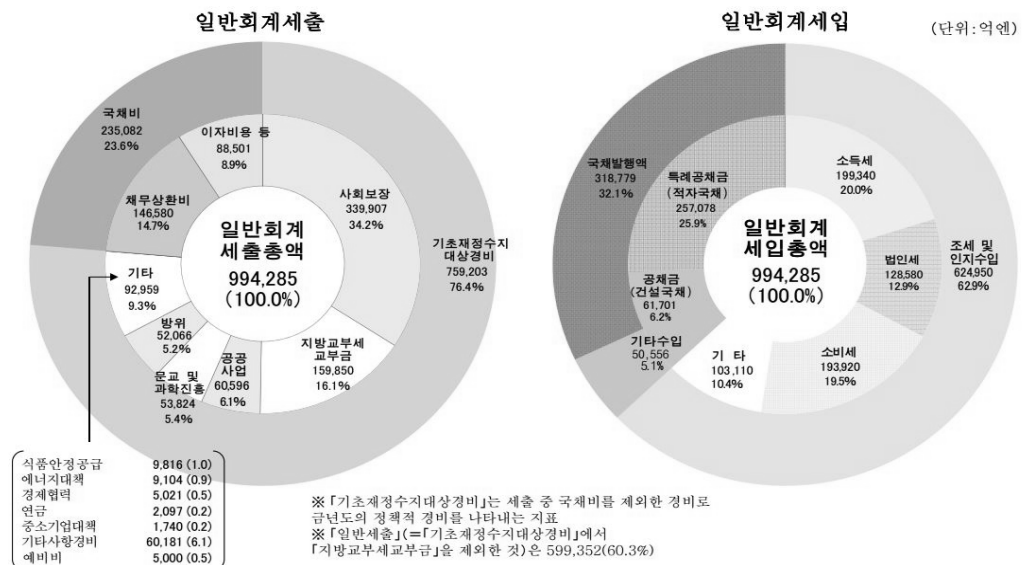
자료: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그림 II-1] 일반회계세출 주요경비 추이



주: 2000년까지는 결산, 2019년은 예산안이며, 2019년은 임시특별조치에 의한 수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재무성, 「我が国の財政事情(平成31年度予算政府案)」, 2018.12.21.

[그림 II-2]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입의 구성(임시특별조치 제외)



자료: 재무성, 「平成 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참고 II-2〉 FY2018 1차 추경예산

- 일본 정부는 건설국채 추가발행 등을 재원으로, 재해관련 대책을 포함한 9,356억엔 규모의 추가세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2018.10.15.)⁷⁴⁾
 - (재해복구·부흥) 2018년 7월 호우(豪雨)관련 대책 5,034억엔,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관련 대책 1,188억엔, 태풍 제21호, 오사카 북부 지진관련 대책 1,053억엔 등 총 7,275억엔 편성
 - (학교 긴급 중점 안전 확보 대책) 열사병 등 열중증 대책으로 에어컨 설치 822억엔, 붕괴 위험이 있는 담장관련 대책 259억엔 등 총 1,081억엔 편성
 - (추가 예비비) 향후 재해대책 등을 감안한 예비비 1,000억엔 편성

〈FY2018 일반회계 추경예산(1차) 프레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재해복구·부흥	7,275	1. 공채금(건설국채)	6,950
(1) 2018년 7월 호우(豪雨)관련 대책	5,034	2. 세외수입	45
(2) 2018년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관련 대책	1,188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2,364
(3) 태풍 제 21호, 오사카 북부 지진관련 대책	1,053		
2. 학교 긴급 중점 안전 확보 대책	1,081		
(1) 열사병 등 열중증 대책으로 에어컨 설치	822		
(2)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관련 대책	259		
3. 추가 예비비	1,000		
합 계	9,356	합 계	9,356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フレーム」, 2018.10.15.

74) 재무성, 「平成30年度補正予算(第1号)」, 2018.10.15.

〈참고 II-3〉 FY2018 2차 추경예산

- 일본 정부는 10월 1차 추경예산 발표에 이어 12월, 세수 및 건설국채 추가발행을 재원으로, 2.7조엔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2018.12.21.)⁷⁵⁾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하천·제방·도로 방재 및 감재에 6,183억엔, 학교시설 내진화에 611억엔, 재해시 경찰용 기자재·통신기반 정비에 545억엔 등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3개년 긴급대책」을 즉시 착수하는 데 1조 723억엔 편성
 - (TPP⁷⁶⁾ 조기 발효 대응) 농지 대(大)구획화에 902억엔,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 400억엔 등 TPP 협정 조기 발효에 대응하기 위한 농림수산업 강화 대책으로 총 3,256억엔 편성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IT 도입 지속화 보조금 1,100억엔, 사업승계지원 50억엔 등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에 총 2,068억엔 편성
 - (기타 긴급한 과제 대응) 국민생활 안전·안심 확보 정책에 7,512억엔, 재해 복구에 2,136억엔, 기타비용 명목으로 4,656억엔 등 총 1조 4,304억엔 편성
 - 그 밖에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에 전입으로 4,547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으로 5,108억엔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세출 총액의 일부(1조 2,909억엔)를 기본경비 감액분으로 충당

〈FY2018 일반회계 추경예산(2차) 프레임〉

(단위: 억엔)

세 출		세 입	
1.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10,723	1. 세수	8,490
2. TPP협정 조기 발효 대응	3,256	2. 세외수입	1,393
3.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지원	2,068	3. 전년도 잉여금 수입	7,131
4. 기타 긴급한 과제 등에 대응	14,304	4. 공채금	10,082
5.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에 전입	4,547	(1) 건설국채 증액	13,082
6. 지방교부세교부금	5,108	(2) 특례공채 감액	△3,000
7. 기존경비 감액	-12,909		
합 계	27,097	합 계	27,097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무성, 「平成30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2号) フレーム」, 2018.12.21.

75) 재무성, 「平成30年度一般會計補正予算(第2号)」, 2018.12.21.
 76)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기업)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추경예산으로 조차해 오던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⁷⁷⁾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 촉진 및 중소기업의 사업 승계 가속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
 - 지역핵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산학관 연계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지원, 지역핵심기업의 신사업 전개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에 158.6억엔
 - 데이터 정보 공유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 등 모노즈쿠리·상업·서비스 고도연계촉진사업에 50억엔
 - 소규모 사업자에게 상공회·상공회의소가 동반자적 경영지도 서비스 지원, 해당 경영지도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 대상 일본정책금융공고(JFC)⁷⁸⁾의 무담보·무보증저리 용자 제공 등 소규모 사업자 경영개선자금 용자사업에 42.5억엔 등

- (에너지·환경) 전파이용요금 인상분(+130억엔)을 활용하여, 2020년 5G 실현을 시작으로 Society 5.0을 위한 전파이용 니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 고도 무선시스템을 지원하는 전파이용기반 정비, 전파의 유효 활용을 위한 이용상황조사 및 주파수 공용기술의 정립 등을 실시하는 데 747억엔 투입
 - 재생에너지 연구개발·실증 중점화 도모, 수소사회 실현을 향한 수소스테이션 정비 등을 추진에 100억엔 투입
 - 세계적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를 고려하여, 플라스틱 국내 재활용 체제 정비 등을 추진(70억엔)

- (관광) 방일 외국인여행자 수 2020년 4,000만명 달성을 위해 영구적 재원인 국제관광객세수(+440억엔)를 활용하여 관광정책을 확충

77) “혼신의 힘을 다해 최고품질 제품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지금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 중소제조업의 특징을 통칭하는 용어(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78) 일본의 정책금융기관

- 얼굴인증게이트를 이용한 출입국 수속의 고도화, 무료 와이파이와 다언어 안내 등 지원 체제 정비, 문화재나 국립공원 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충 등을 가속화하는 데 총 500억엔 투입
- (농림수산) '2019년 수출 1조엔' 목표의 확실한 달성을 위해 수출 프로모션 강화, 수출 환경 정비 등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지원
 - 수산자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조사 충실, 고성능 어선 도입 등 수산업의 성장산업화를 추진(2018년도 추경예산 포함 3,045억엔)
- (교육·과학기술) 연구력 향상을 위해 미래의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과학연구비를 대폭 배분(86억엔 증가, 2,372억엔)
 - 국립대학 운영비교부금에 대해 대부분을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 배분해 오던 구조에서 1,000억엔⁷⁹⁾만큼을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것을 재검토
 - 또한 외국인재의 수입과 공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원적 상담창구 설치를 지원, 충실한 일본어 교육 등 환경 정비를 추진

나. 안전·재해 예방

- (방위) 우주·사이버·전자파 등의 새로운 영역을 포함 영역 횡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중기방위관계비는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근거로 +1.1%의 성장을 확보
 - 우주상황모니터링(SSA) 시스템 정비(260억엔), X밴드 국방통신 위성 정비(356억엔), 사이버 정보 수집 장치 정비(36억엔), F-15 전투기 전자전 능력 향상(108억엔) 등
- (경찰·해상보안) 「해상보안체제 강화에 관한 방침」에 의거, 2018년도 추경예산과 함께 센카쿠(尖閣) 대응 대형 순시선을 중심으로 체제 강화를 지속(2,153억엔)
 - 치안 확보와 테러 미연 방지를 위한 기자재 정비 등 경비 체제 강화(213억엔 증가, 372억엔)

79) 이 중 700억엔은 논문의 질 향상 성과에 관한 공통 지표로 상대평가하여 배분

- (방재·감재, 국토강인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대책에 따라 긴급 대책 160개 항목을 2020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⁸⁰⁾
 - 하천 제방강화, 토사재해방지를 위한 사방정비, 도로비탈면 성토 작업 실시, 재해에 따른 위험지도 작성 등 하천, 사방, 도로 등의 방재·감재 대책 시행(7,153억엔)
 - 저수지 보수·보강이나 통폐합, 치산시설 설치, 어항시설 보강, 저수지 붕괴 시 침수예상지역 구역도 작성 등 저수지·치산(治山)시설·숲·어항 등에 대한 방재·감재 대책(1,207억엔)
 - 학교시설 방재·감재, 지진해일 관측망에 관한 인프라 긴급 대책 시행(1,518억엔)
 - 자위대의 방재관계 기자재에 관한 긴급 대책⁸¹⁾(391억엔), 자위대의 시설에 대한 긴급 대책(117억엔)⁸²⁾ 시행 등

다. 지역 발전·창생

- 공공사업
 - 공공사업관계비를 안정적으로 확보(총 6조 596억엔)하여, 이를 지방공공단체에 계획적·집중적으로 지원해 개별 보조화 및 노후화대책 마련과,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데 사용
- 지방창생
 - 지방의 지주적이고 선구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지방창생추진교부금(1,000억엔)과, 첨단과학 및 관광·농업 등 지방대학의 새로운 도전을 후원하는 지방대학·지역산업창생교부금(22.5억엔) 등으로 지방창생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진
- 부흥
 - 부흥 단계에 따라 생업의 재개 등 세심한 지원과 함께, 부흥거점정비 등을 통한 후쿠시마의 부흥에 주력

80) 2018년도 2차 추경예산과 2019년도, 2020년도 임시특별조치분을 활용하여 3개년간 총 7조엔 투입, 이 중 2019년도 임시특별조치분은 1조 3,475억엔임

81) 재해 시 구호활동에 필요한 노후화된 기자재 결함 정비 등

82) 자위대의 신속하고 적절한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시설 정비 등

라. 재정건전화

- 구조의 재검토를 통해 중점화와 효율화를 달성
 - 방위력정비의 효율화 및 합리화
 - － 방위장비품 취득 전반에 걸쳐 장기 계약을 활용하고, 민간의 생산품(民生品)을 사용, 원가 조사 등 장비 조달의 최적화를 도모하여 4,159억엔의 효율화·합리화 효과를 실현
 - 방재·감재분야에서 공공사업의 개별 보조화
 - － 방재·감재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교부금의 형태로 지원하던 것을 개별 보조를 통한 계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전환 (1,500억엔)
 - 농지의 집적·집약화 추진
 - － 농지 집적·집약화 협력금을 채권자의 농지를 집약화하기 위한 협력금에서 채무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금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중점 지원(168억엔)
 - 교원 배당구조의 재검토
 - － 영어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교원 신규채용자를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가진 비율을 지표로 하는, 영어전문지도를 위한 교원배당구조를 도입
- 사회보장관계비를 '고령화로 인한 증가분의 수준으로 유지' 한다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 방침을 꾸준히 달성
 - 2019년도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관계비의 (자연) 증가분이 4,800억엔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경제·재정재생계획」 방침을 꾸준히 달성하여 전년 대비 사회보장관계비의 실질적인 증가를 4,768억엔으로 억제
 - － 시세의 동향을 반영한 약가 개정(-503억엔), 개호납부금의 총보수비율 도입 등 지금까지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807억엔)
- (지방재정건전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지방세수 달성 결과, 대상재원의 절반이 부족했던 상황을 해소하고, 임시재정대책채(債) 발행량을 대폭(7,000억엔) 감축
 - 지방의 일반재정총액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한편, 유아교육 무상화의 첫해 경비 2,349억엔 전액을 국가가 부담

〈참고 II-4〉 2018 신경제·재정재생계획 개혁공정표

□ (개요) 2018 개혁공정표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기간(2019~2025년)의 첫해로서, 개혁 방향성을 검토하고 실시 시기 등을 명확히 함⁸³⁾

○ 사회보장분야

- 지역의료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도부현지사의 권한 방식에 대해 검토
- 보험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보통조정교부금 배분, 가입자의 성별·연령에 따라 조정된 표준의료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논의, 개호(간병)조정 교부금도 보험자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
-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법정외이월금 해소기한 및 해소수단을 담은 계획을 수립·공표(가시화), 가감산(加減算) 쌍방향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
- 급부와 부담 재검토로서, 바람직한 후기고령자의 청구부담 방식과 의료·개호의 '현역동등소득'의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는 한편, 바람직한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보험 등재 결정방식에 대해 검토함
- 기존 「재생계획」의 44개 전체 항목도 착실하게 추진

○ 사회자본 정비 등

-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에 따라 자본 효과가 높은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 개정 PFI법으로 설립된 원스톱 창구 제도 활용, 인구 20만 미만의 지방공공단체까지 PPP/PFI의 도입을 추진
- 콤팩트 플러스 네트워크의 입지적정화계획에 더하여 지역대중교통망형성계획의 작성 및 실시를,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⁸⁴⁾ 및 대중교통체계 재검토와 함께 추진

○ 지방행정 및 재정 개혁

- 수도·하수도 광역화 추진을 포함한 지속경영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에 따라 대책을 추진하고, 선진 사례 공표 및 다양한 PPP/PFI 도입을 촉진
- 지방재정의 전면적 투명화(가시화)를 추진하여, 주민 1인당 행정비용을 공표하고 결산정보 투명화를 추진

○ 문교·과학기술

- 성과에 관한 객관적·공통지표⁸⁵⁾를 통해 운영비교부금 배분(배분 대상금액은 700억엔, 중점지원평가까지 합치면 총 1,000억엔)
- 교육정책에 관한 실증연구의 진전 등을 근거로 한 교직원 정수의 증기 예측치 책정, 외부인재의 활용 등과 관련 학교에서 활동 방식 개혁을 추진, 원격교육 추진에 의한 교육의 정보화
- 혁신(이노베이션) 창출에 의한 세출 효율화를 추구하고, 증거(에비던스) 구축과 비용 효과의 투명화, 근거기반 정책입안(Evidence Based Policy Making; EBPM)화를 추진

83) 재무성, 「平成31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8.12.21.

84) 마치즈쿠리(일본의 마을만들기): 주민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실행하는 방식으로 도시나 마을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것을 의미

85) 지표는 2019년 여름경까지 고려하여 2020년부터 활용할 수 있게 함

III. 독일

□ FY2019: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출처

- Haushaltsgesetz 2019, 2018.7
- Finanzplan des Bundes 2018 bis 2022, 2018. 7
- Finanzbericht 2019, 2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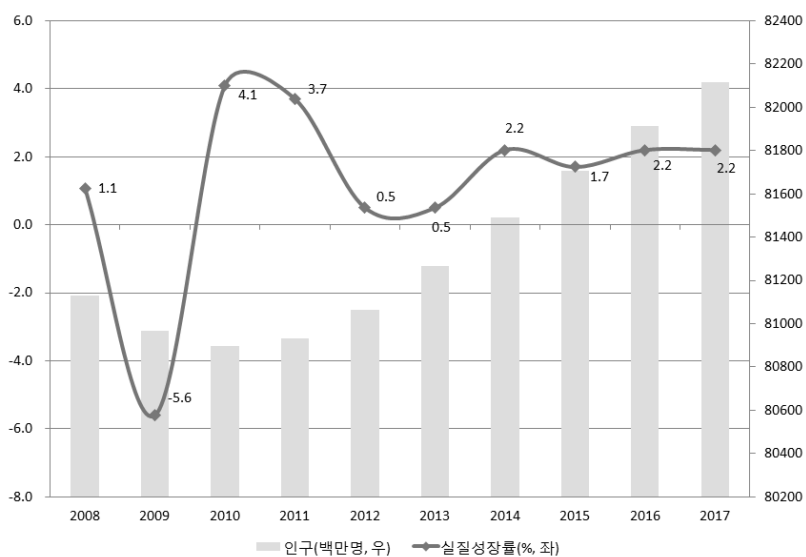
□ 환율: 1유로 = 약 1,301.94원(2018년도 1월~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2017년 경상GDP 4조 3,456억달러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7년 기준 86.5%(우리나라 2017년 기준 80.8%)

□ 인구: 8,211만명(2017년 추정치)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독일의 '18년 GDP 성장률 전망은 수출 및 민간투자의 증가세 둔화와 숙련 노동자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성장 약화, 무역분쟁 등으로 '17년 12월 성장률 전망치 대비 하향조정, 실질GDP 성장률은 '18년 2.0%, '19년 1.9%로 전망
- (재정 전망) '19년 재정수입은 3,568억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2년에는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755억유로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22년까지 GDP 대비 52% 수준을 달성할 전망

□ (예산기조) 인프라, 교육 및 연구, 주택, 디지털 기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 예산안 내용

- (세입) '19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8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유로 편성
- (지출) '19년 재정지출은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편성

□ 주요재정정책

- (교육·연구) 우수대학육성정책, 고등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 정부는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목표인 GDP 대비 3%의 R&D지출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
- (디지털) '19년 독일 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디지털화 지원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디지털 특별기금조성을 통해 독일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
- (교통 인프라)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교통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 교통 인프라계획2030 프로그램(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을 이행해 나갈 계획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2018.1.12.	FY2017 잠정결산 발표
2018.1.31.	2018년 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8.4.18.	독일 안정화프로그램 채택
2018.4.19.	독일4대 경제연구소, 2018년 경제전망 발표
2018.5.2.	예산안 및 FY2018-2022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한 기본수치 내각 결의
2018.5.9.	제153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8.7.6.	FY2019 예산안 및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2018.10.11.	가을경제전망 발표
2018.10.25.	제154차 세수추계 결과 발표
2018.11.23.	FY2019 예산안 연방하원 통과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2018년 12월 연방은행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1.6%, 실업률 4.8%, 소비자물가 상승률 1.4%로 각각 집계됨
 - (경제 전망) 실질 GDP 성장률을 '18년 1.5%, '19년 1.6%, '20년 1.6%로 전망
 - 지난 2018년 3분기에 자동차산업의 공급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전망이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총설비기동률 증가폭이 다소 둔화될 전망
 - 인구통계학적 제약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성장속도는 중기적 관점에서 점차 더딜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및 재정책대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는 외부 경제상황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전망
 - (재정 전망) 2018년 독일정부의 총회차 규모는 GDP 대비 2%를 달성할 전망이지만, 향후 재정책대정책으로 예산부담이 늘어날 전망
 - (위험요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의 잠재성장률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에너지 가격전망 변화가 2019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에 기인. 보호무역주의를 위험요인으로 지적

〈표 III-1〉 거시 전망 주요수치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실질 GDP 성장률	2.5	1.5	1.6	1.6
실업률	5.7	5.2	4.8	4.5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1.9	1.4	1.8

자료: 연방은행, *Outlook for the German economy*, 2018, 12, 14.

〈참고 III-1〉 2019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⁸⁶⁾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 전망) '19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1.0%, 실업률은 '18년보다 0.3%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
 - 성장 저해요인(headwinds)으로는 브렉시트, 무역분쟁, 국제 조세정책 환경 등을 언급함
 - '18년 12월 연방은행의 월간보고서에는 '19년 경제성장률을 1.6%, 실업률을 4.5%로 전망
- (정책방향) 디지털화, 전력망 확충, 핵심기술개발 등에 지원 확대
 -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⁸⁷⁾을 통해 기가비트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electricity grid) 구축 지원
 - 또한, 배터리 제조, 인공지능 등 미래형 핵심기술에 투자할 계획

〈표 III-2〉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전망)
실질 GDP 성장률	2.2	1.5	1.0
실업률	5.7	5.2	4.9
설비투자	3.7	4.5	2.3
건설	2.9	3.0	2.9
내수	2.0	1.8	1.4
수출	4.6	2.4	2.7
수입	4.8	3.4	4.0
임금	2.5	3.2	3.1

자료: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9*, 2019.1.31.

86) 경제에너지부, Presse, Pressemitteilung, 2018.10.11.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0130-jahreswirtschaftsbericht-2019-soziale-marktwirtschaft-staerken.html>

87) 연방내각은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4억유로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특별기금 조성 법안을 승인(2018.8.)

나. 재정 전망

- '19년 7월 연방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은 긍정적인 경제추세와 기록적인 고용으로 낙관적인 재정상황이 지속될 전망
 - (재정지출) '19년 예산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유로이며, '22년에는 3,755억유로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재정수입) '19년 재정수입은 3,568억유로(균형재정 유지)이며 '22년에는 점진적인 세수증액을 통해 3,755억유로 수준으로 증가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 '19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5%로 전망
 - (국가채무) 안정성장협약에 의하여 '19년까지 GDP 대비 60% 이하 목표수준을 조기 달성할 전망이며, '22년까지 52% 수준을 달성할 전망
 - '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19년 58%, '20년 55.75%로 전망

〈표 III-3〉 FY2019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18	2019	중기재정계획		
			2020	2021	2022
재정지출	3,436	3,568	3,632	3,693	3,755
전년 대비 증감률	3.9	3.8	1.8	1.7	1.7
재정수입	3,436	3,568	3,632	3,693	3,755
조세수입	3,213	3,330	3,338	3,468	3,597
신규차입	-	-	-	-	-
투자	374	379	379	379	379
국가채무(GDP 대비 %)	61	58	55.75	54	52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7.

[그림 III-1] 독일 국가채무 추이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7.

2 예산기조

- 인프라, 교육 및 연구, 주택, 디지털 기술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 (인프라투자)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지방투자기금, 건설지원 기금 등의 특별기금(Sondervermögen)⁸⁸⁾에 24억유로를 투자할 예정
 - (교육·연구) 교육, 과학, 연구분야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22년까지 총 95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내치) 연방경찰과 관세청 인력 강화를 위해 내무부 예산을 전년 대비 30억유로 증액할 계획
 - (국방·개발협력)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0억유로 증액될 예정이며, 국제경제개발협력 분야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한 97억유로(전년 대비 10억유로 증가)로 집계
 - (주택지원)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20년, '21년 각각 1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주택자녀수당(Baukindergeld)⁸⁹⁾을 통한 자가 부동산 취득을 촉진할 계획
- 연방하원은 11월 23일 정부안 대비 약 4억유로 감액된 3,564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 예산안을 통과⁹⁰⁾
 - 지난 7월 6일 연방정부는 3,568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하원에 상정

88) 특별기금(Sondervermögen): 특정한 목적을 위해 창설된 회계로 기본적으로는 각급 정부의 예산과는 별도의 회계를 가지며, 공기업과는 달리 그 자체로는 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특별기금의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원칙법에 규정된 연방과 주의 예산에 관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됨

89) 주택자녀수당은 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자녀 1명당 연 1,200유로를 10년간 지급

90) 연방정부, Presse, 2018.11.2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icherheit-fuer-kommende-generationen-1552714>

〈참고 III-2〉 FY2018 잠정결산

-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동일 수준을 나타내면서 신규차입 0 기록
 - (재정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3,436억유로로 기존 지출목표 대비 47억유로 높게 집계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EU 자체수입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11억 유로 상회하는 등 2018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47억유로 많은 3,483억유로로 집계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5%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⁹¹⁾ 기준 대비 0.5%p 높은 수치

〈표 III-4〉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단위: 억유로)

구분	2018(목표)	2018(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436	3,483	+47
재정수입	3,436	3,483	+47
조세수입	3,213	3,224	+11
세외수입	207	259	+53
목적예비비	16	-	-16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1.15.

[그림 III-2]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19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18년 대비 3.8% 증가한 3,568억유로 편성
 - (조세수입)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수가 크게 증가하여 '19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3.64% 증가한 3,330억유로 규모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수수료와 요금,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7년 대비 6.72% 증가한 238억유로 규모임

〈표 III-5〉 항목별 재정수입

(단위: 억유로, %)

구분	2018 (A)	2019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	3,213	3,330	3.64
소득세 ¹⁾	1,139	1,216	6.76
소득세·법인세 ²⁾	306	317	3.59
부가가치세	1,157	1,244	7.52
수입부가가치세	20	21	5.00
담배세	142	141	-0.7
코냑세	21	21	0.00
에너지세	328	328	0.00
전기세	69	69	0.00
기타연방세	32	-9	-128.13
세법상 계획 변경 및 수익 조정	0	-18	-
세외수입	223	238	6.72
재정수입	3,436	3,568	3.84

주: 1) 해당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분과 연말정산분을 의미

2) 해당 소득세는 분리과세분과 이차원천징수분을 의미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2018.8, p.63

91)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4, p.161)

나. 재정지출

- 연방정부의 지출은 2018년 3,436억유로에서 2022년 3,755억유로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교통인프라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기반투자, 교육·연구, 사회적 평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부) 「연방교육지원법(BAföG)」⁹²⁾ 개혁에 따라 '19년 1.1억유로에서 '21년 4.4억유로로 청년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⁹³⁾에 대한 지원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부 예산은 전년 대비 3% 증액된 181억유로 편성
 - (국방부) 군수장비 유지보수 및 국방인원 보충과 NATO 협의에 의한 독일연방군(Bundeswehr)의 해외공관 지출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1.4% 상승한 429억유로 편성
 - (경제협력개발부) 인도주의적 구호(Humanitäre Hilfe), 위기방지 지출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9년 3.0% 상승한 97억유로 편성
 - (환경부)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Internationale Klimaschutzinitiative)⁹⁴⁾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14.6% 상승한 22.6억유로의 예산 편성
 - (에너지경제부) 혁신 및 성장촉진 연구(Hightech-Strategie) 등 R&D펀드에 1.3억유로 증액, 중소기업 디지털 활성화를 위해 0.3억유로 추가 지원 등 전년 대비 0.8% 감액된 80.5억유로의 예산 편성
 -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22년까지 계획된 간선도로망 건설, 대기질개선프로그램(Sofortprogramm SaubereLuft 2017-2020)⁹⁵⁾을 지원하는 등 교통·디지털 인프라부 예산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90억유로의 예산 편성

92) 연방교육지원법(BAföG): 197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방교육지원법」은 청년들에게 생활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지원 대출법이며, 주거비, 중산층 지원, 채무감축을 위해 기존 지원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예: 기존 매월 250유로를 지원했던 주거비를 325유로로 인상, 생활비 또한 기존 최대 735유로에서 850유로로 인상). 관련법은 2019년 가을에 입법화될 예정(연방교육연구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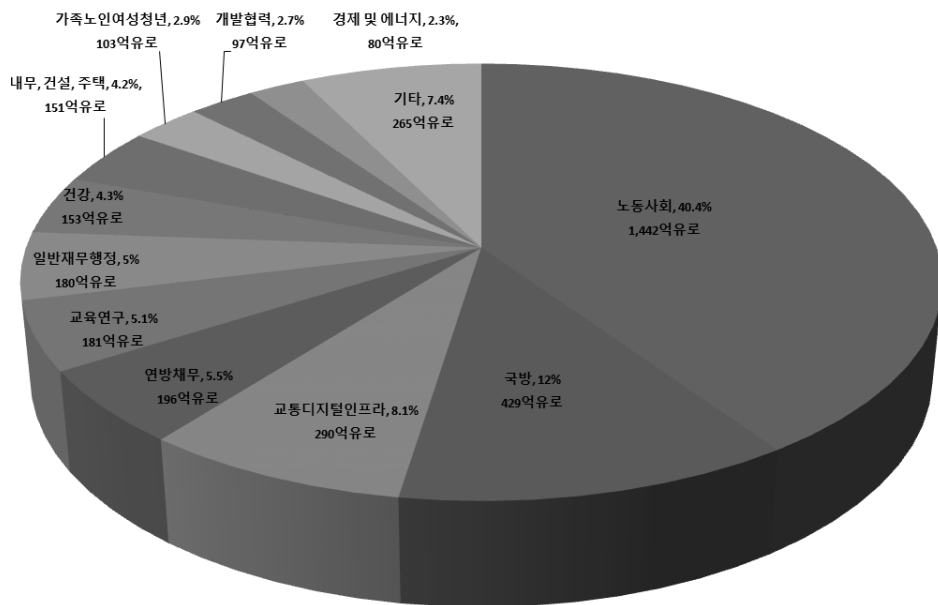
93) 고등교육협약 2020(Hochschulpakt 2020): 고등교육기관이 지역수요에 맞춰 학습여건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 2015~2020년간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연방재무부, 2018 ; 박동, 2016)

94) 국제기후보호 이니셔티브 기금: 동 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및 생물 다양성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008년 설립되었으며, 펀드 재원은 배출권 거래의 경매수익 및 환경부(BMU)의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기후보호 기금은 2019년 2천만유로에서 2021년까지 5천만유로까지 확대할 계획

95) 대기질개선프로그램 2017-2020: 동 프로그램은 전기차전환정책, 노후디젤차량개선, 도심차량시스템 디지털화 등 2017년에 새롭게 도입된 긴급프로그램임

- (노동사회부) 구직자 지원, 실업수당(ALG II; Arbeitslosengeld II) 지출증가로 3.6%(20억 유로) 증액된 1,442억유로 편성
-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치분소득 강화를 위해 1인당 자녀양육비 지원⁹⁶⁾, 주간 탁아소 등 보육시설 질 향상과 전일제학교 지원을 위해 '19년~'22년 동안 각각 55억유로를 증액할 계획, '19년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예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103억유로 편성
- (내무부) 연방경찰(Bundespolizei) 및 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에 지원하는 등 국 내보안에 54억유로 편성, 내무부 예산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150억유로 편성

[그림 III-3] 2019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자료: 연방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Regierungsentwurf zum Bundeshaushalt 2019 und Finanzplan bis 2022, 2018.7.6.

96) '19년 7월 1일부터 매월 10유로씩 증액(연방내각에서 저소득층과 중간소득가정의 가치분소득 강화를 위한 가족구제법(Familienentlastungsgesetzes) 초안 채택)

〈표 III-6〉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18 (A)	2019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41.85	47.37	5.52	13.2
연방하원	973.69	974.86	1.17	0.1
연방상원	30.44	37.50	7.06	23.2
총리실	3,038.05	3,097.01	58.96	1.9
외무부	5,450.63	5,573.39	122.76	2.3
내무부	14,133.57	15,063.31	929.74	6.6
법무부	792.35	876.58	84.23	10.6
재무부	6,554.91	7,179.43	624.52	9.5
경제에너지부	8,115.03	8,053.97	-61.06	-0.8
식품농업부	6,019.16	6,245.34	226.18	3.8
노동사회부	139,179.76	144,206.16	5,026.40	3.6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27,852.06	29,003.80	1,151.74	4.1
국방부	38,519.57	42,901.28	4,381.71	11.4
보건부	15,207.13	15,270.40	63.27	0.4
환경부	1,978.82	2,267.08	288.26	14.6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0,226.15	10,304.77	78.62	0.8
헌법재판소	30.81	34.34	3.53	11.4
회계감사원	148.78	162.04	13.26	8.9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17.77	25.22	7.45	41.9
경제협력개발부	9,441.83	9,725.34	283.51	3.0
교육연구부	17,614.03	18,145.54	531.51	3.0
연방채무	19,414.05	19,591.19	177.14	0.9
일반조세행정	18,816.54	18,014.08	-802.46	-4.3
재정지출	343,600.00	356,800.00	13,200	3.8

자료: 연방재무부, *Hausaltsgesetz 2019*, 2019.8

〈표 III-7〉 2017-2022 분야별 주요 연방지출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회보장	167,707	172,137	177,496	183,065	189,927	194,160
국방	31,196	32,805	36,886	36,861	37,747	37,713
영양·농업·건강	1,222	1,420	1,558	1,658	1,629	1,604
경제·에너지	5,156	6,427	5,658	7,848	6,036	5,840
교통	26,488	26,469	27,557	26,243	27,713	27,790
건설	2,738	3,325	3,520	3,284	3,261	2,129
연구·교육·문화	23,026	24,245	24,814	24,851	24,589	24,648
환경보호	1,413	1,876	2,360	2,318	2,057	2,010
스포츠	161	182	189	191	188	188
내무·이민	7,283	7,680	8,069	8,109	8,010	8,074
경제협력개발	8,330	9,389	9,643	8,705	8,537	8,537
일반재무	26,688	27,312	28,551	29,010	29,338	29,606
특별기금	770	5,350	3,157	3,000	2,962	2,939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2018,8, pp. 18-20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 (교육·연구) 우수대학육성정책, 고등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독일정부는 유럽 2020(Europe 2020 strategy)⁹⁷⁾ 목표인 GDP 대비 3%의 R&D지출을 2025년까지 3.5%로 확대할 계획⁹⁸⁾
 - (우수대학육성정책) 독일 최상위 대학의 연구지원정책인 우수대학정책(Exzellenzstrategie)⁹⁹⁾을 위해 '19년 4.6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고등교육 지원) 2015~2020년까지 1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이었던 고등교육협약(Hochschul-pakt)을 2021년 1.5억유로, 2022년 6억유로로 지원을 연장할 계획
 - (직업훈련) 디지털 미디어분야 관련 직업훈련 4.0(vocational Training 4.0)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직업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식이전을 지원할 계획
 - (바이오산업 육성) 신경퇴행질환, 암 전이연구, 당뇨병, 심혈관, 감염 및 폐질환 등 독일 건강연구센터 연구지원을 위해 '19년 2.5억유로 투자
- (디지털) '19년 독일정부는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디지털화 지원에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디지털 특별기금조성을 통한 독일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¹⁰⁰⁾
 - (특별기금)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24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 조성
 - (중소기업지원) 연방중소기업혁신프로그램(ZIM) 규모는 '19년 0.1억유로 증가한 5.6억유로로 집계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 및 사업프로세스 디지털화와 정보통신 기술 및 테스트베드 구축에 지원할 계획

97) 유럽 2020전략: 유럽집행위는 고용창출, R&D투자, 기후변화 및 에너지, 교육, 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 9가지 주요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매년 진행현황을 모니터링하여 2020년까지 유럽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EC, 2018)

98)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연방경제에너지부,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8

99) 우수대학육성정책: 독일은 '18년 대학의 첨단연구 지원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연간 5.3억유로(연방정부 75%, 지방정부 25% 지원)를 지출할 계획(연방교육연구부, 2018)

100)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경제에너지부, 2019년 예산안 설명자료

- (초소형 전자공학) '25년까지 유럽의 전자제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3년 5월 초소형 및 나노전자 유럽집행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독일 정부는 '19~'22년 동안 1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교통 인프라) 연방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교통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렸으며¹⁰¹⁾, 교통인프라 계획2030 프로그램(Federal Transport Infrastructure Plan)을 이행해 나갈 계획
 - (연방 교통인프라 계획) 교통인프라계획 2030 프로그램은 운송인프라의 유지 보수 및 수리뿐만 아니라 1,000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위해 총 2,696억유로를 투자할 계획¹⁰²⁾
 - 연방교통인프라부는 10~15년마다 연방운송인프라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연방교통인프라계획 2003에서 2016년 8월 연방교통인프라계획 2030으로 기본계획을 확장함
 - 이 중, 도로 49.3%, 철도 41.6%, 수로 9.1%에 비중을 둘 계획
 - (민관협력사업) 연방정부는 '17년 고속도로 건설, 운영, 유지보수, 자금조달 및 용자를 관리하는 책임을 민간기업에 위임하는 법안을 상정한 후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연방도로에 약 22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 (대기오염) 디젤차량의 이산화질소 배출 감소를 위해 총 10억유로를 투자할 계획

나. 재정건전화

- 연방내각은 EU 회원국들의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 Council)에 안정화 프로그램 제출
 - (경제 전망) 강한 내수시장, 수출호조 추세, 낮은 이자비용으로 2018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2.4%이며 이는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호황으로 설명
 - '19년 이후 점진적인 하락 전망
 - (재정 전망) 독일의 재정수지는 '17년 GDP 대비 1.1%의 흑자를 달성했으며,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높은 흑자로 '19년에는 1.0% 흑자 전망

101) 독일의 교통인프라투자는 '12년 101억유로에서 '19년 148억유로 대폭 증가

102)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2018) Infrastruktur als Grundlage für Wachstum, Arbeit und Wohlstand

- (국가채무) '18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1%p 감소한 61%로 전망되며, '20년까지 계획된 안정성장협약 상한선인 GDP 대비 60% 이하를 '19년에 조기에 달성할 전망
- o (재정정책) 성장 친화적 재정건전화(growth friendly consolidation) 정책으로 교육·연구, 인프라에 집중 투자

〈표 III-8〉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01	2022
실질 GDP 성장률	2.2	2.4	1.9	1.3	1.3	1.3
재정수지	1.1	1.0	1.25	1.5	1.5	
구조적 재정수지	1.3	0.5	0.75	1.0	1.5	
국가채무	64.1	61	58.25	55.75	53	

자료: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18*, 2018.4.18

- 연방 및 각 주의 재정상황을 평가하고 건전화계획을 수립하는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에서는 독일의 재정현황 및 주정부 재정건전화에 대해 논의¹⁰³⁾
 - o (재정) 2017년 독일의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 대비 1.5%이며, 2018년에는 GDP 대비 1.0%의 구조적 재정흑자를 달성할 전망
 - o (주정부 재정건전화 계획) 위원회는 브레멘, 자알란트에 대해 '17년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목표¹⁰⁴⁾ 충족과, 2020년까지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재건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4개 주(베르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자알란트, 브레멘)에 대한 건전화계획을 2016년 까지 수립함
 - 이후 베를린,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브레멘, 자알란트 등 2개 주에 대한 건전화계획을 재수립

103) 독일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8.6.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Oeffentliche_Finzen/Foederales_Finanzbeziehungen/Stabilitaetsrat/2018-06-26-sitzung-des-stabilitaetsrates.html

104) 「채무제한법」상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목표(GDP 대비 0.35% 이하 달성)

다. 에너지 정책¹⁰⁵⁾

- '19년 연방정부는 58.7억유로 규모의 에너지 및 기후기금(Energie- und Klimafonds)¹⁰⁶⁾을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독일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수입) 탄소배출권 수익금 감액으로 전년 대비 2.2% 하락
 - (지출) 프로그램지출은 총 46억유로로 집계되었고 건물개보수지원프로그램(KfW-Programme zur CO₂ Gebäudesanierung)¹⁰⁷⁾과 대기청정2017-2020(Aktionsprogramm Saubere Luft 2017-2020)¹⁰⁸⁾에 우선순위 설정
 - CO₂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와 준비금전입 관련 지출은 하락함

〈표 III-9〉 에너지 및 기후 기금 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60.0	58.7	56.4	48.8	47.9
탄소배출권 수익금	15.9	12.1	14.4	17.2	19.0
연방정부 지원금	28.0	30.5	29.5	29.1	28.9
준비금	16.1	16.1	12.5	2.5	
지출	60.0	58.7	56.4	48.8	47.9
CO ₂ 저감 건물 보수지원 및 에너지 효율적 도시 재개발	13.8	19.8	21.4	20.3	18.6
전기자동차 프로그램	6.7	5.8	7.6	6.1	6.2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18.0	14.8	17.0	18.2	48.6
기후변화 프로그램	2.1	2.3	3.8	4.5	4.5
에너지 집약 기업 보조	2.9	2.9	3.1	3.6	3.8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0.4	0.6	1.0	1.0	1.2
준비금전입	16.1	12.5	2.5	-	-
세계부족분	-	-	-	-4.9	-5.0

출처: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pp. 43-44

105)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19*, pp. 43-44

106) 2011년 이후 에너지 및 기후기금을 통한 안전하고 환경적인 재생에너지전환 정책 시행

107) 건물개보수지원프로그램: 국가기후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거용 건물에 m²당 최소 40kg의 CO₂ 삭감 및 에너지 효율을 목표로 저금리 장기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108) 대기청정 2017-2020: 2017년 긴급 편성된 대기청정 2017-2020 프로그램은 도시교통의 전동화, 교통시스템 디지털화, 디젤버스 개조(retrofit)를 위해 약 10억유로 편성

IV. 프랑스

□ FY2019: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출처

- 2019년 예산법안(PLF 2019: L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9) 및 부속서류
 - Soutenir le travail investir pour l'avenir, Évaluations préalables des articles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등
- 2019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LFSS 2019: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 환율: 1유로 = 약 1,298.63원(2018년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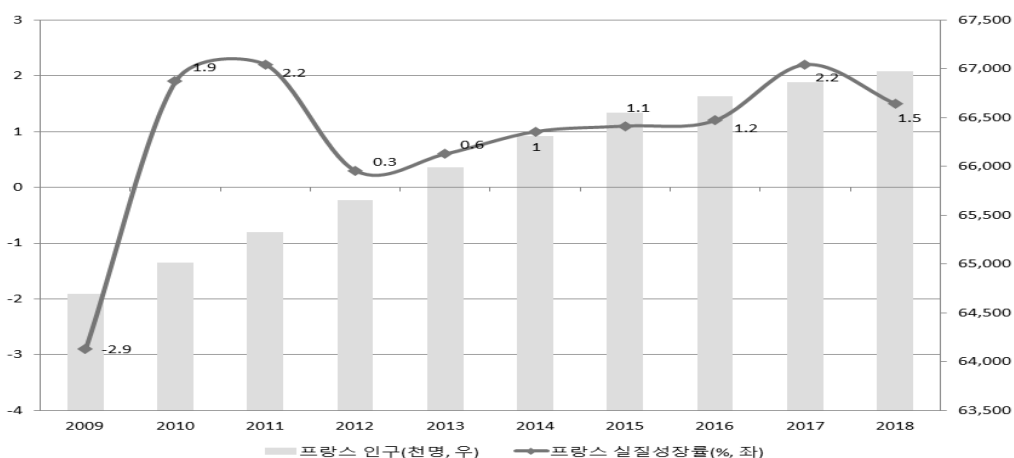
□ 경제규모: 2018년 경상GDP 3조 678억 달러(OECD Statistics)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63.6%*(2018년 추정치, OECD Statistics)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80.8%

□ 인구: 약 6,698만명(2018년 기준, OECD Statistics)

□ 지난 10년간 실질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성장) 유로지역의 지속적 경기회복 및 글로벌 수요의 개선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 2018년과 2019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재정 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1.9%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적자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예산기조)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 ② 자국민 보호 ③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함

□ 예산안 내용

- (세입) 2019년 재정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9%(149억유로) 감소한 2,914억 유로로 전망
- (지출) 2019년 재정지출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1%(40억유로) 증가한 3,908억 유로로 전망

□ 주요재정정책

- (자유로운 경제 활동) 경기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실업자를 모두 지원 하여 구매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자국민 보호)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택 개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8. 4. 11.	2018-2022 안정화 프로그램 및 국가개혁 프로그램 발표	2018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8. 5. 23.	FY2017 결산보고서 발표	
2018. 6. 5.	FY2017 사회보장예산 결산보고서 발표	
2018. 6. 18.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발표	
2018. 8. 2.	2018년 상반기 예산집행결과 발표	2018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8. 9. 24.	FY2019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발표	
2018. 9. 25.	FY2019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발표	
2018. 11. 7.	FY2018 수정예산법안 발표	
2018. 11. 26.	FY2018 수정예산법안 의회승인	2018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8. 12. 22.	FY2019 사회보장예산법(LFSS: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최종 승인 및 공표	
2018. 12. 28.	FY2019 예산법(LF: Loi de Finances) 최종 승인 및 공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전망

- 유로지역의 지속적 경기회복 및 글로벌 수요의 개선으로 프랑스 경제는 지속적 성장세를 이어가, 2018년과 2019년에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가계소비) 세금 경감 조치로 인해 가계구매력이 높아져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은 2018년 1.6%로 반등되었고, 2019년에 속도가 더 빨라져 1.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기업투자) 경기전망 및 금융 상태의 개선으로 2018년 크게 증가한 기업투자는 2019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8년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무역) 꾸준한 글로벌 수요로 인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고, 국내수요 회복세에 따라 수입도 3.1% 증가할 전망
 - (고용) 경기개선과 노동시장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이어져, 2019년 17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전망
 - (물가) 2019년 에너지가격 상승이 물가의 상승압박으로 작용하지만 그 정도는 2018년에 비해 약해져 1.4%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전망

〈표 IV-1〉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8년 4월 안정화프로그램		2019년 예산안	
	2018	2019	2018	2019
GDP성장률	2.0	1.9	1.7	1.7
수입	4.1	4.1	2.5	3.1
가계소비지출	1.6	1.9	1.6	1.7
기업투자 ¹⁾	4.4	3.5	4.6	3.0
총고정자본형성	3.9	3.3	3.3	2.1
수출	4.9	4.6	3.7	3.6
물가상승률	1.4	1.2	1.8	1.4

주: 1) 건설투자 제외

자료: Rapport économique, social et financier

나.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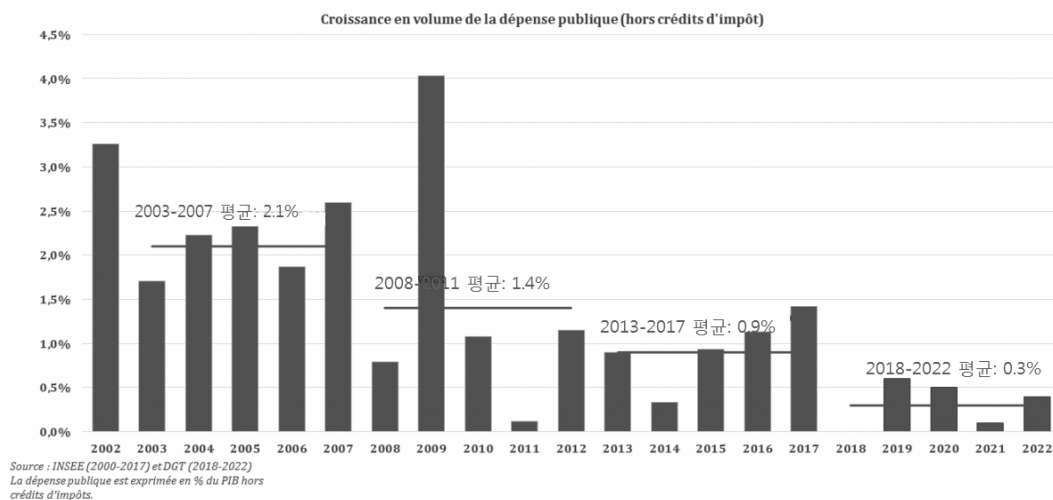
1) 세입 및 세출 전망

□ (지출) 2018년 공공지출 증가율은 0%를 기록하였고, 2019년에도 0.6%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성장률(1.7%)보다 훨씬 낮은 수준

-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2022년 기간 동안 평균 0.3% 정도로 낮게 유지할 것이며, 이로 인해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2017년 45.3%에서 2019년 44.2%까지 하락할 전망
- 정부의 지출통제 노력에 따라, 2019년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의 실질 증가율은 0.8%이며, 이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

* 조정가능 지출은 일반 예산의 세출, 조정가능 특별회계의 세출 등 정부가 직접 통제가능한 지출을 의미

[그림 IV-1] 재정지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프랑스 재무부, PLF 2019

□ (수입) 2019년 재정수입은 2,914억유로로 2018년 예산법 대비 84억유로, 2018년 집행 전망 대비 149억유로 감소할 전망

- 세금부담을 줄이고 가계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도록 하려는 마크롱 정부의 의지가 2019년에도 이어져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18년 45.0%에서 44.2%로 감소할 전망
 - 조세수입은 2,789억유로로 2018년 본예산법 대비 77억유로, 2018년 수정예산 대비 140억유로 감소
 - 세외수입은 12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표 IV-2〉 FY2019 예산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7 결산	2018		2019 예산법안
		본예산	수정	
재정지출(Dépenses BG + PSR)	382,8	386,5	386,8	390,8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22,6	326,3	325,9	328,8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0,2	60,3	60,9	62,0
지방자치단체 이전 (Pré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8	40,3	40,3	40,5
EU 부담금 (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6,4	19,9	20,6	21,5
재정수입(Recettes nettes)	309,4	299,8	306,3	291,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95,6	286,6	292,9	278,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3,8	13,2	13,4	12,5
특별회계(Solde du comptes spéciaux)	5,5	1,0	-0,8	0,6
총재정수지(Solde General)	-67,7	-85,7	-81,3	-98,7

자료: PLF 2019

〈표 IV-3〉 2017-2022년 재정지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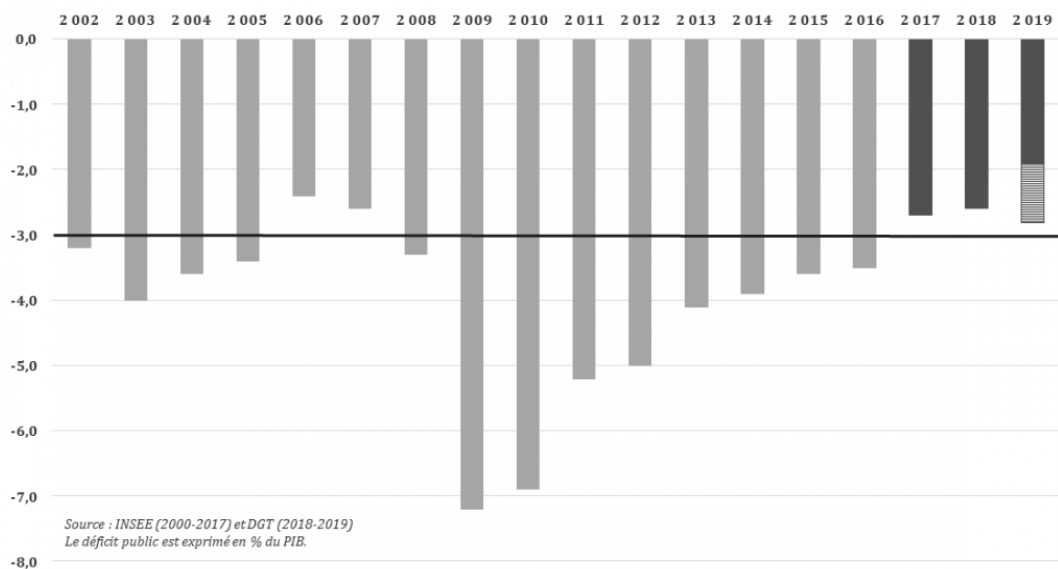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세부담률	45,3	45,0	44,2	44,6	44,6	44,5
재정지출	55,1	54,6	54,0	53,3	52,5	51,8
재정지출 증가율(%)	1,4	0,0	0,6	0,5	0,1	0,4

자료: PLF 2019

2) 재정수지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9년 1.9%¹⁰⁹⁾를 기록할 전망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재정적자 3%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의 점진적 개선으로 2009년에 시작된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¹¹⁰⁾가 2018년 6월 종료됨
 - 재정수지 적지는 감소세를 계속 이어가 2022년에는 GDP 대비 0.3%까지 낮아져 재정수지 균형에 근접할 전망

[그림 IV-2]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주: 2019년 재정적자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를 일반감면으로 전환하는 특별조치를 제외할 경우 1.9%, 포함할 경우 2.8% 전망

출처: PLF 2019

109)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로 전환되는 일시적 효과를 제외한 수치

110) 초과적자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거나 채무가 60%를 초과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EU의 조치로, 프랑스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2일 초과적자시정절차의 종료가 결정됨

3) 국가채무 전망

-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에 다소 안정화되어 2018년보다 0.1%p 낮은 98.6%를 기록할 전망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¹¹¹⁾ 추가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자 감축 노력 및 경제성장에 따라 2019년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이후 5년 동안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하여 국가채무는 하향 추세를 이어가 2022년에 9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IV-4〉 2017-2022년 재정수지 및 채무비율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조치 제외 재정수지	-2.6	-2.4	-1.9	-	-	-
구조적 재정수지	-2.3	-2.2	-2.0	-	-	-
총재정수지	-2.7	-2.6	-2.8	-1.4	-0.7	-0.3
국가채무	98.5	98.7	98.6	97.5	95.3	92.7

자료: PLF 2019

〈참고 IV-1〉 2018년 수정예산법안(PLFR: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8)

- FY2018 수정예산법안(PLFR : Projet loi de finance rectificative 2018) 발표(2018.11.7.)¹⁾ 및 채택(2018.11.26.)²⁾³⁾
 - (경제 전망)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1.7%로 2018년 예산법 및 2019년 예산법안의 전망치와 동일
 - (재정 전망) 2018년 수정예산법안의 재정적자는 본예산 대비 57억유로 감소한 800억 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111)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 Le credit d'imot pour la competitivite et l'emploi)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완화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는 공제분 총당으로 인해 2019년 일시적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가 0.8%p 악화됨. CICE는 2013년 1월 처음 도입되어, 지급한 총임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6%(2018년 기준)을 적용하였음.

〈표 참고 IV-1-1〉 FY2018 수정예산법안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8년 예산법안(PLF)	2018년 수정예산법안(PLFR)
재정지출	386.5	387.1
재정수입	299.8	306.9
조세수입	286.6	293.3
세외수입	13.2	13.6
특별회계	1.0	0.2
총재정수지	-85.7	-80.0

출처: PLFR 2016

〈표 참고 IV-1-2〉 FY2018 수정예산법안 - 총지출 기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8년 예산법안(PLF)	2018년 수정예산법안(PLFR)	PLFR-PLF
총지출	425.4	425.8	+0.3
조정가능 지출	257.9	257.3	-0.6
부처별 지출	241.3	240.9	-0.4
목적세로 충당된 지출한도	9.1	9.1	-0.0
조정가능 특별회계 및 부속예산	13.3	13.1	-0.2
중앙정부 예산 재조정	-5.8	-5.8	-0.0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47.0	46.8	-0.2
특별할당회계의 연금지출	56.5	56.7	+0.1
특별할당회계의 기타지출	1.8	1.6	-0.2
유럽연합(EU) 부담금	19.9	20.7	+0.7
부채부담	41.2	41.7	+0.5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1.1	1.1	-

출처: PLFR 2016

1) 프랑스 예산국, 2018.11.7.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9/presentation-en-conseil-ministres-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8#_W-jK1vkS-Uk(검색일자: 2018.12.26.)

2) 프랑스 예산국, 2018.11.28.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adoption-en-nouvelle-lecture-projet-loi-finances-rectificative-2018-assemblee-nationale#_XAXeBpkS-Uk(검색일자: 2018.12.26.)

3) 2018년 수정예산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년 11월 제1호 재정동향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EB%85%84-11%EC%9B%94-%EC%A0%9C1%ED%98%B8-%EC%9E%AC%EC%A0%95%EB%8F%99%ED%96%A5-/525641

2 예산기조

-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① 자유로운 경제활동 ② 자국민 보호 ③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기조로 함
 - (자유로운 경제활동) 경기 개선 상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근로자와 실업자를 모두 지원하여 구매력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함
 - －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이 면제되고 직업수당을 인상하는 등, 근로자 구매력 상승에 초점을 맞춤
 - (자국민 보호) 빈곤 개선 정책에 투자하고, 국방 및 정의 부문 예산을 확대 편성함
 - － 사회보장지출 증가율을 2019년과 2020년에 0.3%로 제한하면서, 사회보장재원을 재할당하여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돕도록 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주택 개혁을 지속하고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
-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를 달성한 이후,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지속하기 위하여 공공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2018-2022년 동안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을 0.3%로 유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3 예산안 내용(PLF 2019)

- 2019년 예산법안(PLF 2019: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은 2018년 9월 24일에 발표되고, 12월 20일 의회에서 채택됨¹¹²⁾

가. 세입

- 2019년 재정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9%(149억유로) 감소한 2,914억유로로 전망
 - 2019년 조세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4.8%(140억유로) 감소한 2,789억유로로 전망
 - (소득세) 새로운 세금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세금징수 지연으로 2018년 대비 26억유로 감소할 전망
 - (법인세)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에 따라 법인세가 58억유로 증가할 전망
 - (에너지제품소비세) 에너지제품소비세의 인상 및 일부 디젤 사용자들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폐지로 37억유로 증가할 전망*
 - * 다만, 세금 인상 중단을 요구하는 노란조끼 운동(le Mouvement des Gilets Jaunes)¹¹³⁾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12월 4일 시위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류세 인상을 반 년 동안 보류하겠다고 밝혔으며¹¹⁴⁾, 이에 따라 세수 변동이 생길 것으로 예상됨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사회보장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66억유로 감소할 전망
 - 2019년 세외수입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6.7%(9억유로) 감소한 125억유로로 전망
- 2019년 예산법안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9년의 세수 감소 효과는 248억유로로 전망됨
 -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가계부문은 60억유로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 2018년의 20억유로보다 크게 나타남

112) 프랑스 예산국, Le PLF 2019, définitivement adopté, 2018,12,20.

https://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actualites/2018/plf-2019-definitivement-adopte#.XCLV5_kS-Uk

113) 노란조끼 운동은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류세가 점진적으로 인상돼왔고, 지난 1년 동안 경유가격이 23%, 휘발유가격이 15% 증가한 데 이어 유류세 추가 인상계획까지 발표함에 따라 발발한 시위

114) 프랑스 정부, Le Premier ministre annonce un moratoire sur plusieurs mesures fiscales, 2018,12,4.

<https://www.gouvernement.fr/le-premier-ministre-annonce-un-moratoire-sur-plusieurs-mesures-fiscales>

(검색일자: 2018.12.26.)

- 주택세 80% 삭감의 지속의 효과로 38억유로, 사회보장일반기여금 조정의 효과로 41억 유로의 세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됨
- 세부담 완화는 에너지세 인상으로 인해 19억유로 증가를 상쇄함
-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에 따라 기업의 세부담이 약 20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적자는 2019년에 국가가 보전하게 됨

〈표 IV-5〉 FY2018 세입전망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7 결산	2018 본예산	2018 수정예산	2019 예산법안
I. 재정수입	309.4	299.8	306.3	291.4
II. 조세수입	295.6	286.6	292.9	278.9
소득세	73.0	72.5	73.1	70.5
법인세	35.7	25.9	25.7	31.5
부가가치세	11.1	13.6	13.3	17.0
에너지제품소비세	152.4	154.6	157.0	130.3
기타 세입	23.4	20.1	23.8	29.6
III. 세외수입	13.8	13.2	13.4	12.5

자료: PLF 2019

〈표 IV-6〉 2019년 예산법안 주요 세제개편안

(단위: 십억유로)

주요내용	2018년 세수효과	2019년 세수효과
가계부문	-1.8	-6.0
가구의 80%에 대해 주택세 삭감	-3.2	-3.8
초과 근로에 대한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	-0.6
자본소득에 대한 단일세(PFU: prélèvement forfaitaire unique) 시행	-1.6	-0.3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 인하	-	-0.3
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 변동	4.4	-4.1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존 세액공제 제도(CITE)의 연장	-	0.8

주요내용	2018년 세수효과	2019년 세수효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l'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 IFI) 신설	-3.2	-
가구의 근로자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1.0	-
학생 사회보장부담금 면제	-0.2	-
담배세 인상	0.6	0.4
에너지세 인상	2.4	1.9
기업부문	-8.4	-18.8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	-	-20.4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3.7	-0.5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	-1.2	-2.4
일시적인 법인세 다섯 번째 과표구간 설정		1.5
50인 이하 기업에 대해 사회보장세 폐지		-0.5
법인세 추가과세	-5.1	0.2
에너지세 인상	1.3	1.0
일부 디젤 사용자들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폐지		1.0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예산할당	0.3	1.3
총합계	-10.2	-24.8

자료: PLF 2019

나. 세출

- 2019년 재정지출은 2018년 수정전망 대비 1%(40억유로) 증가한 3,908억유로로 전망
 - 마크롱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확인하는 이번 예산안은 주권을 강조하여 국방(17억유로), 치안(3억유로), 정의(3억유로), 그리고 이민 및 통합정책(2억유로)의 미션지출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미션지출이 13억유로 증가함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programme Action publique 2022)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공공 정책 변화의 미션지출이 크게 증가함

- 2019년의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은 2018-2022 중장기예산법안(LPFP)의 전망보다 6억유로 증가한 2,601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영도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미션지출에서 개인주거지원의 수혜자 조정 개혁 지연에 따른 지출 증가, 이민자 관련 지출 증가에 따라 조정가능지출이 전망 대비 증가함
- 2019년 총정부지출(Depenses totales de l'Etat)은 2018-2022 중장기예산법안(LPFP)의 전망보다 13억유로 낮은 4,313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 연금지출 인상률을 2019년과 2020년에 0.3%로 제한하면서 총정부지출이 중장기예산법안 전망 대비 하락함
 - 반면 유럽연합 부담금은 중장기예산법안 전망 대비 증가함

〈표 IV-7〉 정부지출

(단위: 십억유로, 실질가치 기준)

구분	2018년 예산법	중장기 예산법안 2019년 지출전망	2019년 예산법안
총정부지출(Depenses totales de l'Etat)	425.4	432.6	431.3
조정가능 지출(dépenses pilotables)	257.9	259.5	260.1
예산지출(Crédits budgétaires)	241.3	242.6	243.3
목적세로 충당된 지출(Taxes et recettes affectées)	9.1	8.9	9.4
특별회계 및 부속예산(Budgets annexes et comptes spéciaux)	13.3	13.8	13.2
중앙정부 예산 재조정(Retraitements des flux internes au budget de l'Etat)	-5.8	-5.9	-5.8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Transferts aux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7.0	47.1	47.3
특별할당회계 연금지출(Dépenses du CAS Pensions)	56.5	57.8	57.3
특별할당회계 기타지출(Autres dépenses de comptes d'affectation spéciale)	1.8	2.0	2.0
유럽연합 부담금(Prélèvement sur recettes au profit de l'UE)	19.9	23.3	21.5
이자지출(Charge de la dette)	41.2	41.9	42.1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s d'avenir)	1.1	1.0	1.0

출처: PLF 2019

〈표 IV-8〉 2019 미션별 세출 내역

(단위: 백만유로)

31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¹⁾	2018 본예산 (A)	2019 예산법안 (B)	증감률 (B-A) (%)
공공정책변화(Action et transformation publiques)	20	310	1,450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2,863	2,724	-4.86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2,147	2,241	4.38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3,184	2,612	-17.96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2,680	3,081	14.96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2,461	2,302	-6.46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7,219	16,048	-6.80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관(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521	536	2.88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124	203	63.71
문화(Culture)	2,724	2,724	0.00
국방(Défense)	34,201	35,889	4.94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1,381	1,229	-11.01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 (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10,387	10,594	1.99
경제(Économie)	1,624	1,706	5.05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 (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²⁾	580	411	-29.14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51,485	52,309	1.60
공공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et des ressources humaines)	8,150	7,754	-4.86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1,381	1,694	22.66
정의(Justice)	6,978	7,291	4.49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555	581	4.68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018	2,439	20.86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992	991	-0.10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27,404	27,902	1.82

31개 미션 (지불예산(credit de paiement, CP)) ¹⁾	2018 본예산 (A)	2019 예산법안 (B)	증감률 (B-A) (%)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332	6,284	-0.76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662	3,433	-6.25
보건의료(Santé)	1,376	1,424	3.49
치안(Sécurités)	13,318	13,541	1.67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19,444	20,928	7.63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959	999	4.17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15,173	12,233	-19.38
미션별 합계	241,342	242,414	0.44

주: 1) 투입승인(AE)은 투자될 수 있는 예산지출상한액이며, 지불예산(CP)은 투입승인의 한도 내에서 체결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회계연도 동안 지출명령이 될 수 있거나 지불될 수 있는 지출상한액을 의미(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2) 유럽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부담금과 채무부담 제외

자료: PLF 2019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

- 2019년 프랑스 예산안은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구매력을 높여 경기 선순환이 작용하도록 함
 - (자유로운 경제활동: 모든 프랑스 국민에 대해 세부담을 낮춤) 세부담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춤
 - 2019년 9월 1일부터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자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구매력 상승이 기대됨
 - 전체 가구의 80%에 대한 주택세 삭감 지속
 - 직업수당(prime d'activité)¹¹⁵⁾을 2018년 9월 20유로 인상한 데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해 20유로씩 추가로 인상할 예정
 -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업활동에 대한 유인을 강화) 기업활동에 대한 비용 절감 등의 정책을 시행
 - 250명 미만 기업에 대해 이익분배형 사회보장기여금 폐지
 - 실업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PIC: plan d'investissement dans les compétences)에 25억유로 투자
 - 법인세가 31%로 인하되며 유럽 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었고, 수익 50만유로 이하 기업에 대해선 28%의 법인세가 적용됨
 -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시행¹¹⁶⁾
 -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업 지원 정책을 폐지하거나 전환하고, 복잡한 세제지원 혜택을 간소화함
 - 비효율적인 세금 20개를 없애거나 통합함
 - 5개 조세지출도 없애거나 규모를 삭감함

115) 저소득 직장인들에게 생계 보조비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6년 1월부터 시행됨.

116) <참고 IV-2>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을 참고 바람.

- (자국민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방과 정의(justice) 관련 지출을 강화함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미션과 ‘노동과 고용’의 미션지출에서 각각 1억 7,500만유로와 3,500만유로를 새로 투자하여 취약계층의 필수품 및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빈곤개선정책에 4년간 총 85억유로 투자¹¹⁷⁾
 -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아침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점심 급식도 국비지원을 통해 가격을 낮춤
 - 노동자 및 구직자를 위한 보육원 확대 설치
 -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개시
 - 국방예산은 2018년 18억유로 증가에 이어 2019년 17억유로 증가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교육·연구·에너지 전환 등의 투자를 확대함
 - 친환경적인 상품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상품에 과세하는 등 환경세를 부과하여 에너지 전환(ecology transition)을 가속화함
 - 에너지전환세액공제*와 무이자환경대출**이 2021년까지 연장됨
 - * 에너지효율을 위한 건물 개·보수 작업에 공사비용의 30%까지 세금 환급
 - ** 무이자환경융자금(L' écho-prêt à taux zéro)을 10만유로까지 지원
 - 교육은 현 정부가 우선순위로 두는 정책분야로, “학교 교육” 및 “연구와 고등교육”의 미션지출은 2019년에 각각 8억유로와 5억유로 증가함
 - 공영방송 개혁 및 시스템 개선에 2019년 3,500만유로 포함 5년 동안 총 1억 9,000만유로를 투자할 계획
 - ‘공공개혁 프로그램 2022(programme Action publique 2022)’의 지속으로 공공지출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

117) 2018년 9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를 통합한 ‘활동보편소득(revenu universel d'activite)’을 2020년 도입. 빈곤지역에 급식 제공, 노동자 및 구직자를 위한 보육원 확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빈곤개선정책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년 9월 2호 참고.

〈참고 IV-2〉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 프랑스 기업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발표(2018.6.18.)¹¹⁸⁾ 및 의회 승인(2018.10.9.)¹¹⁹⁾
 -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자유롭고 더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조치들을 담고 있음
 - 고용 규모 구분선을 11명, 50명, 250명으로 간소화¹⁾
 - 250명 미만 기업의 이익 배당 및 50명 미만 기업의 지분참여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세 폐지
 - 온라인 기업 설립 플랫폼 단일화를 통한 비용 절감
 - 파산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재기 절차 간소화
 - 기업양도세 감면 조건 간소화
 -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화
 - 반도체, 우주항공 드론,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로봇, 데이터 저장을 국가전략사업으로 포함해 외국인 투자 제한 등의 규제

주: 1)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 추가 인력 채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음

나. 재정건전화

- 2018년과 2019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로 잠재성장률(1.25%)을 웃도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구조적 재정수지는 2017년에 -0.3%에서 0.1%로, 2018년에 -0.1%에서 0.1%로 개선될 전망
 - 2019년의 GDP 대비 명목 재정수지는 기존 전망보다 0.2%p 악화된 -2.8%로 전망되는데, 이는 경쟁력 및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CICE)의 전환에 대한 추가지출로 인한 것이며, 이를 제외했을 때의 재정수지는 -1.9%

118) 프랑스 재무부, 2018.6.18.

<https://www.economie.gouv.fr/plan-entreprises-pacte>(검색일자: 2018.12.26.)

119) 프랑스 정부, 2018.10.9.

<https://www.gouvernement.fr/en/pacte-the-action-plan-for-business-growth-and-transformation>(검색일자: 2018.12.26.)

-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따라, 2019년 예산안은 기존 전망과 비교하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를 0.3%p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적인 조치를 제외한 공공지출 증가율은 1.9%로 잠재GDP 증가율인 2.5%보다 낮게 나타남
 - 지출통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지출증가율을 0.3%로 제한하도록 함
 - 일반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이자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 통제가 강화됨
 - 직업훈련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창설된 기구인 France Compétences의 재정 효과를 제외했을 시, 지출 증가율은 0.4%
- 2019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0.6%로 제한되어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은 2018년 54.6%에서 2019년 54.0%로 감소함
 - 조정가능지출(dépenses pilotables) 증가율은 0.8%로 2018년의 0.6%에 이어 매우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함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2019년 사회보장부문예산법안(PLFSS 2019: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9)은 2018년 9월 24일에 발표됨
- 공공지출을 줄이고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이번 사회보장부문예산법안은 2018년 예산법안과 함께 제출된 2018-2022 중장기 예산법안(PLPFP)의 틀을 유지함
 - 18년 동안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 2024년까지 사회보장예산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IV-9〉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5	2016	2017	2018(전망)	2019(전망)
의료보험(CNAM- Maladie)	-5.8	-4.8	-4.9	-0.9	-0.5
산재보험(CNAM-AT-MP)	0.7	0.8	1.1	0.8	1.1
법정연금기금(CNAV)	-0.3	0.9	1.8	0.8	0.7
가족지원금(CNAF)	-1.5	-1.0	-0.2	0.4	1.2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지	-6.8	-4.1	-2.2	1.1	2.5
노령연대기금(FSV)	-3.9	-3.6	-2.9	-2.1	-1.8
총재정수지(RG+FSV)	-10.8	-7.8	-5.1	-1.0	0.7

출처: PLFSS 2019

□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건시스템 혁신 투자에 초점을 맞춤

- 사회보장이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 아래, 초과근무에 대한 사회 보험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사회보험부담 완화가 구매력을 높여 경제에 선순환으로 작용 하도록 함
- 빈곤개선정책에 4년간 85억유로를 투자¹²⁰⁾하는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 하고, 모든 국민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또한 높이도록 함
- 프랑스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시스템 정비에 4년간 총 34억유로를 투자¹²¹⁾

120) 2018년 9월 13일, 마크롱 대통령은 빈곤개선에 4년간 총 85억유로를 투자하여 빈곤지역의 아동을 지원하고 보육원을 확대 설치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년 9월 2호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EB%85%84-9%EC%9B%94-%EC%A0%9C2%ED%98%B8-%EC%9E%AC%EC%A0%95%EB%8F%99%ED%96%A5/525586

121) 2018년 9월 18일, 마크롱 대통령은 공공의료 개선에 4년간 총 34억유로를 투자하여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 하는 정책을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18년 9월 2호 참고.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PubTrends_InterTrends-View/2018%EB%85%84-9%EC%9B%94-%EC%A0%9C2%ED%98%B8-%EC%9E%AC%EC%A0%95%EB%8F%99%ED%96%A5/525586

- 2019년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재정수지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흑자를 기록할 전망이고, 노령연대기금(FSV)을 포함한 총재정수지 또한 흑자를 기록할 전망
 - 의료보험과 노령연대기금은 재정적자 수준이 완화될 전망이며, 가족지원금은 재정적자에서 재정흑자로 전환되고, 산재보험과 법정연금기금은 8억유로 흑자를 기록할 전망
 - 2019년 사회보장부문 총지출 증가율은 2.0%로, 2018년도의 2.3%보다 조금 낮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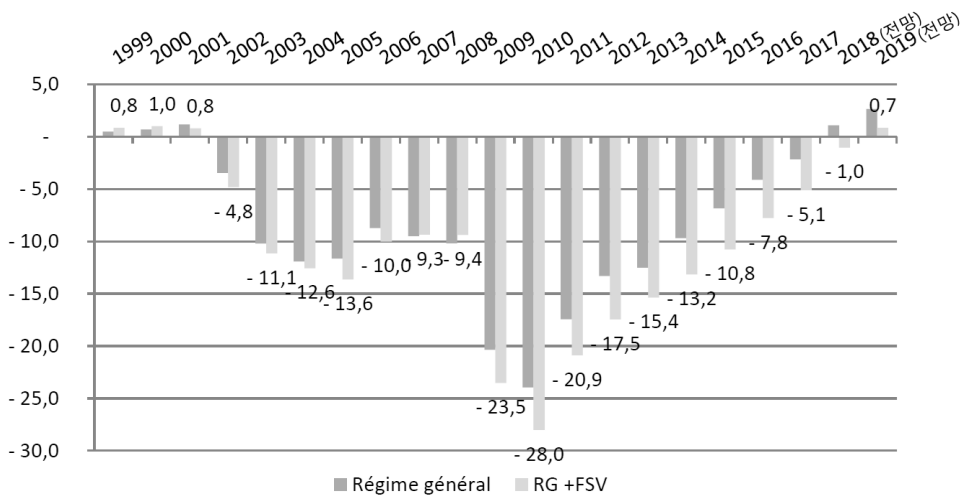
〈표 IV-10〉 2019년 프랑스 사회보장부문 지출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8 전망	2019 전망
의료보험(CNAM- Maladie)	211,3	216,2
산재보험(CNAM-AT-MP)	12,0	12,2
법정연금기금(CNAV)	133,7	137,1
가족지원금(CNAF)	50,1	50,3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수치	394,1	402,7
노령연대기금(FSV)	18,9	18,4
사회보장부문 총지출(RG+FSV)	395,7	404,2

출처: PLFSS 2019

[그림 IV-3] 사회보장부문 재정수지 추이 전망



-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¹²²)는 프랑스 정부의 의료시스템 개혁 정책으로 인해 2018년도의 2.3%보다 0.2%p 상승한 2.5%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총의료보험지출 목표는 2,003억유로로, 의료비지원(Soins de ville)과 병원시설이용료지원(Établissements de santé)이 각각 915억유로와 826억유로를 차지함

〈표 IV-11〉 2019년 프랑스 의료보험지출증가율 목표치(ONDAM)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19년 지출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의료비지원(Soins de ville)	91,5	2,5%
병원시설이용료지원(Établissements de santé)	82,6	2,4%
사회의학 서비스기관(Établissements et services médico-sociaux)	20,8	2,2%
지역출자기금(Fonds d'intervention régionale)	3,5	4,8%
기타지원(Autres prises en charge)	1,9	6,3%
총지출(ONDAM total)	20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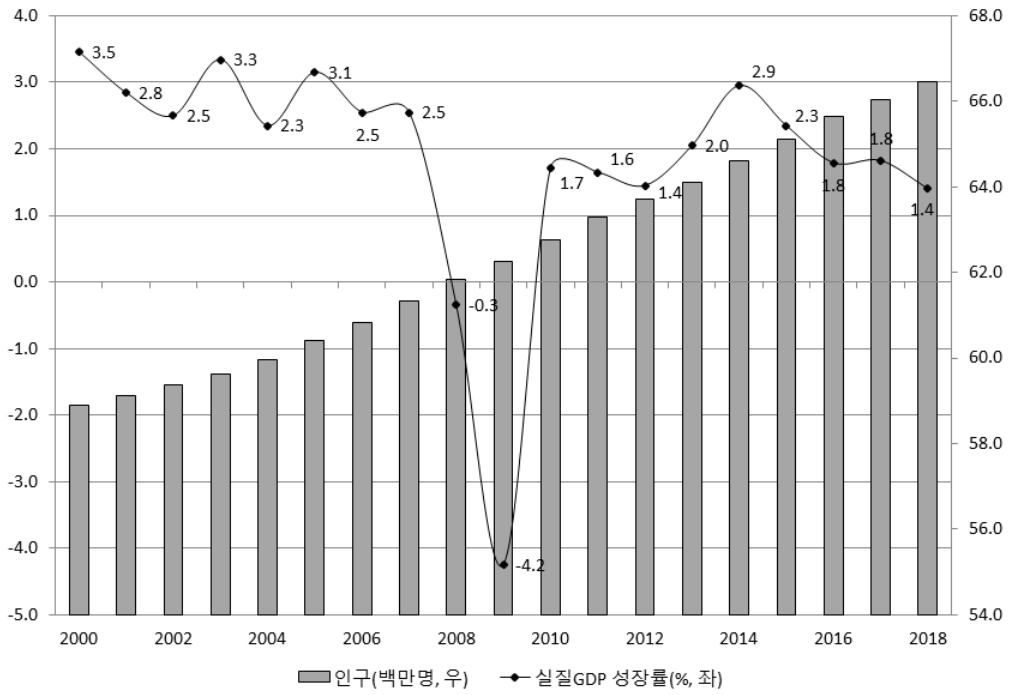
출처: PLFSS 2019

122)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

V. 영국

- FY2019-20: 2019년 4월 ~ 2020년 3월
- 출처 및 인용
 - 박한준·강희우·한혜란, 『주요국 예산안 - 영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8.12.
 - 재정지출분석센터, 「VI. 영국」, 『재정동향』, 제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3.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3.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OECD Database
- 참고
 -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8*, 2018.10.
 - _____, “Spring Statement 2019: what you need to know,” 2019.3.
 -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3.
 - _____,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 환율: 1파운드 = 약 1,468.22원(2018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7년 명목 GDP 2조 9,658억달러(한국의 약 1.5배 수준)
2018년 명목 GDP 3조 700억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17년 61.4%(한국은 80.8%(잠정치))
2018년 61.1%
- 인구: 2017년 6,604만명(한국의 약 1.3배 수준)
2018년 6,647만명

□ GDP 및 인구 추이



자료: OECD Database, 추출일자: 2019.3.13., 저자 작성

〈최근 재정 및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8. 2. 7.	FY2017-18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2017-18) 발표	2018년 상반기 『재정동향』
2018. 3.13.	Spring Statement 2018 발표	
2018. 4.19.	FY2018-19 중앙정부 본채출예산안(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18-19: Main Supply Estimates) 발표	
2018. 6.15.	Universal Credit에 대한 평가 보고서 발표	
2108. 6.18.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에 대한 다년도 재정지원 계획 발표	
2018. 6.28.	FY2016-17 결산보고서 발표	2018년 하반기 『재정동향』
2018. 7.12.	브렉시트(Brexit) 관련 백서(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발표	
2018. 7.17.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 July 2018) 발표	
2018. 7.17.	재정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고서(Managing fiscal risks: government response to the 2017 Fiscal risks report) 발표	
2018. 8.23.	노딜(no deal)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한 지침 발표	
2018.10.29	가을예산안 2018(Autumn Budget 2018) 발표	
2018.11.26.	2018 국가 인프라 및 건설 계획 분석 발표	
2018.11.25.	영국-EU, EU 탈퇴 협정 및 미래 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합의	
2018.11.28.	영국의 EU 탈퇴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장기 경제적 영향 분석 발표	
2018.12.18.	성공적인 EU 탈퇴 준비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 발표	

[요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9년 경제성장률은 1.2%로 독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은 1.4%, 2021~2023년은 모두 1.6%로 전망
- (재정 전망)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09-10 이래 5분의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FY2023-24까지 GDP 대비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FY2016-17에 정점(GDP 대비 85.1%)을 찍은 공공부문 순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23-24에 7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Hammond 재무부 장관은 '긴축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힘

- 영국이 EU를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신경제 구축,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공공서비스 및 생활수준 제고 관련 조세·재정 정책 제시

□ (수입·지출) FY2019-20 경상수입은 전년 대비 225억파운드 증가한 8,098억파운드 (GDP 대비 36.8%), 총관리지출(TME)은 전년 대비 288억파운드 증가한 8,416억파운드 (GDP 대비 38.3%)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2018 가을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FY2019-20에 150억 8,500만파운드 규모로 추정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기금 증액, 연구개발 관련 자금 지원, 도심 상가(High Street) 지원을 위한 조세·재정 지원,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 감면 등 추진
- (복지 및 공공서비스) 향후 5년간 NHS 지원 예산 증액, 통합급여 관련 지원 확대, 성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 재정 추가 지원 등
- (브렉시트 대응) EU 탈퇴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파운드(FY2019-20)를 편성
- (재정건전화) 2019년에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발표할 예정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표 V-1〉 주요 경제 전망(2018년 10월 기준)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경제 지표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1.7	1.3	1.6	1.4	1.4	1.5	1.6
(3월 전망 대비 변화(%p))	(0.0)	(-0.3)	(0.4)	(0.1)	(0.1)	(0.0)	-
가계소비	1.8	1.3	1.2	1.2	1.3	1.4	1.5
정부소비	-0.1	1.0	2.1	2.0	1.7	1.6	1.6
기업투자	1.8	0.5	2.3	2.1	2.1	2.1	2.2
정부투자	1.7	-0.2	5.7	3.3	1.8	0.9	1.4
순수출 ¹⁾	0.7	0.2	-0.1	-0.1	0.0	0.0	-0.1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7	2.6	2.0	2.0	2.1	2.1	2.0
실업률(LFS)	4.4	4.0	3.7	3.8	3.9	3.9	4.0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1〉

□ 2018년 10월 기준, OBR의 경제 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²³⁾

- (경제성장률) 재정 확대(budget giveaway)에 힘입어 2019년 경제성장률은 3월 전망 대비 약 0.4%p 상향 조정된 1.6%로 전망됨
 - 2018년 경제성장률은 1분기 흑한의 일시적 영향 등이 반영되어 지난 3월 전망 대비 0.3%p 하향 조정된 1.3%로 전망됨
 - 2018년 이후부터 2022-23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은 3월 전망 대비 0.6%p 상향 조정 (경제활동참가율 조정, 균형실업률 조정 등 반영)된 6.1%를 기록할 전망
-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과 파운드화 약세 등으로 인해 2018년 2.6%를 기록하고, 2019년에는 유가 상승 영향의 약화와 관세 및 에너지 가격 정책의 영향으로 2.0%로 하락할 전망

123)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 1-2

- 이후 전망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0% 내외를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2018년 실업률은 4.0%로 1975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은 3.7%로 감소할 전망
 - 고용률은 2018년 3~5월에 최고치(75.7%)를 달성한 후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¹²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 약 3,3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평균 임금상승률은 2018년 2.6%, 2019년 2.5%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하여 2023년 3.2%를 기록할 전망
- (주요 리스크)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¹²⁵⁾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경제활동, 환율, 자산가격 등에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 외에도 생산성, 기대 이자율, 가계 저축, 실업률 및 임금, 국제무역 분쟁, 경상수지 적자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리스크 요인임

〈표 V-2〉 주요 경제전망(2019년 3월 기준)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경제 지표	실적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질GDP 성장률	1.8	1.4	1.2	1.4	1.6	1.6	1.6
(10월 전망 대비 변화(%p))	(0.1)	(0.1)	(-0.4)	(0.0)	(0.1)	(0.1)	(0.0)
가계소비	2.1	1.7	1.1	1.5	1.6	1.6	1.6
정부소비	-0.2	0.2	2.1	1.7	1.6	1.6	1.7
기업투자	1.5	-0.9	-1.0	2.3	2.3	2.4	2.4
정부투자	3.7	0.5	5.9	1.8	2.2	0.9	2.0
순수출 ¹⁾	0.5	-0.2	-0.5	-0.2	-0.1	-0.1	-0.2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2.7	2.5	2.1	1.9	2.0	2.0	2.0
실업률(LFS)	4.9	4.4	4.3	4.4	4.6	4.6	4.6

주: 1)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3., Table 1.1 재구성

124) 출처: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labour market: November 2018, 2018.11.13.

125) 노딜(no deal) 시나리오는 2019년 3월까지 EU와 영국이 탈퇴 협정 및 EU-영국 간 향후 관계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경우를 의미

- 2019년 3월 기준 OBR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영국은 세계경제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¹²⁶⁾
- (성장률) 2019년 경제성장률은 1.2%로 독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은 1.4%, 2021~2023년은 모두 1.6%로 전망
 - (물가) 2019~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
 - (실업률) 2023년까지 실업률은 4.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이는 1975년 이후 최저치

나. 재정 전망

(표 V-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2018년 10월 기준)

(단위: GDP 대비 %)

재정 지표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세입·세출							
경상수입(a)	36.6	37.0	36.8	37.0	37.0	37.0	37.2
총관리지출(TME)(b)	38.5	38.2	38.3	38.1	38.0	37.9	37.9
공공부문 경상지출(c)	34.5	34.4	34.2	34.0	34.0	33.9	33.9
공공부문 순투자(d)	2.0	1.9	2.2	2.2	2.2	2.1	2.2
감가상각(e)	2.0	1.9	1.9	1.9	1.9	1.9	1.9
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1.9	1.3	1.6	1.3	1.1	0.9	0.8
공공부문 순채무	85.0	83.7	82.8	79.7	75.7	75.0	74.1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1.9	1.2	1.4	1.2	1.0	0.9	0.8
경상예산적자(c+e-a)	-0.1	-0.7	-0.8	-1.1	-1.1	-1.2	-1.4

126) 인용: 재정지출분석센터(2019), p.22

재정 지표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¹⁾	2.0	1.3	1.5	1.3	1.3	0.9	0.7
일반정부 채무 ¹⁾	85.6	85.0	84.1	83.2	82.7	81.8	80.8

주 :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2>

□ 2018년 10월 기준, OBR의 재정 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¹²⁷⁾

- (재정적자)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FY2018-19에 1.2%, FY2019-20에 1.4%로 예측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매해 감소하여 FY2023-24년 0.8%로 FY2001-0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전망기간 동안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는 지난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예상보다 높은 세수 및 낮은 지출 실적(2018년), 경제전망 가정의 균형실업률 조정으로 인한 근로 세입 증가 및 실업 관련 복지 지출 감소 등이 반영된 결과
 - 다만 예산안에서 발표된 재정확대 정책들은 공공부문 순차입의 일부 증가 요인으로 작용
 -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FY2017-18에 2.0%로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의 3% 기준¹²⁸⁾을 하회하였으며 전망기간 동안에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임
- (국가채무) FY2016-17에 85.2%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FY2018-19에 83.7%, FY2019-20에 82.8%로 감소
 - 명목 GDP 전망 조정, 정부 채무 규모 전망 등을 반영해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지난 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127)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2-3

128) 재정건전화 달성, 재정규율 확보 등을 위해 EU 차원에서 회원국에 적용하고 있는 수치화된 재정준칙으로서 일반정부 재정적자 기준은 GDP 대비 3%, 일반정부 총채무 비율 기준은 GDP 대비 60%임

〈표 V-4〉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2019년 3월 기준)

(단위: GDP 대비 %)

재정 지표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세입·세출							
경상세입(a)	36.4	37.0	36.9	37.1	37.1	37.2	37.2
총관리지출(TME)(b)	38.5	38.1	38.2	38.0	37.9	37.7	37.8
공공부문 경상지출(c)	34.4	34.2	34.2	33.9	33.8	33.8	33.8
공공부문 순투자(d)	2.1	2.0	2.1	2.2	2.1	2.1	2.1
감가상각(e)	2.0	1.9	1.9	1.9	1.9	1.9	1.9
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2.0	1.2	1.3	0.8	0.7	0.6	0.5
공공부문 순채무	84.7	83.3	82.2	79.0	74.9	74.0	73.0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2.0	1.1	1.3	0.9	0.7	0.6	0.5
경상적자(c+e-a)	0.0	-1.0	-0.8	-1.3	-1.4	-1.5	-1.6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¹⁾	2.1	1.2	1.4	1.1	1.1	0.7	0.6
일반정부 채무 ¹⁾	85.3	85.5	83.8	82.9	82.2	81.1	80.0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9.3., Table 4.37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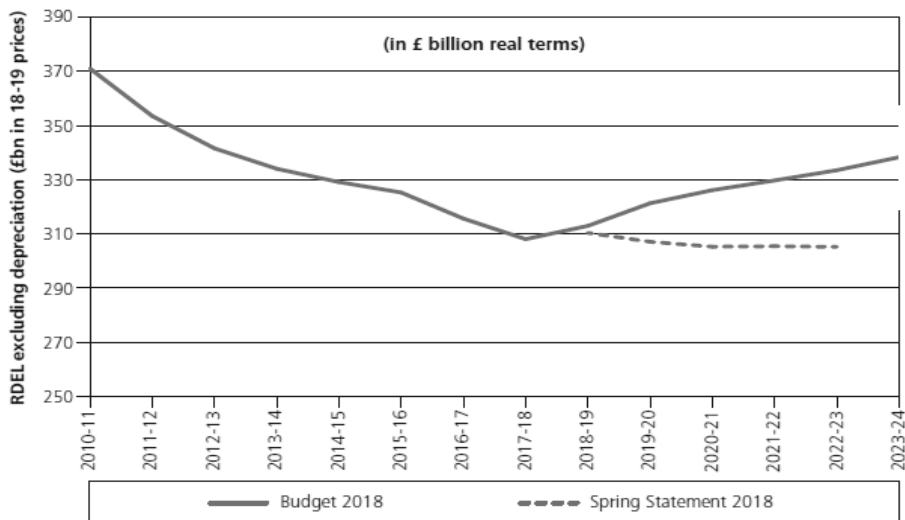
- 2019년 3월 기준 OBR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망 이후 영국의 재정상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책임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전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¹²⁹⁾
-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은 FY2009-10 이래 5분의 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FY2023-24까지 GDP 대비 0.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국가채무) FY2016-17에 정점(GDP 대비 85.1%)을 찍은 공공부문 순채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FY2023-24에 7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129) 인용: 재정지출분석센터(2019), p.23

2 예산기조¹³⁰⁾

- (재정기조) 예산 연설에서 Hammond 재무부 장관은 ‘긴축의 시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며, 예산안에도 정부가 2010년 이래로 재정건전성을 상당히 개선해왔으며 이제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도달했다는 설명이 포함됨
 - 영국이 EU를 떠날 준비를 함에 따라 정부는 공공서비스 투자, 기업 지원, 생활수준 제고를 통해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
 -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경상지출이 증가세(실질 증가율 기준)로 전환될 전망

[그림 V-1] 경상지출 부처별 지출한도(Resource DEL, 감가상각 제외)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그림 1]

□ 정책 방향

- (신경제 구축(Building a new economy)) 생산성 제고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이므로 정부는 생산성을 주요 우선 순위로 설정해 왔음

130)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 3-6

- (인프라 투자) 국가생산성투자펀드(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370억파운드로 증액, 도시 교통인프라 개선에 7억 7천만파운드 추가 지원 등
- (신기술 및 혁신)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quantum computing), 제조업 혁신, 핵융합 분야 등에 대한 16억파운드 규모의 투자
- (주택) 2017년 가을 예산에서 발표된 주택정책 패키지에 대한 추가 조치 수립, 신규 주택을 위한 주택인프라기금 5억파운드 증액, 중소 주택 건설회사에 대한 보증 지원 등
- (역량 강화) 국가재교육제도(National Retraining Scheme)¹³¹⁾ 1단계 사업에 1억파운드 지원, 건설직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패키지 도입 등
- 이 외에도 기업 및 창업 지원, 직접 대출제도를 통한 수출 지원 등을 발표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A fair and sustainable tax system)) 근로 방식과 기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조세제도에 반영, 기업을 위한 경쟁력 있는 조세제도 운영 등
 - 소득세 기본 공제적용 기준 상향 조정(11,850→12,500파운드) 조기 시행(2019년 4월), 연료세 및 일부 주세 세율 동결 등
 - 도심 상가 지원을 위해 일부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한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¹³²⁾ 경감, 사업 투자 장려를 위해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강화 등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도입(2020년 4월), 민간부문 off-payroll¹³³⁾ 근로에 대한 과세 개혁, 조세회피 방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신규 과세제도 도입 등
- (공공서비스 및 생활수준 제고(Public services and living standards))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의 개선을 위해 신규 투자 제공
 -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FY2023-24까지 NHS 예산 지원 205억파운드 증액, FY2023-24까지 정신 건강서비스 예산 연 20억파운드 이상 확대(NHS 예산 지원에 포함) 등

131) 정부는 고용주와 협력하여 신경제(the new economy)에서 필요한 기술 재훈련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국가재교육 제도(National Retraining Scheme)를 개발하고 있음. 우선 2017 가을 예산안에서 제도 개발 기간 동안 디지털 및 건설 분야 훈련 지원에 6,400만파운드를 배정한 바 있음

참고: <https://www.gov.uk/government/news/autumn-budget-2017-25-things-you-need-to-know>(검색일자: 2018.11.28.)

132) 사업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기업의 비거주 재산세임

133) 고용중개회사, 용역회사 등을 통해 임금을 지불하며 대부분 일당으로 지급됨

- (국방·안보) 군 현대화, 사이버 안보 강화, 대잠수함전(anti-submarine warfare)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해 FY2018-19~FY2019-20에 국방부 추가 지원(10억파운드), FY2019-20에 대테러 정책 추가 지원(1억 6천만파운드) 등
- (복지) 5년간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전환 지원을 위한 추가 정책, 통합급여의 근로 소득공제액(Work Allowance) 상향 조정을 위해 연간 약 17억파운드 지원 등
- 법정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¹³⁴⁾ 인상(7.83 → 8.21파운드(2019년 4월)), 성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지방정부 제공)에 대한 추가 지원(6억 5천만파운드), 학교 장비·시설 지원(4억파운드) 등

□ (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8 가을예산안에서 제시한 정부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¹³⁵⁾은 FY2018-19에 23억 500만파운드, FY2019-20에 150억 8,500만파운드로 추정

- 동 예산안의 정부 정책으로 FY2019-20에 지출은 109억 500만파운드 확대, 세입은 41억 8천만파운드 축소될 전망

〈표 V-5〉 2018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지출정책	-2,035	-10,905	-13,370	-17,880	-23,650	-30,520
세입정책	-270	-4,180	-1,025	280	125	-40
정책 총계	-2,305	-15,085	-14,395	-17,600	-23,520	-30,560

주: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3〉

134) 영국은 연령과 견습직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름. 법정생활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영국의 최저임금은 매년 4월마다 조정됨

135) 공공부문 순차입(PSNB)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주요 정책의 비용 및 수입

3 예산안 내용¹³⁶⁾

가. 세입

- (수입 전망) 예산책임청(OBR) 전망에 따르면 경상수입은 FY2018-19에 전년 대비 333억파운드 증가한 7,873억파운드(GDP 대비 37.0%), FY2019-20에 전년 대비 225억파운드 증가한 8,098억 파운드(GDP 대비 36.8%)를 기록할 전망¹³⁷⁾
 - * 동 예산안에서 발표된 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 기준 조정, 연료세 및 일부 주세 세율 동결 등을 반영한 결과 FY2019-20의 GDP 대비 경상수입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
 - 전망기간 동안의 경상수입 규모는 예상보다 양호한 FY2018-19 세수 실적, 높은 고용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어 지난 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됨
 - (세목별 수입) FY2019-20 소득세는 전년 대비 27억파운드 증가한 1,929억파운드, 국민보험 기여금은 50억파운드 증가한 1,419억파운드로 추계됨
 - FY2019-20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50억파운드 증가한 1,372억파운드, 법인세는 약 5억파운드 증가한 600억파운드, 지방세(council tax)는 전년 대비 17억파운드 증가한 359억파운드, 비거주재산세는 2억파운드 증가한 309억파운드로 예상됨
 - 석유세, 은행세, 담배세 등의 규모는 FY2019-20에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전망
 - (경제유형별 수입) FY2019-20 경제유형별 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은 생산 및 수입과세 36%(2,919억파운드), 소득 및 재산세 32.6%(2,640억파운드), 법정사회보장기여금 17.5%(1,419억파운드) 등의 순서로 나타남

136)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 7-15

137)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8.10.

〈표 V-6〉 경상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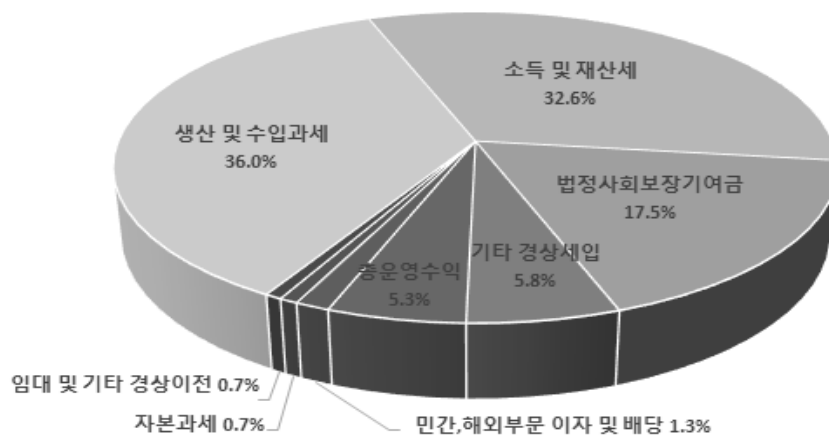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소득세	180.7	190.2	192.9	203.2	210.7	219.7	229.9
국민보험기여금((NICs)	132.5	136.9	141.9	147.8	153.4	159.2	165.5
부가가치세	125.3	132.2	137.2	141.9	146.4	150.8	155.3
법인세	55.9	59.5	60.0	59.6	60.9	63.6	66.0
석유세	-0.6	-0.6	-0.7	-0.7	-0.5	-0.4	-0.3
연료세	27.9	28.3	28.3	29.2	30.2	31.1	32.0
비거주재산세	30.2	30.7	30.9	31.4	33.2	33.9	34.5
지방세(Council tax)	32.1	34.2	35.9	37.0	38.1	39.2	40.4
VAT 환급(refunds)	17.1	17.8	18.4	19.1	19.6	20.1	20.7
자본이득세	7.8	8.7	9.1	10.6	10.8	11.6	12.5
상속세	5.2	5.5	5.7	5.9	6.2	6.5	6.9
부동산취득세	13.6	12.8	13.3	14.1	14.9	15.8	17.2
주식취득세	3.5	3.7	3.8	3.9	4.0	4.2	4.3
담배세	8.8	9.3	9.2	9.2	9.2	9.1	9.1
주세	11.6	12.3	12.7	13.0	13.6	14.1	14.6
항공여객세	3.4	3.7	3.8	4.0	4.2	4.4	4.6
보험료세	5.9	6.3	6.3	6.3	6.3	6.3	6.3
기후변화세	1.9	2.0	2.2	2.2	2.2	2.2	2.5
은행세(Bank levy)	2.6	2.5	2.3	1.9	1.1	1.1	1.1
은행추가세 (Bank surcharge)	1.9	1.9	2.0	2.0	2.0	2.1	2.1
견습세 (Apprenticeship Levy)	2.7	2.8	2.9	3.0	3.1	3.2	3.4
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0.2	0.1	0.1	0.0	0.0	0.0	0.0
청량음료사업세(설탕세)	0.0	0.3	0.3	0.3	0.3	0.3	0.3
디지털서비스세	0.0	0.0	0.0	0.3	0.4	0.4	0.5

구분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기타 국세(HMRC taxes)	7.5	7.4	7.4	7.6	7.7	7.8	7.8
자동차소비세	6.2	6.4	6.4	6.7	6.9	7.2	7.5
면허료 수입	3.2	3.3	3.3	3.4	3.5	3.6	3.7
환경부담금	6.5	10.2	11.2	11.8	12.2	12.4	13.1
EU ETS 경매세	0.4	0.6	1.6	1.2	1.2	1.4	1.5
기타 조세	6.9	7.2	7.5	7.7	7.9	8.2	8.4
국민계정 조세수입	700.7	736.1	755.8	783.6	809.6	839.0	871.3
EU 부담금 공제	-3.4	-3.3	-3.3	-3.4	-3.4	-3.5	-3.5
이자 및 배당	7.1	8.8	10.7	12.0	13.4	14.5	15.2
총운영수지	46.4	42.1	42.9	44.5	46.4	47.8	49.5
기타수입	3.2	3.6	3.7	3.8	3.6	2.9	3.0
총 경상수입	754.0	787.3	809.8	840.4	869.6	900.8	935.5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1.8)	(+11.5)	(+9.7)	(+15.5)	(+22.1)	(+24.2)	-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4>

[그림 V-2] FY2019-20 경제유형별 수입(공공부문 기준) 비중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그림 2]

- (주요 조세정책의 영향) 예산안에서 도입된 조세정책으로 FY2018-19에 2억 7천만파운드, FY2019-20에 41억 8천만파운드의 세입 감소 효과가 예상됨
- (생활수준 개선) FY2019-20에 생활수준 개선 관련 조세정책으로 37억 9,500만파운드 세수 감소 효과 발생
 - 주로 소득세 기본 공제적용 기준(11,850→12,500파운드)과 고세율 구간 기준(46,351→50,000파운드) 상향 조정 조기 시행(2019년 4월)의 영향에 기인
 - 2020년 4월까지 9년 연속 연료세 동결, 맥주, 사과주, 증류주에 대한 주세 세율 동결 등도 세수 감소 요인
 - (산업 및 성장) 한시적으로(2019년 1월~2020년 12월)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연간투자공제(AIA)를 현행 20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확대함에 따라 세수 감소
 - (지역발전) 도심 상가 지원을 위해 과표 기준 5만 1천파운드 미만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한 비거주재산세를 3분의 1 감면(FY2019-20~FY2020-21)함에 따라 연간 약 5억파운드의 세수 감소
 - (공정한 조세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와 조세회피·탈루 방지 관련 조세정책으로 FY2019-20에 1억 8,500만파운드 세수 증가 효과 발생

〈표 V-7〉 2018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생활수준 개선						
소득세 기본 공제 적용 기준 및 고세율구간 기준 상향 조정	0	-2,790	-1,935	-1,445	-1,605	-1,780
연료세 세율 동결(2019-20)	0	-840	-855	-880	-910	-935
일부 주세 세율 동결 및 조정	-35	-165	-175	-175	-180	-185
산업 및 성장						
연간투자공제 일시적 확대	-215	-600	-425	+140	+185	+155
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자본투자 공제	-55	-165	-260	-365	-475	-585
감가상각 특별공제율 인하	+75	+250	+360	+325	+315	+305
주거 및 주택소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지분공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인지세 감면 연장	*	-5	*	*	*	-5
환경						
에너지효율설비에 대한 자본투자공제 제도의 공제 확대 중단	0	+10	+50	+100	+80	+75

〈표 V-7〉의 계속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지역발전						
일부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한 비거주재산세 감면	+10	-490	-450	+45	-15	0
공공화장실의 비거주재산세 감면	0	0	-5	-5	-5	-5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0	+5	+275	+370	+400	+440
민간부문 off-payroll 근로 과세 개혁 확대 (중소기업 제외)	-5	-150	+1,165	+595	+635	+725
법인세의 양도손실 이월 제한	0	+25	+110	+140	+140	+125
자본이득세 기업가 감면 요건 기한 확대	0	+5	+10	+75	+80	+90
거주용 주택 감면 제도 개편	0	+15	+50	+120	+135	+150
부가가치세 등록 기준소득 현행 유지	0	0	+60	+130	+145	+150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고용수당 개편	0	0	+225	+260	+290	+320
가스과 전기의 기후변화세율 조정	0	0	*	*	*	+5
골재세(Aggregates Levy) 동결	0	-10	-15	-15	-15	-15
대형화물차 자동차소비세 동결	0	-5	-5	-10	-10	-10
담배세율 조정(RPI+2%p, 일부 담배 1%p 추가)	0	+5	+5	+5	+5	+5
탄소가격 지원(CSP) 세율 동결	0	0	-15	-15	-20	-20
주세 산정 이후 특정 주류의 희석 금지	0	+65	-15	+85	+85	+90
성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공제 한도 유지 등	0	*	+5	+5	+5	+10
조세회피·탈루 방지						
파산 관련 원천징수세액 보호, 탈루 방지	0	+10	+65	+150	+195	+185
엄격한 부가가치세 조정 규정 도입	+5	+150	+200	+200	+195	+190
역외 조세회피 방지	*	+65	+65	+75	+95	+100
기업인 자본이득세 감면 남용 방지	0	+5	+10	+10	+10	+15
기존에 발표된 정책						
대학등록금 동결(2019.9.)	0	*	-10	-20	-30	-40
국민보험기여금개편법안 적용 연기, Class2 (특정 소득 이상 자영업자)의 국민보험기여금 유지	-5	+180	+395	+370	+335	+310
보육바우처 신규 가입 종료 연기	-45	-55	-50	-40	-25	-10
고정배당률 베팅 참여액 상한 하향조정	0	-120	-245	-255	-260	-270
원격도박세율 인상(2019.10.)	0	+130	+255	+265	+280	+295
총 세입정책 효과	-270	-4,180	-1,025	+280	+125	-40

주: 1.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2.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5〉

나. 지출

- (지출 전망) 예산책임청(OBR)이 전망한 총관리지출(TME) 규모는 FY2018-19에 전년 대비 190억파운드 증가한 8,128억파운드(GDP 대비 38.2%), FY2019-20은 전년 대비 288억파운드 증가한 8,416억파운드(GDP 대비 38.3%)임
 - 예상보다 낮은 채무이자 및 복지지출로 인해 FY2018-19 총관리지출은 3월 전망 대비 33억 파운드 하향 조정되었고 FY2019-20부터는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지원 및 기타 지출의 증가를 반영해 3월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됨
 - FY2019-20 경상지출은 전년 대비 204억파운드 증가한 7,519억파운드, 총투자는 전년 대비 84억원 증가한 897억파운드로 예상됨
 - FY2018-19부터 FY2023-24 동안 총관리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은 1.4%로 전망
 - － 특히 경상지출(자원지출)의 부처별 지출한도(DEL)는 FY2019-20에서 FY2023-24까지 연평균 1.2%의 실질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추가 지원으로 인한 것임

〈표 V-8〉 총관리지출(TME)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공공부문 경상지출							
자원 DEL	288.6	295.6	311.5	323.2	332.9	343.1	354.7
자원 AME	422.9	435.9	440.4	450.4	465.3	481.4	498.4
사회보장급여	218.8	223.0	227.4	231.6	239.1	248.2	258.4
지방재정 지출	48.7	51.1	50.7	51.8	53.8	55.5	57.0
중앙정부총채무이자, APF채무이자삭감	41.5	39.8	42.1	43.0	44.4	45.7	46.8
스코틀랜드정부 지출	26.5	27.6	28.1	29.3	30.2	31.1	32.2
EU분담금	9.5	11.7	13.5	10.5	10.8	7.9	4.2
EU분담금대체추정지출	-	-	-	3.0	2.8	5.6	9.4
순공공서비스연금지출	11.8	12.6	6.7	6.7	7.6	8.7	9.2
기업및기타세액공제	3.6	4.6	4.6	4.7	4.7	4.8	5.0

〈표 V-8〉의 계속

구분	실적	전망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BBC 지출	3.7	3.9	3.8	3.8	3.6	3.9	3.9
국가복권 지출	1.2	1.3	1.3	1.2	1.2	1.2	1.2
일반정부귀속연금	1.3	1.3	1.3	1.3	1.3	1.3	1.3
공기업채무이자	2.6	0.5	0.4	0.4	0.5	0.5	0.5
철도회사(NetworkRail)지출	1.1	0.8	-	-	-	-	-
감가상각	30.5	31.1	32.3	33.7	35.1	36.6	38.1
경상부가가치세환급	15.3	15.7	16.2	17.0	17.5	18.0	18.5
환경부담금	6.8	10.6	11.7	12.9	13.3	13.5	14.2
기타 경상지출	1.5	0.9	0.8	0.7	0.8	0.8	0.8
기타 회계조정	-1.6	-0.5	-0.6	-1.1	-1.4	-2.0	-2.2
총공공부문 경상지출	711.5	731.5	751.9	773.6	798.1	824.4	853.1
공공부문 투자							
자본 DEL	44.3	50.2	61.6	65.5	69.4	71.1	75.8
자본 AME	38.0	31.1	28.1	27.9	25.9	26.1	26.4
지방재정 지출	12.4	11.5	11.6	10.0	9.6	9.6	9.8
공기업 지출	17.2	10.8	10.8	10.3	10.2	10.7	10.7
철도회사(Network Rail) 지출	6.7	5.2	-	-	-	-	-
스코틀랜드정부 지출	3.0	3.4	4.1	4.5	4.3	4.4	4.3
세무소송	0.0	0.0	1.3	2.4	0.4	0.4	0.4
기타 자본지출	0.8	0.8	1.0	1.4	1.6	1.6	1.7
기타 회계 조정	-2.1	-0.7	-0.7	-0.6	-0.3	-0.6	-0.5
총공공부문 투자	82.3	81.3	89.7	93.5	95.2	97.2	102.2
감가상각 공제	-41.1	-40.1	-41.3	-42.9	-44.5	-46.0	-47.7
공공부문 순투자	41.2	41.2	48.4	50.6	50.8	51.2	54.5
총관리지출¹⁾	793.8	812.8	841.6	867.1	893.4	921.7	955.3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²⁾)	(-7.0)	(-3.3)	(4.7)	(10.6)	(17.1)	(2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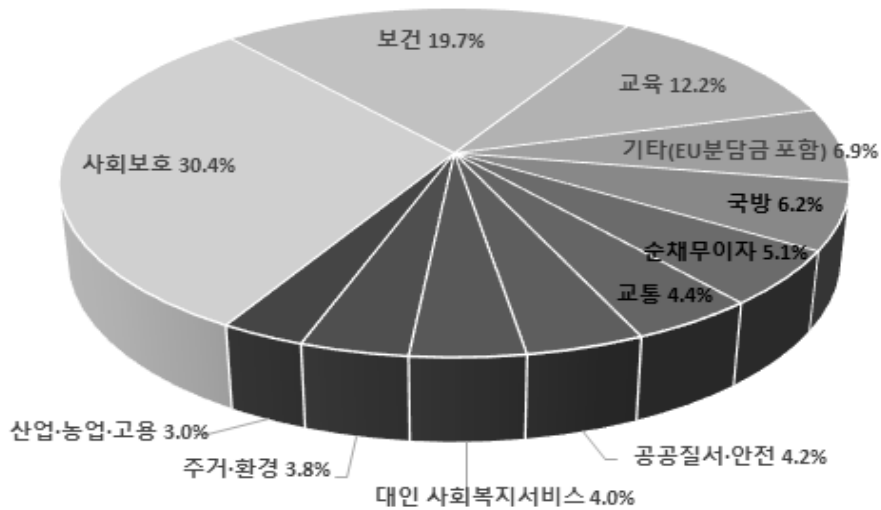
주: 1)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본 DEL+자본 AME)과 공공부문 총투자(자본 DEL + 자본 AME)의 합으로 구성. 부처별지출한도(DEL)은 지출 검토에서 확정된 3~4년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가능한 지출이며, 연간관리지출(AME)은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임

2) 통계 및 예산 분류 변경을 반영한 '조정된 3월 전망치' 대비 변화분을 의미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6〉

- (기능별 지출) FY2019-20의 공공부문 지출에서 사회보호(2,560억파운드), 보건(1,660억파운드), 교육(1,030억파운드) 분야 지출이 높은 비중을 기록
- 이 외에도 국방 520억파운드, 순채무이자 430억파운드, 교통 370억파운드, 공공질서·안전 350억파운드, 대인 사회복지서비스 340억파운드, 주거·환경 320억파운드, 산업·농업·고용 250억파운드 등 배정

[그림 V-3] FY2019-20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416억파운드)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그림 3]

- (주요 지출정책의 영향) 예산안에 제시된 지출정책으로 인해 FY2018-19에 20억 3,500만 파운드, FY2019-20에 109억 500만파운드의 지출 증대 효과가 예상됨
- (공공서비스 지출) FY2019-20에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추가 지원 계획으로 73억 5천만파운드, 돌봄서비스(social care) 추가 지원으로 7억 7,500만파운드, 국방 관련 비용 8억파운드 지출 확대
- (복지지출) FY2019-20에 통합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 1천파운드 상향 조정(2019년 4월)으로 5억 4,500만파운드, 통합급여 전환 대상자 추가 지원으로 9천만파운드, 통합급여 전환 일정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9,500만파운드 지출 확대

- (산업 및 성장) FY2019-20에 중소기업 고용주의 견습생 훈련 비용에 대한 공동 납부 비율 (co-investment rate) 조정(10%→5%)으로 2,500만파운드, 핵융합 기술 개발 및 상업화 지원으로 2천만파운드 추가 지출
- (주거, 환경)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지방당국(잉글랜드, 웨일즈) 주택수입계정(HRA)의 차입 한도 철폐로 FY2019-20에 3억 8,500만파운드, 플라스틱 문제 대응(R&D)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에 2천만파운드 소요
- (지역 발전) FY2019-20에 도심 상가지역 재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Future High Streets Fund 도입으로 2,500만파운드, 북부지역 교통망 개발을 위한 Northern Powerhouse Rail 지원으로 4천만파운드 등 지출 확대

〈표 V-9〉 2018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공공서비스 지출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 : 2018년 6월에 발표된 지원 계획	0	-7,350	-11,130	-16,090	-21,400	-27,610
돌봄서비스: 2018-19~2019-20 지원	-285	-775	-	-	-	-
아동 돌봄서비스 개선	0	-45	-25	-15	-15	0
교통: 도로 유지보수	-500	0	0	0	0	0
학교: 2018-19 자본 지출	-475	0	0	0	0	0
사법: 2018-19 교도소, 형사, 사법 시스템 개선	-60	0	0	0	0	0
국방: 2018-19~2019-20 지원	-200	-800	0	0	0	0
공공부문 리더십 센터	0	-10	-10	-10	0	0
휴전기념일 기념	-15	0	0	0	0	0
생활수준 개선						
통합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조정	0	-545	-865	-1,130	-1,400	-1,695
통합급여: 전환 지원	-35	-90	-170	-255	-240	-205
통합급여: 이행 기간 조정	0	-95	+320	+845	+745	+250

〈표 V-9〉의 계속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산업재해장애급여 개선	0	0	-5	-5	-5	-5
저신용자 대출 지원	0	-5	*	0	0	0
연금정보제공시스템(pension dashboard) 추가 지원	0	-5	0	0	0	0
장애인 시설 보조금 확대	-65	0	0	0	0	0
산업 및 성장						
견습제도: 고용주 공동 납부 비율 조정	0	-25	-60	-60	-70	-70
역량: 자영업자 지원 과정 시범사업	0	-5	-5	0	0	0
역량: 청년 실무교육(OJT) 시범사업	0	-5	-5	0	0	0
역량: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0	-5	0	0	0	0
기업: 지식 이전 파트너십 확대	0	0	-5	-10	-10	-10
기업: 스타트업 대출 프로그램 확대	0	0	-5	0	0	0
기업: University Enterprise Zones 확대	-5	0	0	0	0	0
무역: 통상정책(Global Britain)	0	-5	0	0	0	0
에너지: 핵융합 관련 지원	0	-20	0	0	0	0
양자 기술: 연구개발	0	-5	-5	-15	-10	0
주거 및 주택소유						
지방당국 주택건설 차입 한도 철폐	-95	-385	-850	-855	-1,235	-1,235
도시개발공사: 경쟁 펀드	0	*	-5	-5	0	0
저렴한 주택 공급 지원	0	-5	-5	-5	0	0
전략적 주택공급 계획 지원	0	-5	-5	0	0	0
환경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및 재활용	0	-20	0	0	0	0
방치된 쓰레기 처리장 개선	0	-5	-5	0	0	0
도시 수목 식재	0	-5	-5	*	*	0
대기 질 개선	-10	-15	0	0	0	0
산업 에너지 전환 기금	0	-20	-60	-90	-75	-70

〈표 V-9〉의 계속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지역발전						
Future High Streets Fund : 경상지출	0	-20	-15	-15	-10	-5
Future High Streets Fund : 자본지출	0	-5	-75	-220	-240	-195
도시 성장 계획(City and Growth Deals)	-5	-40	-40	-	-	-
Coventry : City of Culture 행사	0	-10	0	0	0	0
Northern Powerhouse Rail	0	-40	0	0	0	0
East-West Rail	0	-20	-	-	-	-
West Midlands Combined Authority : UK Mobility Data Institute	-20	0	0	0	0	0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기부장려세제(Gift aid) : 소액기부금 한도 확대	0	-5	-5	-5	-5	-5
국세청(HMRC) 예산 지원	-5	0	0	0	0	0
조세회피 · 탈루 방지						
R&D 세액공제 : 중소기업 공제 남용 방지	0	0	0	+20	+45	+45
기존에 발표된 정책						
Index Linked Savings Certificates (불가연동채권) 인덱스 조정	0	+35	+85	+150	+165	+175
국가재교육프로그램 1단계	0	-10	-25	-80	0	0
기업 지원	0	-35	-	-	-	-
Birmingham : 첨단교통도시 추진	0	-10	-10	-10	0	0
음식물쓰레기 절감(시범사업)	0	-20	0	0	0	0
지자체연합기구 차입권한 조정	-45	-160	-245	-205	-70	0
청소년폭력예방기금(Youth Endowment Fund)	-225	0	0	0	0	0
경합형 공공방송기금	0	-15	-20	0	0	0
총 지출정책 효과	-2,035	-10,905	-13,370	-17,880	-23,650	-30,520

주: 1. 별표(*)는 영향이 거의 없음을 의미

2.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7〉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¹³⁸⁾

□ 인프라 투자 확대

- 예산안에서 국가생산성투자기금¹³⁹⁾의 운영 기간을 FY2023-24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370억파운드로 증액
- (교통) 도로투자전략²(Roads Investment Strategy 2)에 2020~2025년에 약 253억파운드 투자 및 지방 도로·교량의 유지 보수 등에 4억 2천만파운드 투자
 - 잉글랜드 도시의 주요 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Transforming Cities Fund 운영을 FY2022-23까지 확대
 - 첨단 운송기술, 서비스, 디지털 지불시스템 등의 시범 사업을 위한 Future Mobility Zone 도입에 9천만파운드 투자 등
- (디지털 인프라) 광통신 네트워크(full fibre networks) 발전 전략을 위한 투자
 - 기업 및 주민들의 초고속 인터넷 설치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 등 농촌지역 광통신 인터넷 구축 시범사업에 2억파운드 배정
- (주택) 주택 인프라 기금(Housing Infrastructure Fund) 5억파운드 증액 및 2017년 가을에 산안에서 발표된 종합 주택정책에 대한 추가 조치 발표
 - 경전철 개선 등 이스트 런던의 신규 주택 확보 지원, 중소 주택건설회사에 대한 새로운 대출 보증 계획, 13,000호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조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FY2021-22까지 6억 5,300만파운드) 등 주택건설 투자
 - 2018년 10월부터 주택수입계정(HRA)의 차입한도(주택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차입을 통제)를 철폐하여 지방정부는 연간 약 1만호의 주택 건설을 확대할 전망

138)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 16-18

139) 국가생산성투자기금(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은 주택 건설, 운송, 디지털 인프라, R&D 등 생산성에 중요한 분야에 대해 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됨

- (연구개발) 과학 및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16억파운드 자금 배정,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을 통한 제조업 혁신 지원, 전기차 기술 지원 등을 위한 기금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11억파운드 증액 등

□ 지역발전 지원

- 도심 상가(High Street)는 지역 사회·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최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세 감면을 통해 지원 예정
 - 향후 2년간 도심 상가 지원을 위해 과표 기준 5만 1천파운드 미만 소매점의 부동산에 대해 비거주재산세 3분의 1 감면
 - 지방의 편의시설 개방을 위해 공공화장실에 부과하는 비거주재산세 100% 감면
 - 지방 언론사 활성화를 위해 지방 신문사 사무실의 비거주재산세 감면(1,500파운드) 규모 유지 등
 - 이러한 비거주재산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당국 세수 손실 전액을 보상할 예정
- 지방 도심 상가를 탈바꿈하기 위해 Future High Streets Fund를 도입하여 지방 정부를 지원 (6억 7,500만파운드 투자)
 - 도심 상가의 접근성 및 혼잡 개선, 주변 재개발 지원 등 인프라 투자 지원
 - 소매업 부양을 위해 역사적인 도심 상가를 복원하고 상업용 건물을 주거, 사무실, 문화 명소로 활용하는 등 기존 시설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사업(5,500만파운드) 추진
- 지역 교통망 발전을 위해 Northern Powerhouse Rail, East West Rail 자금 지원

□ 기업 지원

-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공장 설비 투자에 대한 연간투자 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를 현행 20만파운드에서 100만파운드로 확대
- 사업 및 투자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비거주용(non-residential) 건축물에 대한 2% 자본투자 공제(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도입

- 2천여 개의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대학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역량 제고 (Small Business Leadership Programme), 지식 이전 파트너십¹⁴⁰⁾ 제도를 통해 기업 생산성 제고(2,500만파운드 투자)
- 혁신적 성장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한 연기금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유럽투자은행그룹 (EIBG)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EU 탈퇴 시 영국의 혁신적 성장기업 자금 조달에 추가 자금 지원 등

나. 복지 및 공공서비스¹⁴¹⁾

-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¹⁴²⁾ 추가 지원) 2018년 6월, 정부는 NHS 7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5년 기간의 추가 예산 지원 계획¹⁴³⁾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 이를 반영한 자금을 배정
 - FY2019-20부터 FY2023-24까지 연평균 3.4% 실질증가율로 NHS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FY2023-24년에는 205억파운드(실질가치 기준)를 증액할 전망
 - － 이에 따라 NHS 지원 예산(직원 연금 기여금 추가 지원 제외)은 FY2018-19에 1,146억 파운드에서 FY2023-24에 1,478억파운드(명목가치 기준)로 추산됨

〈표 V-10〉 NHS England 경상지출 부처별 한도(RDEL)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신규 예산 규모(명목가치)	114.60	120.55	126.91	133.15	139.83	147.76
(증액 규모(실질가치))		(4.1)	(8.3)	(12.1)	(16.1)	(20.5)
직원연금기여금 추가 지원(명목가치)		1.25	1.25	1.25	1.25	1.25
신규 예산 규모 합계(명목가치)	114.60	121.80	128.16	134.40	141.08	149.01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8〉

140) 지식 이전 파트너십(Knowledge Transfer Partnership)은 대학·연구기관이 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 혁신을 지원

참고: 영국 정부, Innovate with a business-academic partnership: apply for funding, 2018.1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innovate-with-a-business-academic-partnership-apply-for-funding>

(검색일자: 2018.11.28.)

141)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18-20

142) 영국은 1948년 국가보건의료서비스(NHS)를 도입하여 지불능력이 아닌 치료 필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서비스(일부 서비스는 제외)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은 대부분 조세로 조달되며 이외에도 국민보험기여금, 기타 환자 부담 수수료 등으로 조달됨. 따라서 영국의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지출 검토에서 국가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제시하고 있음

143) 참고: 영국 총리실, Prime Minister sets out 5-year NHS funding plan, 2018.6.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sets-out-5-year-nhs-funding-plan>(검색일자: 2018.11.28.)

- NHS는 정부 지출의 최우선순위이며, 이번 추가 예산은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NHS 신규 장기 계획(연말 발표 예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
 - 장기 계획의 우선순위에는 치료의 안전성·질 제고를 위한 성과 기준 달성, 암 치료 수준 발전,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보건과 돌봄서비스의 통합, 질병 예방에 중점 등이 포함됨
 - 또한 지속가능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 계획 마련 시 재무부가 제시한 기준(재정 균형 달성,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보건 시스템 변동성 축소 등)을 충족해야 함
 - 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는 추후 2019 지출 검토에서 최종 자금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
 - 이 외에도 FY2023-24까지 정신 건강서비스 예산 연 20억파운드 이상 확대 예정(NHS 예산 지원에 포함)¹⁴⁴⁾
 - 모든 주요 응급실(A&E)에서 종합적 정신건강 지원 제공, 지역별로 어린이 및 청소년 위기지원팀 운영, 정신건강 전문 구급차 확대, 위기 지원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 정신 건강 위기 지원 24시간 핫라인 등 지원 등
- (통합급여¹⁴⁵⁾ 관련 지원 증액)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과 통합급여로 전환하는 수급자 지원을 위해 예산안에서 연간 약 17억파운드 규모의 정책 조치 발표¹⁴⁶⁾
- 2019년 4월부터 통합급여의 근로소득공제액(Work Allowance)¹⁴⁷⁾을 1천파운드 상향 조정하여 약 24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
 - * 이는 아동 및 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연간 630파운드의 소득을 보전받는 효과임
 - 2020년 7월부터 기존 제도에서 통합급여로 전환하는 수급자가 첫 2주간 소득 기반 구직수당, 소득 기반 고용지원수당, 소득 보조 추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약 110만 명의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지원

144) 참고: HM Treasury, Budget 2018: 24 things you need to know, 2018.10.29.

145) 재정적 유인 개선, 절차 간소화, 근로유인 제고, 부정행위 방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는 2013년에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제도를 도입함. 기존의 6가지 수당(소득 기반 구직수당, 소득 보조, 주거 급여, 소득 기반 고용지원수당,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이 통합급여로 대체. 점진적 확대 도입을 통해 당초 2017년 도입 완료 예정이었으나 완료 시기가 연기되고 있음

146) 출처: HM Treasury, Universal Credit: Budget 2018 brief, 2018.10.29.

147) 근로소득공제액 이상의 수입에 대해 수당 삭감률(taper rate)을 적용하여 통합급여액을 계산

- 자영업자의 통합급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소득기준¹⁴⁸⁾ 적용을 면제하는 유예기간 (12개월) 적용 대상을 수익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
 - 수급자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초과지급 복지 급여액을 상환할 수 있도록 2019년 10월부터 초과지급분의 상환 속도 완화(초과지급분 공제를 축소(40%→30%)) 등
-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지방정부에 성인 및 아동 돌봄서비스(social care) 관련 재정 추가 지원
- 성인 돌봄서비스 추가 지원(FY2019-20 2억 4천만파운드), 지방정부에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서비스 관련 추가 지원(FY2019-20 4억 1천만파운드)
 - 장애인 시설 보조금 증액(FY2018-19 5,500만파운드), 아동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 혁신 사업 관련 지원(5년간 8,400만파운드) 등

다. 브렉시트(Brexit) 대응¹⁴⁹⁾

- 재무부 장관은 브렉시트와 관련해 전망에 중대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내년도 Spring Statement¹⁵⁰⁾를 예산 수준으로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¹⁵¹⁾
- 예산책임청도 이번 예산안 경제·재정전망은 영국의 EU 탈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가정해 추계되었으며, 필요시 무역, 이주, EU 분담금 정산 비용 등에 대한 최종 협정에 맞게 가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 2018 가을예산안에 제시된 영국의 EU 탈퇴 관련 조세·재정 정책
- 영국의 EU 탈퇴 준비를 위해 추가로 예비비에서 5억파운드(FY2019-20)를 편성

148) 자영업자의 수입이 최소소득기준(Minimum Income Floor) 이상이면 실제 소득을, 미만이면 최소소득기준을 바탕으로 통합급여액을 계산함. 현재 창업 초기 자영업자에 한해 12개월 동안 최소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소득 기준으로 통합 급여액을 산정해 유예기간 동안 사업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함

149)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 20-21

150) 영국은 가을에 예산안을 발표하고 차년도 3월에 Spring Statement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의 변화를 업데이트 하고 있음

151) 출처: 영국 의회, Autumn Budget 2018: A summary, 2018.10.29.

<https://researchbriefings.parliament.uk/ResearchBriefing/Summary/CBP-8428>(검색일자: 2018.11.28.)

- 2018년 가을예산안에서 발표된 추가 지원 계획으로 2016년 이후 브렉시트 준비를 위한 정부 부처 지원 예산은 총 40억파운드*를 상회할 전망
 - * 기존 지원분 22억파운드, 2017년 가을 예산안 추가 지원분 15억파운드(FY2019-20)를 포함한 규모
- 영국 조폐국(Royal Mint)은 2019년 봄에 EU 탈퇴 기념 주화를 발행할 예정
- 브렉시트를 반영한 세법안 일부 조정 등

라. 재정건전화¹⁵²⁾

- (재정준칙 달성 평가¹⁵³⁾) 예산책임청은 정부가 이번 예산안 정책하에서 ‘재정정책의 목표 (fiscal policy objective)’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준칙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평가함
 - (재정정책의 목표: 공공부문 순차입 기준)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대 부담 등으로 인해 FY2025-26에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
 - FY2025-26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0.9%로 적자가 예상됨
 - 다만 이번 예산안에 재정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FY2023-24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재정목표: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정부가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¹⁵⁴⁾를 2%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Fiscal Mandate)를 기존 목표기한(FY2020-21년)보다 3년 일찍(FY2017-18)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보완적 재정목표: ① 순채무 기준)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의 채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평가
 - (보완적 재정목표: ② 복지지출 한도) FY2022-23에 복지지출은 정해진 한도 대비 20억 파운드를 하회(한도+마진¹⁵⁵⁾ 대비 60억파운드 하회)하여 기준을 충족할 전망

152) 인용: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pp. 21-24

153) 예산책임청은 현 정책하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달성할 가능성이 50%를 상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

154) cyclically-adjusted net borrowing

155) 목표 기한 복지지출 한도의 3%를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에 대응한 마진(margin)으로 설정

〈표 V-11〉 복지지출 한도 및 복지지출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복지지출 한도(welfare cap)					131.1
중간 경로(pathway)	120.9	122.0	124.7	127.8	-
마진(margin)	1.2	1.8	2.5	3.2	3.9
복지지출 한도+마진	122.1	123.8	127.2	131.0	135.0
복지지출 전망치(2018, 10.)	119.8	121.8	123.4	126.0	129.1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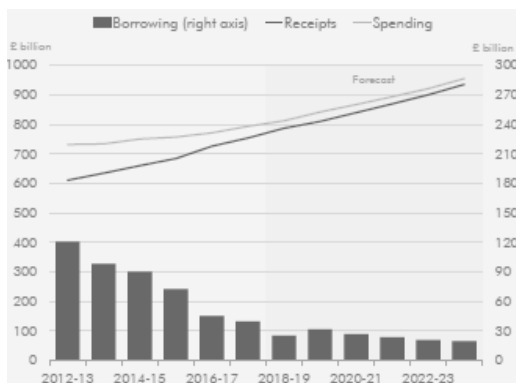
〈표 V-12〉 재정준칙 기준 및 달성 여부 평가

구분	설정 목표 ¹⁵⁶⁾	달성 여부 평가
재정정책의 목표(fiscal policy objective)		
- 공공부문 순차입 (재정수지)	다음 정권(2020~2025)에서 최대한 빨리 공공재정 균형 달성	[어려움] FY2025-26에 재정균형 달성은 어려울 전망
재정 목표(fiscal mandate)		
-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구조적 재정수지)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 비율 FY2020-21까지 2% 미만으로 감축	[충족] FY2017-18에 조기 달성, FY2020-21에 1.3%를 기록할 전망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		
- 공공부문 순채무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이 FY2020-21에 하락세를 달성	[충족] FY2017-18에 조기 달성, FY2020-21에 전년 대비 3.2%p 하락할 전망
- 복지지출 한도 (welfare cap)	FY2022-23에 복지지출의 한도(1,311억 파운드) 준수	[충족] 복지지출이 FY2022-23에 한도 대비 20억파운드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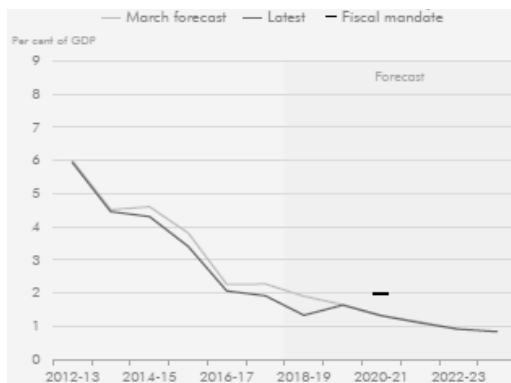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표 10〉

156) 2016년 가을보고서에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목표를 규정 (2017년 1월 의회에서 통과됨). 복지지출 한도의 적용 기한은 2017년 11월에 조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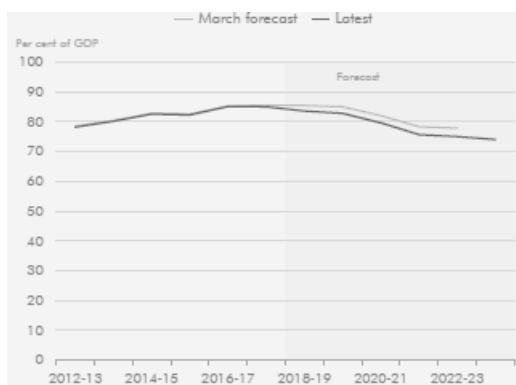
[그림 V-4] 공공부문 순차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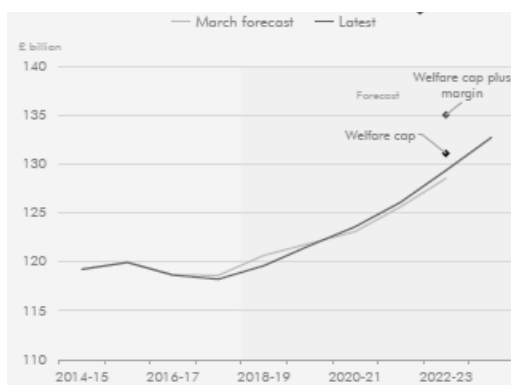
[그림 V-5]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그림 V-6] 공공부문 순채무



[그림 V-7] 복지지출 한도



출처: 박한준·강희우·한혜란(2018),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 2019년에 새로운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다년도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채무를 절감하는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보장하고자 함

* 영국은 중기지출계획인 지출검토 제도를 통해 정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및 이에 따른 자금 배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등을 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지출검토는 FY2016-17~FY2019-20에 대한 지출검토 (2015년 11월 발표)임

○ 과거 지출검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경계를 넘어 정책 이슈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결과·성파가 체계적으로 추적되도록 할 예정

- 정부 자산의 수익 개선과 부채 비용 감축을 위해 재무부는 2017년 가을 예산에서 최초로 대차대조표 검토(Balance Sheet Review)를 도입했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도 대차대조표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추가로 제시
 - IMF 기준에 맞는 정기적인 통합 대차대조표 보고서 발표(2019년 봄) 예정,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수익 개선방안 제시, 신규 정부 프로젝트에 재정 리스크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민간투자방식(PFI) 활용 중단, 인플레이션 노출 위험 감축 등
 - 이 외에도 금융위기 시절 취득한 금융부문 자산, 더 이상 보유할 정책적 이유가 없는 법인 자산·금융 자산 매각을 통해 정부 재정을 개선할 계획
 - FY2023-24까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지분 매각 완료,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자산 매각 프로그램 기간 연장 등

〈참고 V-1〉 Spring Statement 2019

- (배경) 영국은 11월경 OBR의 경제·재정 전망과 함께 가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해 3월 경제·재정 전망이 수정되면서 Spring Statement를 통해 예산안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최첨단과학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 브렉시트, 클린 경제로의 전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등에 대한 진행사항 및 계획을 발표
 - (최첨단과학 및 기술)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 경제전환과 숙련 일자리 창출,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최첨단과학 및 기술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계획
 - 디지털 경제 경쟁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술 대기업이 점점 더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정부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규율을 업데이트
 - 옥스퍼드주 최첨단 시설의 최첨단 레이저기술(Extreme Photonics)에 8,100만파운드를 투자하고, 에딘버러에 있는 새로운 슈퍼컴퓨터에 7,900만파운드를 지원
 -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떠나더라도 영국 경제는 개방되어 있고 국제적인 방문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을 인지시키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
 - 2019년 6월부터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싱가포르, 한국 시민들은 영국 공항과 유로스타 터미널에서 e-gate 사용 가능
 - 2019년 6월부터 입국신고서 폐지 시작

- 올해 가을부터 연구기관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고속권 비자 쿼터에서 박사급 인력에 대한 면제 혜택을 부여
- (클린 경제)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청정성장전략(Clean Growth Strategy), 25개년 환경계획(25 Year Environment Plan)을 기반으로 클린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계획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측정에 대한 투자 지원 방법 모색을 위해 기업 에너지 효율성 계획(Business energy efficiency scheme)을 요청할 계획
 -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망에서 그린가스 비중을 늘림으로써 가스 공급의 탈탄소화를 추진
 - 2025년까지 미래주택표준(Future Homes Standard)을 도입하여 저탄소 난방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로 미래를 보장
- (교육과 숙련) 지난 가을 예산안에서는 현대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숙련(skill)을 갖출 수 있는 단계들을 설정
 - 재학 중 빈곤 퇴치를 위해 중등교육 과정의 여학생들에게 무료 위생용품을 제공
 - 최저임금 영향에 관한 최신 국제연구 검토를 실시하고, 2020년 이후 법정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주택 및 인프라) 2017년 발표된 가을 예산안에서 주택 공급을 1970년 이래 최고 수준(연평균 30만호)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발표
 - 약 3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제도(Affordable Homes Guarantee Scheme)를 통해 주택협회에 의한 대출을 최대 30억파운드까지 보증
 - 인프라 자금조달에 관한 자문을 게시하였고, 민간 인프라 투자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지출검토) 정부는 예산검토와 함께 지출검토를 실시할 예정
 - 향후 3년에 대한 자원이출(경상지출) 및 부처별 예산을 설정
 - 이전 지출검토와 마찬가지로 각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상향식(bottom up) 정밀 분석을 수행하여 자본지출에 대한 제로베이스 검토를 실시

인용: 재정지출분석센터(2019), pp.23-24

VI. 캐나다

□ FY2019-20: 2019년 4월~2020년 3월

□ 출처

○ Budget 2019(2019.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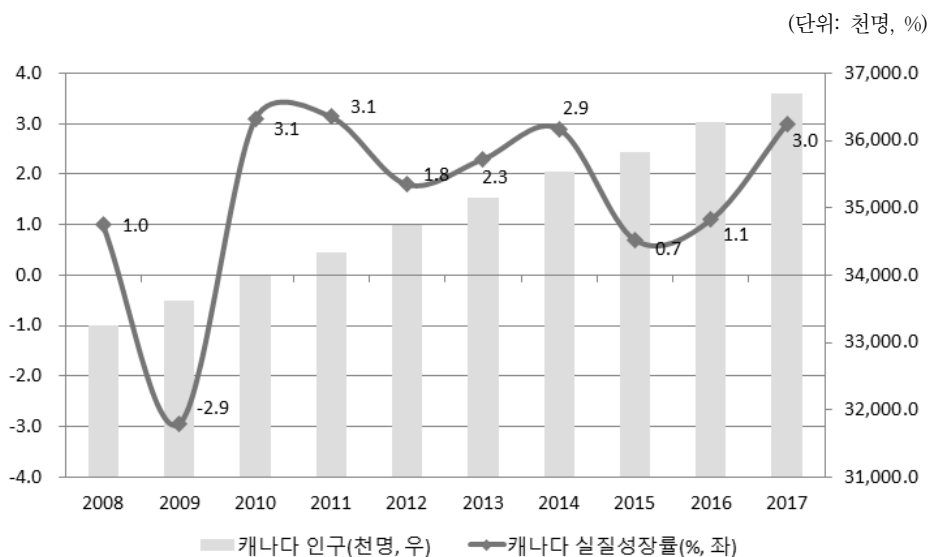
□ 환율: 1캐나다달러 = 848.95원(2018년 평균)

□ 경제규모: 2018년 경상 GDP 1조 7,761억 달러

□ GDP 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2018년 기준 65.8%(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약 80.8%)

□ 인구: 2017년 약 3,671만명

□ GDP 성장률 및 인구추이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8. 2. 26.	FY2017-18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C) 발표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4. 23.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April 2018) 발표	
2018. 9. 27.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 발표	2018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8. 10. 19.	결산보고서(Annual Financial Report) 발표	
2018. 10. 23.	경제재정전망(Economic and Fiscal Outlook-October 2018) 발표	
2018. 10. 24.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A) 발표	
2018. 11. 21.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발표	2019년 2월 1호 『재정동향』
2019. 2. 26.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B) 발표	
2019. 2. 12.	Economic and Fiscal Monitor-February 2019 발표	
2019. 3. 19.	2019 예산안(Budget 2019) 발표	2019년 3월 2호 『재정동향』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2019년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각각 1.8%, 3.4%,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각각 5.7%, 1.9%로 전망
- (재정 전망) FY2019-20 재정적자는 19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9%)로 전망되며, FY2019-20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 비율은 30.7% 수준으로 전망

□ 예산기조

- 2019 예산안은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를 주제로, 캐나다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을 포함
-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변화(Delivering Real Change)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 제시

□ 세입 및 세출

- (세입) FY2018-19 총세입은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한 3,322억 캐나다달러, FY2019-20 총세입은 3,38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7%)로 전망
- (세출) 총세출은 FY2018-19 전년 대비 5.1% 증가한 3,471억캐나다달러, FY2019-20 3,556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중산층 확대를 위한 투자) 2019년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주거, 직업훈련, 의약품 보조 등에 대한 정책 제시
- (재정건전화) 2019년 캐나다 예산안에서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비율을 향후 FY2023-24까지 각각 GDP 대비 0.4%, 28.6% 수준으로 감소할 계획을 발표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 2019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이하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1.8%로 전망
 - 2018~2023년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018년 FES 전망과 동일한 1.8%로 전망
- (명목 GDP 성장률) 2019년 명목 GDP 성장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6%p 하향 조정된 3.4%로 전망
- (실업률) 2019년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된 5.7%로 전망
 - 2018~2023년 평균 실업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1%p 하락한 5.9%로 전망
 - 2015.11월 이후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새 일자리의 4분의 3은 full-time positions) 되었으며, 캐나다 실업률은 지난 40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 중임
- (물가상승률)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FES 전망 대비 0.2%p 하향 조정된 1.9%로 전망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2.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표 VI-1〉 캐나다 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8-23
실질GDP 성장률	2018 FES	1.9	1.9	1.6	1.6	1.9	1.9	1.8
	Budget 2019	1.9	1.8	1.6	1.7	1.9	1.9	1.8
명목GDP 성장률	2018 FES	3.9	4.0	3.3	3.7	4.0	3.9	3.8
	Budget 2019	3.8	3.4	3.5	3.7	3.9	4.0	3.7
실업률	2018 FES	5.9	5.8	6.0	6.1	6.0	6.0	6.0
	Budget 2019	5.8	5.7	5.9	6.0	6.0	5.9	5.9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2018 FES	2.4	2.1	1.9	1.9	2.0	2.0	2.0
	Budget 2019	2.3	1.9	2.0	1.9	2.0	2.0	2.0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1 일부 발췌

나. 재정 전망

- (재정수지) FY2019-20 재정적자는 19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9%)이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FY2023-24에는 9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0.4%)를 기록할 전망
- (총세입) FY2019-20 총세입은 전년 대비 66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388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FY2023-24까지 GDP 대비 총세입 비율은 14.8% 수준으로 유지
- (총세출) FY2019-20 총세출은 전년 대비 85억캐나다달러 증가한 3,556억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19-20 프로그램 지출은 3,294억캐나다달러, 이자지출은 262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¹⁵⁷⁾ 비율은 FY2019-20에는 30.7%(7,054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28.6%(7,617억캐나다달러)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157) 공식채무지표로 누적기준 연방채무(Federal debt, accumulated deficit)를 사용하며, 연방채무는 이자지급채무와 외상매입 등을 포함한 부채에서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표 VI-2〉 캐나다 재정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17~18	예상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수입	311.2	332.2	338.8	351.4	366.7	380.7	395.5
총지출	330.2	347.1	355.6	368.2	378.4	389.8	402.2
프로그램지출	308.3	323.5	329.4	339.7	348.3	358.4	369.1
이자지출	21.9	23.6	26.2	28.5	30.2	31.4	33.2
위험조정			-3.0	-3.0	-3.0	-3.0	-3.0
재정수지	-19.0	-14.9	-19.8	-19.7	-14.8	-12.1	-9.8
연방채무 ¹⁾	671.3	685.6	705.4	725.1	739.8	751.9	761.7
GDP 대비 비중(%)							
총수입	14.5	14.9	14.7	14.8	14.9	14.8	14.8
프로그램지출	14.4	14.6	14.3	14.3	14.1	14.0	13.8
이자지출	1.0	1.1	1.1	1.2	1.2	1.2	1.2
재정수지	-0.9	-0.7	-0.9	-0.8	-0.6	-0.5	-0.4
연방채무	31.3	30.8	30.7	30.5	30.0	29.3	28.6

주: 1) FY2018-19 연방 채무 전망치에 기타 포괄 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4 일부 발췌

〈표 VI-3〉 2018년 FES 이후 조정내역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18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포함) ¹⁾	-18.1	-19.6	-18.1	-15.1	-12.6	-11.4
2018 FES 재정수지(위험조정 제외)	-15.1	-16.6	-15.1	-12.1	-9.6	-8.4
2018 FES 이후 경제 및 재정적 요인에 의한 조정	5.9	4.8	4.7	3.7	4.1	4.6
2018 FES 이후 정책 및 Budget 2019 투자에 의한 조정	-5.6	-5.0	-6.3	-3.3	-3.6	-2.9
재정수지	-14.9	-16.8	-16.7	-11.8	-9.1	-6.8
위험조정		-3.0	-3.0	-3.0	-3.0	-3.0
Budget 2019 재정수지	-14.9	-19.8	-19.7	-14.8	-12.1	-9.8

주: 1) -는 재정적자요인의 증가, +는 재정적자요인 감소를 의미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2 일부 발췌

2 예산기조

- 2019년 예산안은 「중산층을 위한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를 주제로, 캐나다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에 투자하는 정책을 포함
 - 캐나다 정부는 중산층 강화와 캐나다의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으며, 2019년 예산안에서도 중산층 확대를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 보건의료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이번 예산안에서는 투자(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변화(Delivering Real Change)에 대한 4개 주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을 제시
- 2019년 예산안 중점정책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제도(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교육지원제도(Canada Training Benefit), 의약품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등임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8-19 총세입은 강한 경제성장세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6.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FY2019-20 총세입은 3,38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4.7%),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3.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조세수입) FY2018-19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198억캐나다달러(7.5%) 증가한 2,829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2.7%)로 전망
 - － (개인소득세) 높은 고용률과 노동시장 강세에 기인하여 FY2018-19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92억캐나다달러(6.0%) 증가한 1,628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향후 전망기간 동안 개인소득세의 증가율은 개인소득세제시스템의 누적적 성격과 실질개인소득의 증가로 명목 GDP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법인세) FY2018-19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42억캐나다달러(8.7%) 증가한 52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3.3% 증가 전망
 - 2018년 FES의 사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시적인 세제조치로 인해 FY2019-20 법인세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비거주자 소득세) FY2018-19 비거주자 소득세는 기업이익 증대에 따른 배당금, 이자 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7억캐나다달러(21.9%) 증가한 96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0.7% 증가 전망
 - － (재화 및 용역세) FY2018-19 재화 및 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전년 대비 7.8% 증가할 전망이며, 과세대상 소비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관세) FY2018-19 관세수입(Customs import duties)은 일시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 보복 관세 조치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27.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으로 향후 5년간 관세 수입은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타 소비세) 2018년 예산안의 담배소비세 인상 조치에 기인하여 FY2018-19 기타 소비세(Other Excise Taxes/Duties)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2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8-19 고용보험료(Employment Insurance Premium, EI) 수입은 2018년 FES 전망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 고용보험요율 하향조정이 예상(2019 예산안 조치 제외)
- (기타 세입) FY2018-19 기타 세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279억캐나다달러, FY2019-20는 287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VI-4〉 세입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17-18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총소득세(A)	209.3	224.3	226.5	234.5	244.4	253.2	264.0
개인소득세	153.6	162.8	170.4	177.8	185.0	192.7	201.3
법인세	47.8	52.0	46.3	47.0	49.7	50.7	52.8
비거주자소득세	7.8	9.6	9.7	9.7	9.7	9.8	9.9
총소비세(B)	53.8	58.5	59.3	60.4	62.3	64.3	66.0
재화 및 용역세	36.8	39.6	40.8	42.1	43.6	45.2	47.0
관세	5.4	6.9	6.3	5.9	6.1	6.4	6.3
기타소비세	11.7	12.0	12.3	12.4	12.6	12.7	12.7
총조세수입(C=A+B)	263.1	282.9	285.8	294.9	306.6	317.5	330.0
고용보험(D)	21.1	21.4	22.0	22.7	23.5	24.4	25.3
기타 세입(E)	27.0	27.9	28.7	30.3	31.9	33.2	34.5
총수입(F=C+D+E)	311.2	332.2	338.8	351.4	366.7	380.7	395.5
GDP 대비 비중(%)							
개인소득세	7.2	7.3	7.4	7.5	7.5	7.5	7.6
법인세	2.2	2.3	2.0	2.0	2.0	2.0	2.0
재화 및 용역세	0.4	0.4	0.4	0.4	0.4	0.4	0.4
총조세수입	12.3	12.7	12.4	12.4	12.4	12.4	12.4
고용보험	1.0	1.0	1.0	1.0	1.0	1.0	0.9
기타 세입	1.3	1.3	1.2	1.3	1.3	1.3	1.3
총세입	14.5	14.9	14.7	14.8	14.9	14.8	14.8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5 일부 발췌

나. 세출

- 총프로그램지출은 FY2018-19 전년 대비 4.9% 증가한 3,235억캐나다달러, FY2019-20 3,294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FY2018-19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 지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96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1,215억캐나다달러(FY2023-24)까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 노인지원 지출은 FY2018-19 533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노인인구 전망 증가에 기인하여 향후 706억캐나다달러(FY2023-24)까지 증가할 전망
 - 노인지원지출은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 및 수당 지급(Guaranteed Income Supplement and Allowance payments)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노인지원 지출은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
 - (고용보험) FY2018-19 고용보험 지출은 실업률 하락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4.7% 감소한 188억캐나다달러로 예상되며, 향후 연평균 5.7% 증가할 전망
 - 민간부문 전문가들은 2019년 이후 실업률은 6.0%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 보험 수혜자 수의 완만한 증가를 전망
 - (아동지원) FY2018-19 아동복지급여(CCB: Canada Child Benefits)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증가를 반영하여 239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연평균 1.7%, 261억캐나다달러(FY2023-24)까지 증가할 전망
 -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¹⁵⁸) 정부부문 간 주요 이전지출은 FY2018-19 760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에는 881억캐나다달러까지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 FY2018-19 캐나다 보건지출(Canada Health Transfer: CHT)은 386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466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캐나다 보건지출은 명목 GDP 성장률의 3년 이동 평균에 따라 증가하며 매년 최소 3% 증가 보장

158) 중앙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지출분으로 교부금 성격을 가짐

- (사회보장지출) 사회보장지출(Canada Social Transfer: CST)은 매년 3% 증가를 법에서 규정, FY2018-19 142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164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연료세 기금) 연료세기금(Gas Tax Fund)은 매년 2% 증가, FY2018-19에는 일회성 이전지출 22억캐나다달러를 반영하여 43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홈케어및정신보건) 2017예산에서 도입된 지방·주정부 홈케어및정신보건 지원금은 FY2018-19 9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12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o (직접 프로그램 지출¹⁵⁹⁾) FY2018-19 직접프로그램지출은 1,515억캐나다달러, FY2023-24에는 1,594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부처 이전지출경비) 부처 이전지출경비는 FY2018-19 541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2-23 564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
 - (운영비용) 운영비용은 FY2018-19 950억캐나다달러에서 FY2023-24 973억캐나다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장기금리 인상, 연금 및 직원급여 관련 비용 등에 기인하여 연평균 약 3% 증가할 전망

〈표 VI-5〉 프로그램 지출 전망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구분	2017-18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A) (Major Transfers to persons)	93.8	96.0	100.4	105.8	111.4	116.4	121.5
노인지원(Elderly benefits)	50.6	53.3	56.2	59.7	63.3	66.9	70.6
고용보험(EI benefits) ¹⁾	19.7	18.8	19.9	21.5	23.0	24.0	24.8
아동지원(Children's benefits)	23.4	23.9	24.3	24.6	25.1	25.6	26.1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B)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70.5	76.0	76.9	79.6	82.6	85.0	88.1
건강관련(Canada Health Transfer)	37.1	38.6	40.4	41.8	43.3	44.9	46.6
사회보장관련(Canada Social Transfer)	13.7	14.2	14.6	15.0	15.5	15.9	16.4
재정균등화 교부금(Equalization)	18.3	19.0	19.8	20.5	21.3	22.1	22.9

159) 부처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직접 프로그램 지출로 구분하여 부처에 예산을 배분

구분	2017-18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준주 교부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3.7	3.8	3.9	4.2	4.3	4.4	4.6
연료세기금(Gas Tax Fund) ²⁾	2.1	4.3	2.2	2.2	2.3	2.3	2.4
홈케어및정신보건 (Home care and mental health)	0.3	0.9	1.1	1.3	1.5	1.2	1.2
기타 재정협정(Other Fiscal Arrangements) ³⁾	-4.7	-4.7	-5.1	-5.3	-5.5	-5.8	-6.0
직접프로그램지출(C) (Direct Program Expenses)	144.0	151.5	152.1	154.2	154.3	156.9	159.4
연료비 반환(Fuel Charge Proceeds Returned)	0.0	0.6	2.6	3.8	4.9	5.7	5.7
기타 이전지출(Other Transfer payments)	47.1	54.1	52.8	55.0	54.5	55.1	56.4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⁴⁾	96.8	96.7	96.7	95.4	95.0	96.2	97.3
총프로그램지출(A+B+C) (Total Program Expenses)	308.3	323.5	329.4	339.7	348.3	358.4	369.1
GDP 대비 비중(%)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4	4.3	4.4	4.4	4.5	4.5	4.6
정부부문간 주요 이전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3	3.4	3.3	3.3	3.3	3.3	3.3
직접프로그램지출 (Direct Program Expenses)	6.7	6.8	6.6	6.5	6.3	6.1	6.0
총프로그램지출 (Total Program Expenses)	14.4	14.6	14.3	14.3	14.1	14.0	13.8

주: 1) 실업급여, 질병급여, 출산 및 육아휴직 수당, 간병급여 등이 포함되며 고용보험 지출 중 90%를 차지
2) 지역향상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의 구성항목
3) 퀘벡 주에 대한 청소년 회복 수당, Stand Programs 대체 지불, 법정 보조금, 2005년 해외협약에 따른 지급금 등을 포함
4) 자본상각비용(capital amortization expenses)을 포함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2.6 일부 발췌

4 주요 재정정책

가. 중산층에 대한 투자

- 2019년 예산안에서는 캐나다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제시
 - (투자, Investing in the Middle Class) 정부의 이천지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증가,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 등의 정책 제시
 -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CMHC)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지원(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가 주택구매가격의 5~10%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향후 3년간 최대 12억 5천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 예를 들어 40만캐나다달러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CMHC가 5%를 분담함으로써 차용인은 5% 선금과 36만캐나다달러에 대한 모기지 이자만 부담하면 됨
 - 은퇴저축(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인출한도 상향 조정: 주택구매계획(HBP, the Home Buyers' Plan)의 첫 주택 구매시 은퇴저축의 인출한도를 3만 5천캐나다달러로 조정
 - 새로운 교육지원 제도(Canada Training Benefit) 도입: 교육 크레딧(Training Credit), 고용보험 교육지원(EI Training Support Benefit), 새로운 휴직 조항(Leave Provisions)을 도입하여 향후 5년간 17억캐나다달러 이상 투자
 - 직업훈련 크레딧(Training Credit): 25~64세의 적격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매년 250캐나다달러 크레딧을 누적하여 이를 직업훈련비로 사용
 - 고용보험 교육지원(EI Training Support Benefit): 2020년 후반에 시행될 예정이며 근로기간 4년마다 최대 4주 동안 소득지원, 1인당 평균 주당 소득의 55%를 지급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보조
 - 휴직관련 법 조항(Leave Provisions) 신설: 근로자들이 훈련받는 동안 실업에 대한 불안감을 감당해야 하므로 노동법 개정으로 휴직관련 조항을 신설

- 국가 의약품 보조정책(National Pharmacare) 강화: 특히 처방의약품 가격 조정을 위해 캐나다 의약 에이전시(Canadian Drug Agency)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FY2019-20부터 향후 4년간 35백만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발전, Building a Better Canada) 기존 캐나다 플랜에 대한 투자(The Investing in Canada Plan)¹⁶⁰)는 FY2020-21까지 4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저렴한 전기요금 및 깨끗한 경제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1,465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모든 국민들에게 초고속 인터넷망 제공을 위해 향후 5년간 717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캐나다 북부 대초원의 물과 토양보호, 폐광산 매립 프로그램, 원주민 커뮤니티 등 캐나다 원주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향후 5년간 56백만캐나다달러 지원 예정
 - 글로벌 인재 육성, 소기업에 대한 지원 개선, 차세대 기업가에 대한 지원, 캐나다 산림분야 혁신 및 성장 지원, 석유 및 가스분야의 혁신 지원 등 국가 혁신을 위해 향후 5년간 1,123백만 캐나다달러 투자
 - 줄기세포 연구, 브레인 캐나다 재단(Brain Canada Foundation) 지원, 게놈 캐나다(Genome Canada) 등에 캐나다 의료 및 과학 연구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459백만캐나다달러 투자
- (조화, Advancing Reconciliation) 원주민과 화해 및 조화를 바탕으로 둔 정책을 중심으로 원주민과의 격차해소, 원주민 보호 및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원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원주민 청소년 및 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격차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679백만캐나다달러 지원
 - 원주민과 이누이트 아동(Inuit Children)을 위한 서비스 개선, 토착민 언어보존, 건강하고 안전한 원주민 공동체를 위해 향후 5년간 3,051백만캐나다달러 지원
- (변화, Delivering Real Change) 건강과 복지, 문화 및 예술을 위한 지원, 캐나다 재향군인 및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 공정한 세금시스템에 중점 투자(FY2023-24년까지 총 5,406백만 캐나다달러 지원)

160) 캐나다 투자계획(The Investing in Canada Plan)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됨. 2016년 시행한 1단계는 대중교통 인프라 펀드, 정수 및 폐수관련 펀드, 초고속 인터넷망 인프라 프로그램, 주택공급관련 투자 등이 있으며, 2017년부터 시작한 2단계 계획은 캐나다 인프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캐나다 인프라 은행, 재해 완화 기금 등이 있음

- 건강과 복지: 국가치매전략 도입 향후 5년간 50백만캐나다달러 지원, 오피오이드 중독 대응에 향후 5년간 31백만캐나다달러 지원, 장기기증 및 이식을 위한 캐나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37백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문화 및 예술지원: 성평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62백만캐나다달러 지원, 저널리즘 조직을 위한 세금공제 향후 5년간 360백만캐나다달러 지원, 디지털 뉴스에 대한 세금공제 향후 5년간 138백만캐나다달러 지원 등
- 캐나다 재향군인 및 가족을 위해 향후 5년간 351백만캐나다달러 지원

〈표 VI-6〉 2019년 예산안에서의 부문별 투자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Projection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2023-24
투자(Investing in People)	0.0	-0.6	-1.3	-1.8	-2.3	-2.4
발전(Building a Better Canada)	-3.2	-0.3	-0.8	-0.8	-0.6	-0.4
조화(Advancing Reconciliation)	-0.9	-0.7	-1.0	-1.0	-0.6	-0.6
변화(Delivering Real Change)	-0.1	-1.7	-1.6	-0.8	-0.5	-0.6
기타(Other Budget 2019 Investment)	0.0	-0.7	-0.9	1.6	0.6	1.2
총 투자	-4.2	-4.0	-5.7	-2.7	-3.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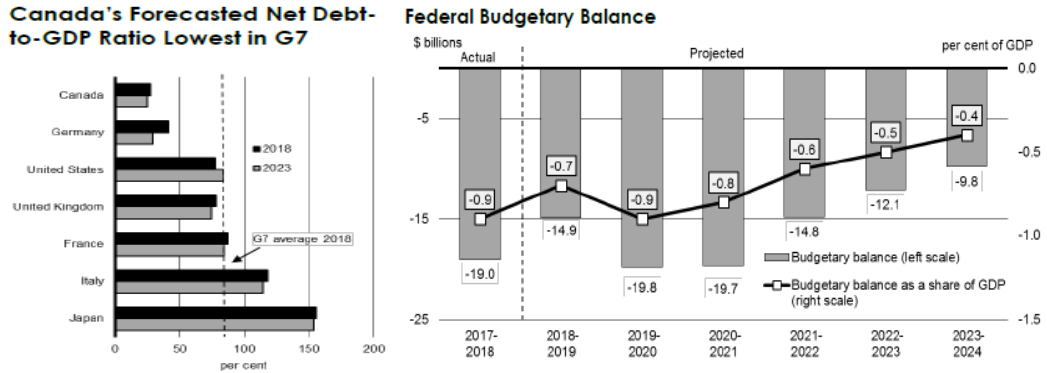
주: 1. +는 투자 증가분, -는 투자 감소분을 의미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1

나. 재정건전화

- FY2019-20 예산안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했으나 2018년 FES의 전망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으며 향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을 발표
 - IMF 발표(2018.10)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캐나다의 GDP 대비 순채무 비율은 G7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
 - 캐나다 정부는 현재 및 미래세대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위해 낮은 채무를 유지할 계획
 - 재정적자는 GDP 대비 FY2018-19 0.7%에서 FY2023-24 0.4% 수준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

[그림 VI-1] G7 국가의 GDP 대비 순채무 및 캐나다 재정수지 전망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Chart 3, 4

□ FY2019-20 채무관리전략(Debt Management Strategy)¹⁶¹⁾

- FY2019-20 연말기준 총시장채무¹⁶²⁾는 7,540억캐나다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
 - (유가증권 및 단기국채) FY2019-20 유가증권은 약 5,830억캐나다달러, FY2019-20 단기국채는 약 1,51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 (소매채무 및 외채) FY2019-20 소매채무는 약 10억캐나다달러로 전망되며, FY2019-20 외채는 약 190억캐나다달러로 전망

〈표 V-7〉 FY2019-20 시장채무(Market Debt)

(단위: 연말기준,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추정)	2019-20 (전망)
유가증권(Domestic bonds)	504	536	576	574	583
단기국채(Treasury bills)	138	137	111	131	151
외채(Foreign debt)	22	18	16	16	19
소매채무(Retail debt)	5	5	3	2	1
총시장채무	670	695	705	723	754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19(2019.3.19.) Table A4.3

161)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국내의 채무, 기타 금융부채 및 관련자산의 관리에 대한 목표·전략·계획을 설정
 162) 캐나다의 총채무(Gross debt) 중 시장채무(Market debt)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채무관리전략에서는 시장채무관리를 주로 다룸. 예산안 및 재무결산상 채무지표는 연방채무(누적 기준)이나, 예산안에서는 이와 더불어 시장채무(유가증권, 단기국채, 외채, 소매채무로 구성)를 중심으로 중기 채무전략을 보여줌.

VII. 호주

□ FY2018-19: 2018년 7월 ~ 2019년 6월

□ 출처

- Budget Overview, The Treasury, 2018.5.8.
- Budget Paper No.1 ~ No.2 2018-19, The Treasury, 2018.5.9.
- Ensuring the Government lives within its means, The Treasury, 2018.5.8.
- Guaranteeing the essential services Australians rely on The Treasury, 201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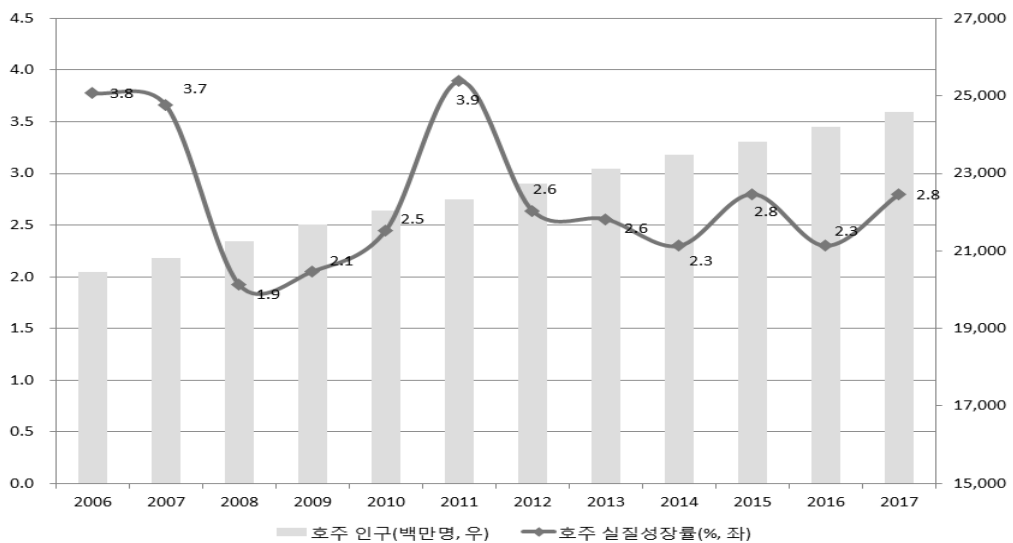
□ 환율: 1호주달러 = 약 822.26원(2018년도 평균)

□ 경제규모: 2017년 경상GDP 1조 2,791억달러(우리나라 0.64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2017년 기준 43.0%(우리나라 2017년 기준 80.8%)

□ 인구: 2,460만명(2017년)

□ GDP 성장률 및 인구 추이



〈최근 재정 및 경제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18.9.4.	통계청, 2018년 6월분기 정부재정통계(GFS) 발표	2018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18.9.25.	재무부·재정부, FY2017-18 결산보고서(FBO) 발표	
2018.11.9.	중앙은행(RBA),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	
2018.11.23.	재정부, 2018년 10월 재정보고서 발표	
2018.12.5.	통계청, 2018년 9월분기 국민계정 발표	
2018.12.17.	재무부·재정부, FY2018-19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발표	
2019.2.7.	중앙은행(RBA),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	2019년 『재정동향』 2월 제1호
2019.2.14.	재무부, 추가 예산 발표	2019년 『재정동향』 2월 제2호
2019.3.5.	통계청, 2018년 4분기 정부재정통계(GFS) 발표	2019년 『재정동향』 3월 제1호
2019.3.6.	통계청, 2018년 4분기 국민계정 발표	

[요 약]

□ 경제 및 재정 전망

- (경제 전망) 광산 투자 호황에 이어 비광산 부문 투자 개선으로 실업률 감소 및 성장 강화를 전망
- (재정 전망) FY2018-19 예산수지¹⁶³⁾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되며, FY2021-22에 166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자 전환 전망

□ 예산기조: FY2018-19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 ① 개인소득세 감면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지원 ③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 ④ 국민 안보 보장 ⑤ 정부 지출 및 세금 시스템 관리에 초점

□ 예산안 내용

- (수입) FY2018-19 재정수입은 FY2017-18 전망 대비 6.6% 증가한 4,861억호주달러 (GDP 대비 23.4%)로 편성
- (지출) FY2018-19 재정지출은 FY2017-18 전망 대비 4.2% 증가한 4,886억호주달러 (GDP 대비 25.7%)로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일자리창출 및 성장 활성화) 인프라투자, 기업지원, 농업·관광 등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지역 불균형 완화 기대
- (복지) 의료·복지혜택 확대 및 초·중·고등 교육 지원
- (안전) 국가 안전 보장 강화 및 국가 및 지역 범죄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 (재정건전화) FY2018-19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출은 FY2020-21에 30년 평균수준을 밑도는 GDP 대비 24.8% 규모로 감소할 전망
 - 정부지출 실질증가율 연평균 1.9% 유지를 목표로 지출 통제
 - 총 18억 6,700만호주달러 절감 계획

1 경제 및 재정 전망

가. 경제 전망

- 광산 투자 호황에 이어 비광산 부문 투자 개선으로 실업률 감소 및 성장 강화 전망
 - (경제) 실질 GDP 성장률은 FY2017-18에 2.75%, FY2018-19 및 FY2019-20에 3.0%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
 - － 광산 부문 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 운송 및 교통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거부문 투자가 FY2018-19에 1.5% 소폭 상승할 전망
 - － 완화적 통화정책(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최저금리, 높은 임금 수준,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
 - － 명목 GDP는 FY2017-18에 4.25%, FY2018-19년에 3.75%, FY2019-20에 4.75% 전망
 - (고용) 고용률 증가율은 FY2018-19 및 FY2019-20에 1.5% 수준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FY2017-18에 5.50%에서 FY2018-19에 5.25%로 감소 전망
 - － 업종별로 살펴보면, 19개 산업 중 14개 산업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의료 및 사회 지원, 건설 및 소매업 분야가 증가된 일자리의 80%를 차지
 - (물가) 소비자물가는 2018년 6월 분기 및 2019년 6월 분기에 2.0%, 2020년 6월에 2.5% 증가 전망
 - －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임금 상승이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

163) 예산수지는 현금주의 기준(Future Fund 예상수익금 제외)이며, 재정수지는 발생주의 기준. 호주 예산은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두 가지 회계가 혼합되어 사용되며, 예산편성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는 현금주의를 이용하는 반면 세출, 예산집행 및 보고 등에는 발생주의 적용.

〈표 VII-1〉 주요 경제지표(Major Economic Parameters) 전망

(단위: %)

구분	실적(Outcomes)	추정(Forecasts)		
	2016-17	2017-18	2018-19	2019-20
실질 GDP 성장률 ¹⁾	2.10	2.75	3.00	3.00
고용률 증가율 ²⁾	1.90	2.75	1.50	1.50
실업률 ³⁾	5.60	5.50	5.25	5.25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²⁾	1.90	2.00	2.25	2.50
명목 GDP 성장률 ¹⁾	5.90	4.25	3.75	4.75

주: 1) 실질 GDP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2) 고용률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사분기(June Quarter) 기준 연평균 증가율

3) 실업률은 2사분기 기준

출처: Budget 2018-19 Overview, The Treasury, 2018. 5.

나. 재정 전망

□ FY2018-19 예산수지¹⁶⁴⁾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되며, FY2021-22에 166억 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자 전환 전망

- (재정수입) FY2018-19 재정수입은 4,861억호주달러(GDP 대비 25.5%)이며, FY2021-22에 5,379억호주달러(GDP 대비 25.8%)로 개선될 전망
- (재정지출) FY2018-19 재정지출은 4,886억호주달러(GDP 대비 25.7%)이며, FY2021-22에 5,182억호주달러(GDP 대비 24.9%)로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이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FY2018-19 재정수지는 -74억호주달러(GDP 대비 -0.4%)이고 FY2021-22에 129억 호주달러(GDP 대비 0.6%) 흑자로 개선 전망
- (예산수지) FY2018-19 예산수지는 -145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전망되며, FY2021-22에 166억호주달러(GDP 대비 0.8%)로 흑자 전환 전망

164) 예산수지는 현금주의 기준(Future Fund 예상수익금 제외)이며, 재정수지는 발생주의 기준. 호주 예산은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두 가지 회계가 혼합되어 사용되며, 예산편성 및 승인 등의 과정에서는 현금주의를 이용하는 반면 세출, 예산집행 및 보고 등에는 발생주의 적용.

- (순채무) FY2018-19 순채무는 3,499억호주달러(GDP 대비 18.4%), FY2021-22에 3,193억 호주달러(GDP 대비 14.7%)로 GDP 대비 순채무 비중이 감소할 전망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재정수입(Revenue) ¹⁾	456.2	486.1	512.8	537.9	568.2
GDP 대비 비율	(24.9)	(25.5)	(25.7)	(25.8)	(26.1)
재정지출(Expenses) ¹⁾	468.8	488.6	504.2	518.2	540.8
GDP 대비 비율	(25.5)	(25.7)	(25.3)	(24.9)	(24.9)
재정수지(Fiscal Balance) ²⁾	-13.4	-7.4	3.7	12.9	19.4
GDP 대비 비율	(-0.7)	(-0.4)	(0.2)	(0.6)	(0.9)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³⁾	-18.2	-14.5	2.2	11.0	16.6
GDP 대비 비율	(-1.0)	(-0.8)	(0.1)	(0.5)	(0.8)
순채무(Net debt) ¹⁾	341.0	349.9	344.0	334.3	319.3
GDP 대비 비율	(18.6)	(18.4)	(17.3)	(16.1)	(14.7)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재정수지 = 재정수입 - 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 기준, Future Fund 예상 수익금 제외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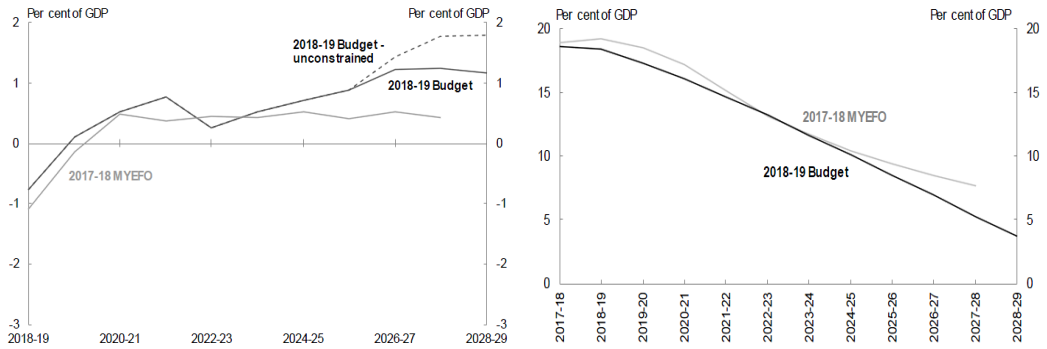
□ (중기재정전망) 중기적으로 현 정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FY2017-18 예산안에서 예상하였던 것보다 1년 빠른 FY2019-20 균형예산 달성 전망

- (중기재정전략) 균형재정을 통한 더 강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GDP 대비 1%의 예산 흑자 달성을 위한 중기재정전략(Medium-term fiscal strategy)을 유지할 계획
 - 정부 지출은 생산성 및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
 - 고용 및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조세부담률 인하, 순채무 감축 및 안정화 등 정부 지출 통제를 통한 강력한 재정규율 유지
 - 소득 증가 및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을 통한 세입 증대

- 경제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조세부담률 23.9% 이하 유지
-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개선을 통한 재정수지 강화
- (재정회복전략) 중기재정전략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경제성장, 낮은 실업률, 재정수지 흑자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함
 - 다른 예산 부문의 지출 감소로 신규 재정지출 확보
 - 경제 변화로 인한 재정수지 양(+의 변화분은 예결산의 개선(improvement to the budget bottom line)으로 반영
 - 명확한 재정수지 흑자 전략은 향후 의사결정에 따라 수정
- (주요내용) FY2018-19 예상 세입은 FY2021-22까지 4년 동안 FY2017-18 전망치보다 120억호주달러 증가
 - (예산수지) FY2020-21 예산수지는 흑자로 전환되고, FY2026-27에는 GDP 대비 1% 흑자 전망
 - (순채무) FY2017-18 GDP 대비 18.6%로 정점에 다다른 후 FY2027-28 GDP 대비 5.2% 까지 감소할 전망
 - (구조적 재정수지¹⁶⁵⁾) FY2018-19에 GDP 대비 1.25% 적자에서 FY2020-21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

165) 경기변동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의 자동적인 증가부분을 제거한 후 계산된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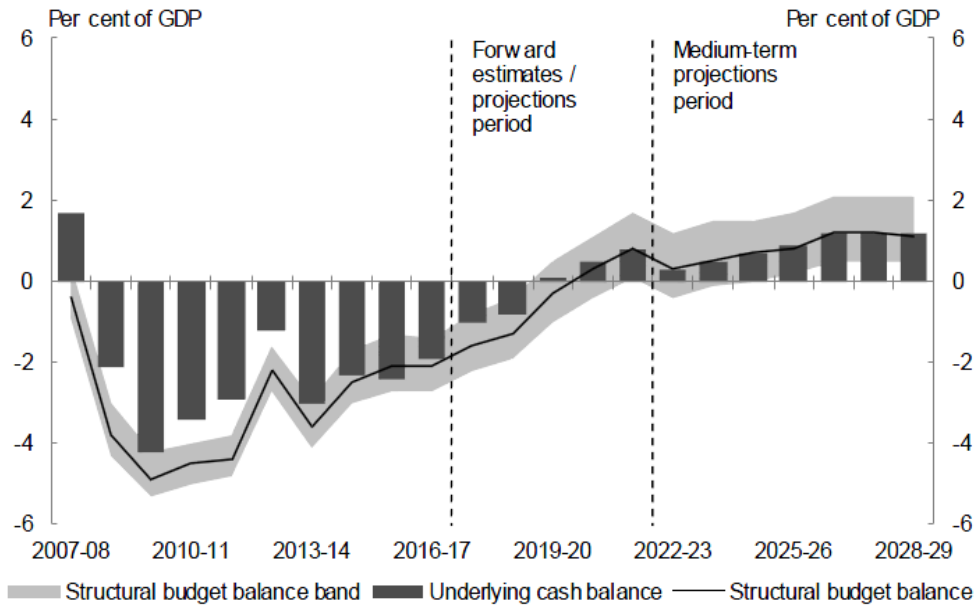
[그림 VII-1]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주: 회색선은 반기재정전망보고서(MYEFO: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의 전망, 검은선은 FY2018-19 예산안 전망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 5.

[그림 VII-2]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Budget Balance) 전망



주: 막대는 예산수지, 실선은 구조적 재정수지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 5.

2 예산기조

- FY2018-19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① 개인소득세 감면 (Tax relief to working Australians)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지원(Backing business and create jobs) ③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Guaranteeing the essential services) ④ 국민 안보 보장(Keeping Australians Safe) ⑤ 정부 지출 및 세금 시스템 관리(Living within its means)에 초점
 - (개인소득세 감면) 개인소득세 계획(The Personal Income Tax Plan) 및 법인세 계획(The Enterprise Tax Plan) 시행
 - 개인소득세 계획(The Personal Income Tax Plan): 저소득층 및 중산층 소득세 감면, 브래킷크리프¹⁶⁶⁾ 현상 방지,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 간소화
 - FY2018-19 동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1년에 최대 530호주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약 4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을 5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FY2024-25부터 납세자의 94%에게 32.5% 이하의 한계세율을, 소득구간 2만호주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45%의 한계세율을 적용할 계획
 - 법인세 계획(The Enterprise Tax Plan): 법인세율 인하, 탈세 등 지하경제 규제 강화, 다국적기업 과세 투명성 개선, 법인세 과세표준 투명성 유지, 과세 시스템 투명성 개선, R&D 조세 지원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율을 5%에서 8%로 인상하여 최대 1,000호주달러까지 감면, FY2026-27에 16%로 인상할 계획
 - 법인세 감면은 FY2016-17부터 시작되어 연간 매출액이 1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27.5%를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5천만호주달러 미만인 기업까지 확대

166)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 증가로 세율 인상 없이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국회입법조사처, 2013)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 국가 인프라 구축, 건강 및 의료산업 성장 계획(A 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Growth Plan), 과학 및 연구 인프라 투자, 디지털 기술 산업 투자, 농업 수출 및 경쟁력 향상 지원, 방위산업 수출 지원
 - 모든 주 및 준주의 신규 인프라 사업에 245억호주달러를 지원하는 등 향후 10년간 교통 인프라 투자에 750억호주달러 상당을 지원할 계획
 - 국가 보건 및 의료 산업 성장 계획(National Health and Medical Industry Growth Plan)에 13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호주 보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기술, 생명공학, 의약 분야 및 농업·방위산업 수출을 지원
 - 향후 12년 동안 국가공동연구기반인프라구축전략(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Infrastructure Strategy)을 통해 41억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제조업, 농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력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 퇴직연금(superannuation) 보장, 의료보험·의약품 급여 기금 확충, 주 및 준주 병원 설립 자금 지원, 장애인보험 기금 설립, 국가에너지보장 추진
 - 연금계좌 수수료 인하, 소액 계좌 특정 수수료 3% 적용, 탈퇴 수수료를 폐지하여 젊은 계층 및 저소득층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보호
 - 공립병원 설립을 위해 FY2020-21과 FY 2024-25에 추가로 300억호주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
- (국민 안보 보장) 공항 보안 강화, 경찰 및 국가 안보 관련 기관 투자, 밀입국 방지를 위한 국경 강화
 - 밀입국 방지를 위해 6,220만호주달러 지원, 국경 보호 예산으로 2억 9,400만호주달러 지원, 이동착취방지센터(the Australian Centre to Counter Child Exploitation)에 6억 6,600만호주달러 지원, 국가범죄정보시스템(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ystem) 개발에 5,910만호주달러 지원
- (정부 지출 및 세금 시스템 관리) 순부채 감소, 균형예산, 공평과세, 복지 의존도 감소
 - 미래 납세자들에게 이자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순부채를 감소시키고 연평균 실질지출증가율을 2% 미만으로 유지

- 일자리 감소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법인세 증가 속도를 조정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 세금 감면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3.9% 이하로 유지
- 가장 필요한 계층에 복지 혜택이 제공되도록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복지부 데이터 매칭 작업 확대

〈표 VII-3〉 주요 정책 계획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호주달러)

주요정책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계
공립병원 자금지원 (Supporting Our Hospitals - National Health Agreementpublic hospital funding)	0,0	-50,0	0,0	-330,5	-596,6	-977,1
의약품지원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 new and amended listings)	-16,5	-175,3	-220,8	-255,2	-101,8	-769,7
산호초 지대 자연보호 (Great Barrier Reef 2050 Partnership Program)	-443,8	-10,1	-4,7	-8,3	-11,1	-478,0
노던준주 원주민 이동식 주택 (Remote Indigenous Housing in the Northern Territory)	0,0	-110,0	-110,0	-110,0	-110,0	-440,0
국가연구인프라투자계획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Investment Plan -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response)	-199,2	-5,5	-25,6	-76,4	-86,6	-393,3
노던준주 공공서비스 지원 (Funding to Boost Services in the Northern Territory)	-259,6	0,0	0,0	0,0	0,0	-259,6
고령층 지원 (More Choices for a Longer Life - finances for a longer life)	0,0	-21,2	-92,7	-74,8	-69,8	-258,6
직업교육 및 훈련 기금 운영 (Managing the Skilling Australians Fund - revised implementation arrangements)	-250,0	0,0	0,0	0,0	0,0	-250,0
공립학교 목사 프로그램 (National School Chaplaincy Programme - continuation)	0,0	-61,7	-61,7	-61,7	-61,7	-247,0
지역발전기금 (Building Better Regions Fund - round three)	0,0	-40,1	-108,1	-48,4	-9,9	-206,5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계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lan)	0,0	-50,0	0,0	-330,5	-596,6	-977,1
개인소득세 - 메디케어 부과율 2% 유지 (Personal Income Tax , retaining the Medicare levy rate at 2 per cent)	-16,5	-175,3	-220,8	-255,2	-101,8	-769,7
지하경제 양성화 - 불법담배 수입근절 (Black Economy Package - Combating Illicit Tobacco)	-443,8	-10,1	-4,7	-8,3	-11,1	-478,0
연구개발(R&D) 세금 인센티브 (Better target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0,0	-110,0	-110,0	-110,0	-110,0	-440,0
지하경제 양성화 - 단속 신설 · 강화 (Black Economy Package - New and enhanced ATO enforcement against the Black Economy)	-199,2	-5,5	-25,6	-76,4	-86,6	-393,3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 이행 강화 (Personal Income Tax - ensuring individuals meet their tax obligations)	-259,6	0,0	0,0	0,0	0,0	-259,6
퇴직연금 변경 (Protecting Your Super Package - changes to insurance in superannuation)	0,0	-21,2	-92,7	-74,8	-69,8	-258,6
기업 세금 및 퇴직연금 부채 (A firm stance on tax and superannuation debts)	-250,0	0,0	0,0	0,0	0,0	-250,0
과세소득신고 확대 (Black Economy Package - further expansion of taxable payments reporting)	0,0	-61,7	-61,7	-61,7	-61,7	-247,0
퇴직연금 납입금 공제 투명성 개선 (Superannuation - better integrity over deductions for personal contributions)	0,0	-40,1	-108,1	-48,4	-9,9	-206,5

출처: Budget 2018-19, Overview, The Treasury, 2018.5.8.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8-19 재정수입은 '17년 전망 대비 6.6% 증가한 4,861억호주달러(GDP 대비 25.5%)로 편성
 - (조세수입) 4,520억호주달러로 '17년 12월 발표된 반기재정전망보고서 대비 89억호주달러 (2.0%) 상향 조정
 - (세외수입) 341억호주달러로 반기재정전망보고서 대비 17억호주달러(5.2%) 증가

〈표 VII-4〉 재정수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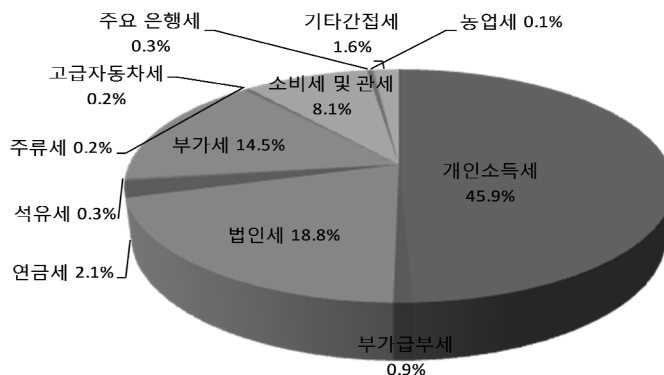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7-18	2018-19	2019-20	2020-21
· FY2017-18 MYEFO	448,702	475,588	507,811	538,220
· FY2018-19 예산안	456,176	486,141	512,795	537,880
증감	7,474	10,553	4,984	-340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5,8.

[그림 VII-3] FY2018-19 재정수입 구성

(단위: %)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5,8.

〈표 VII-5〉 FY2018-19 예산안 재정수입 규모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18-19		증감(b-a)	
	MYEFO	예산안	금액	비율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443,137	452,001	8,864	2.0
소득세(Income taxation revenue)	324,160	330,190	6,030	1.9
개인소득세 (Total individuals and other withholding tax)	219,700	222,900	3,200	1.5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s tax)	4,290	4,310	20	0.5
법인세(Company tax)	88,800	91,200	2,400	2.7
연금세(Superannuation funds)	10,260	10,360	100	1.0
석유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	1,110	1,420	310	27.9
간접세(Indirect taxation revenue)	118,977	121,811	2,834	2.4
부가세(Goods and services tax)	68,550	70,310	1,760	2.6
주류세(Wine equalisation tax)	1,000	1,010	10	1.0
고급자동차세(Luxury car tax)	700	740	40	5.7
소비세 및 관세(Total excise and customs duty)	38,780	39,620	840	2.2
주요 은행세(Major bank levy)	1,700	1,700	0	0.0
농업세(Agricultural levies)	536	575	39	7.3
기타간접세(Other taxes)	7,711	7,856	145	1.9
세외수입(Non-taxation revenue)	32,451	34,140	1,689	5.2
재정수입(Total Revenue)	475,588	486,141	10,553	2.2

주: 1. 발생주의 기준

2. MYEFO는 반기경제재정보고서(12월 발표)의 약어

출처: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8, 2017.12.,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 5.8

나. 세출

- FY2018-19 재정지출은 '17년 전망 대비 4.2% 증가한 4,886억호주달러(GDP 대비 25.7%)로 편성
 - 사회보장 및 복지, 보건, 교육, 국방 분야 지출이 총지출의 약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가 총지출의 36.0%로 가장 큰 비중
 - 지출규모 상위 20개의 지출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노령자, 장애인, 학생, 간병인, 실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
- 주요 기능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일반 공공서비스) FY2017-18에서 FY2018-19 사이 지출 감소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대외 원조(Foreign aid) 금액에 따라 재정지출의 증가 및 감소 요인이 있음
 - (국방) 2016년 국방백서(Defence White Paper)상의 우선순위 정책 지원¹⁶⁷⁾을 반영하여 FY2018-19에서 FY2021-22 사이 국방 관련 지출 증가
 - (교육) FY2017-18 예산 및 FY2017-18 반기재정전망보고서에서 발표된 공립학교 등록률 제고 조치 정책을 반영하여 FY2018-19에서 FY2021-22 사이 교육 관련 지출 증가
 - (보건) 지역 의료서비스 및 의료혜택·지원 증가로 FY2018-19에서 FY2021-22 사이 보건 관련 지출 증가
 - (사회보장 및 복지) 노령 인구 연금 수령, 간병인 지급금, 국가장애보험계획, 보육지원 증가로 FY2018-19에서 FY2021-22 관련 지출 비용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국가파트너십협정(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s)에 따른 지급금 완료로 인해 FY2017-18에서 FY2018-19 사이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FY2018-19에서 FY2021-22 사이 지출 감소는 지역 개발 프로젝트 완료에 기인
 - (교통·통신) 도로 및 철도 부문 주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감소 전망

167) 선박, 항공기 및 장갑차 등 군사 장비와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프라 구축 투자

〈표 VII-6〉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Estimates)			전망(Projections)
	2017-18	2018-19	2019-20	2020-21
· 2017-18 MYEFO 재정지출	466,937	485,512	501,026	517,318
· 2018-19 예산안 재정지출	468,788	488,584	504,171	518,247
증감	1,851	3,072	3,145	929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5.8.

〈표 VII-7〉 FY2018-19 예산안 기능별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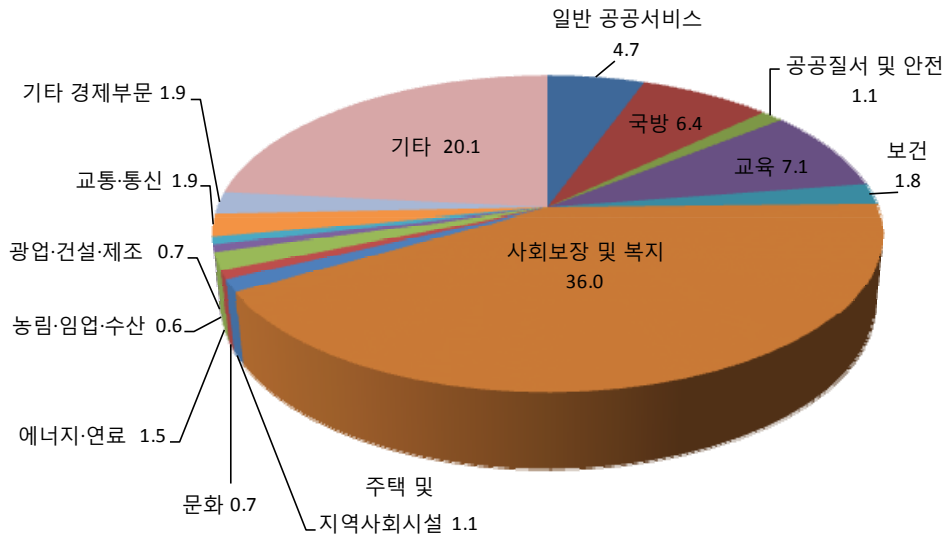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일반 공공서비스	24,975	23,065	23,621	22,253	22,923
국방	30,982	31,215	30,866	33,061	35,164
공공질서 및 안전	5,251	5,324	5,263	4,851	4,829
교육	33,746	34,736	36,185	37,730	39,336
보건	77,6037	8,825	80,416	82,049	85,041
사회보장 및 복지	162,621	175,971	182,568	187,535	194,335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435	5,382	5,119	4,454	4,225
문화	3,793	3,638	3,517	3,470	3,539
에너지·연료	7,515	7,541	7,814	8,138	8,492
농림·임업·수산	3,019	3,070	2,628	2,549	2,678
광업·건설·제조	2,979	3,260	3,552	3,681	3,484
교통·통신	9,252	9,062	8,187	7,523	6,976
기타 경제부문	10,212	9,471	8,640	8,400	8,347
기타	91,407	98,023	105,797	112,552	121,460
재정지출	468,788	488,584	504,171	518,247	540,830
(GDP 대비 비율)	(25.5)	(25.7)	(25.3)	(24.9)	(24.9)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5.8.

[그림 VII-4] FY2018-19 재정지출 구성

(단위: %)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5,8.

〈표 VII-8〉 FY2018-19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단위: 백만호주달러)

프로그램 ¹⁾	분류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주·준주 수입보조(Revenue Assistance to the States and Territories)	기타	64,492	68,196	70,537	74,187	77,895
노령자 소득지원 (Income support for seniors)	사회보장·복지	45,095	46,838	49,120	51,560	53,797
의료 급여(Medical Benefits)	보건	23,284	24,074	25,464	26,778	28,184
주립병원 지원 (Assistance to the States for public hospitals)	보건	20,690	21,189	22,301	23,468	24,692
가족수당(Family Tax benefits)	사회보장·복지	18,472	18,348	18,269	17,978	17,885
노인복지사(Aged care services)	사회보장·복지	16,584	18,006	19,474	20,589	22,080
국가장애보험계획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사회보장·복지	7,816	16,695	20,734	22,355	23,647
장애인 소득지원 (Income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y)	사회보장·복지	16,578	16,564	17,058	17,222	17,728
의약품혜택, 서비스 및 공급 (Pharmaceutical benefits, Service and Supply) ²⁾	보건	12,455	12,088	11,760	9,864	9,787
사립학교 국가지원(Non-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11,181	11,781	12,405	13,098	13,773
구직자 소득지원 (Job seeker income support)	사회보장·복지	11,143	10,165	11,035	11,391	11,915
공공 연금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³⁾	기타; 일반공공 서비스	9,195	8,886	8,958	9,137	9,275
간병인 소득지원 (Income Support for carers)	사회보장·복지	8,494	8,689	9,137	9,453	9,938
보육비 보조 (Child care Fee Assistance)	사회보장·복지	7,182	0	0	0	0
탁아보조금(Child Care Subsidy) ³⁾	사회보장·복지	0	8,000	8,679	9,025	9,534
공립학교 지원 (Government schools National Support)	교육	7,118	7,687	8,343	9,036	9,729
공군 능력(Air Force capabilities)	국방	7,003	7,628	7,657	7,935	8,561
군사 능력(Army capabilities)	국방	7,382	7,494	7,618	8,147	8,701
국가장학금 (Commonwealth Grants Scheme)	교육	6,993	7,062	7,171	7,290	7,407
유류세 공제 계획 (Fuel Tax Credits Scheme)	에너지·연료	6,913	6,922	7,241	7,654	8,114
군인 퇴직연금 (Defense Force superannuation) ⁴⁾	국방	6,854	6,665	6,780	6,950	7,122
상위 20 지출 프로그램 합계		468,788	488,584	504,171	518,247	540,830

주: 1) 해당 프로그램 내의 기관 간 거래는 제외.

2) 추계 및 전망 결과는 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의 새로운 지불 체계 영향을 반영.

3) 보육비 보조(Child care Fee Assistance)에는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및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이 포함되어 있으며, '18년 7월 1일부터 탁아보조금(Child Care Subsidy)으로 대체 계획.

4) 동 사업은 연금의 명목 이자와 발생주의 비용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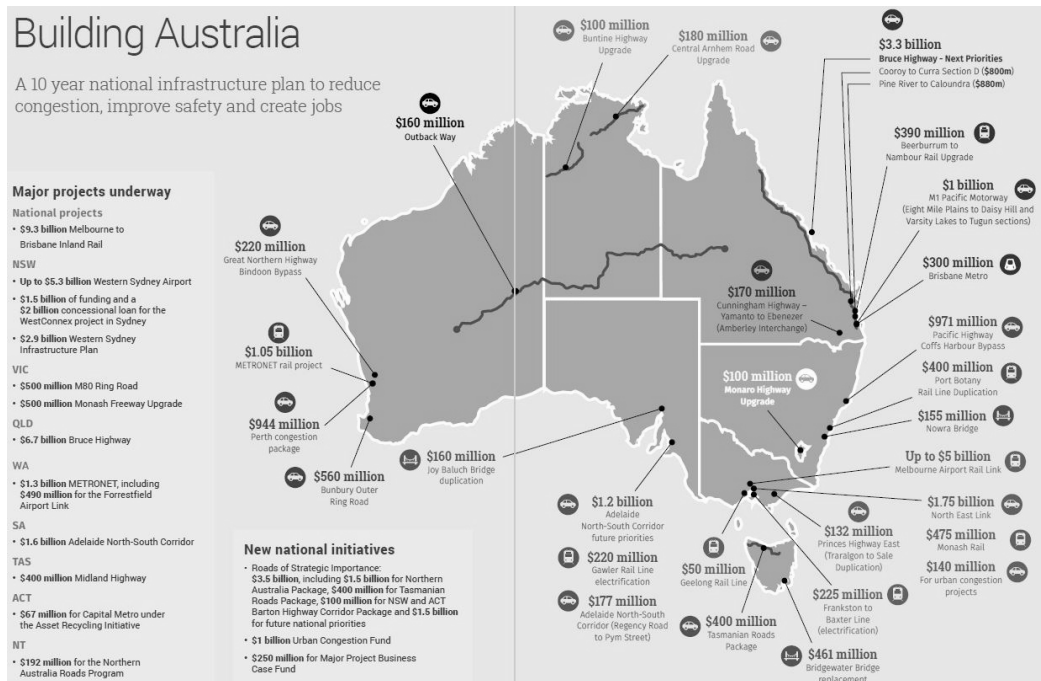
출처: Budget Paper No.1 2018-19, The Treasury, 2018.5.8.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인프라투자) 교통 체증 완화, 안전 및 지역 간 접근성 증진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된 국가중점인프라 건설 10년 계획¹⁶⁸⁾을 지속
 - 도로 안전 및 화물 수송 개선을 위한 정책(RoSI: Roads of Strategic Importance)을 수립하여 35억호주달러를 지원
 - 태즈매니아(Tasmania) 도로에 4억호주달러, 바스톤 고속도로(Bastion Highway)에 1억호주달러, 북부 도로에 15억호주달러 지원 계획 등

[그림 VII-5] 호주 인프라 투자 계획



출처: Budget Paper Overview 2018-19, The Treasury, 2018, 5.

168) 동 계획은 2017년 시작되어 2027년까지 향후 10년 간 총 750억 호주달러를 도로, 철로, 공항 등 국가중점인프라 건설에 투자하여 비광업 부문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도시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호주달러 기금을 조성하는 등 신규 주요 운송 사업 계획 (New national initiatives) 외에 주요 신규 인프라 사업을 발표
 - 빅토리아주 멜버른 공항 철도에 최대 50억호주달러 지원
 - 퀸즐랜드주 브루스 고속도로(Bruce Highway) 개선 사업에 33억호주달러 추가 지원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Western Australia) METRONET 철도 사업에 10.5억호주달러 지원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South Australia) 애들레이드 남북 도로(Adelaide North-South Road Corridor)에 14억호주달러를 우선 지원
- (기업) 호주정부는 FY2016-17부터 시작된 ‘법인세 10개년 계획(The Ten Year Enterprise Tax Plan)’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동 계획은 약 33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들과 약 680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연매출 5천만호주달러 이하 중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감세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¹⁶⁹⁾을 담고 있음
 - 해당 감세 조치로 연매출 1천만호주달러 이하 소기업의 경우 과거 50년간 최저 수준인 27.5%까지 법인세율이 낮아졌으며, FY2017-18에는 연매출 2,500만호주달러 이하 기업도 27.5%를 적용받았음
 - 2018년 7월 1일 이후(FY2018-19), 연매출 5천만호주달러 이하 기업까지 27.5% 법인세율을 확대 적용할 예정
 - 더하여 지난 해 연매출 1천만호주달러 이하 소기업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2만호주달러까지의 즉시 자산 상각 혜택을 2019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연장하여, 소기업의 재투자 및 자산 교체 기회를 제공
 - 이러한 법인세 인하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증가를 꾀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169) 구체적으로 ① 비법인 영세회사들에 대한 세금인하율을 5%에서 8%까지 강화(1,000호주달러 상한)하고, FY2026-27까지 세금인하율을 16%까지 강화 ②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 연매출액을 200만호주달러에서 1천만 호주달러로 올려 소기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지방 지원) 다수의 지역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가 전체에 고르게 퍼질 수 있도록 지방 지원 정책 추진
 - (농업 종사자 지원) 생물보안(biosecurity)을 위해 1억 200만호주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해충과 잡초 관리 명목으로 2,660만호주달러를 지원
 - (지역 관광산업 지원) 세계 유산에 등재되어 6만 4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Great Barrier Reef’의 수질 개선, 산호를 위협하는 악마불가사리 방지, 과학 연구 수행을 위해 5억호주달러 투자
 - (지역 사회 지원) 지방 인프라 및 지역 사회 투자를 지원하는 ‘Building Better Regions’ 기금 3단계 사업에 2억호주달러를 제공

나. 복지

- (보건) 공립병원 지원, 의약품보조혜택 적용 대상 약품 확대 등으로 의료·복지혜택 확대
 - 공립병원협약을 새로 맺어 공립병원 기금에 FY2020-21부터 FY2024-25까지 5년간 300억 호주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이는 지난 5년 대비 30% 인상된 액수임
 - 의약품보조혜택(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적용 대상 약품 추가·개정에 14억호주달러 지출
 - 척추성 근육위축증 치료제, 유방암 치료제, 재발 완화형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및 HIV 예방을 위한 신약이 포함됨
 - 생후 첫 2,000일간 여성과 아이의 건강 향상을 위해 2,090만호주달러 제공
 - 지역사회 스포츠 참여 지원에 약 1억 5천만호주달러 지원
- (교육) ‘양질의 학교 패키지(Quality Schools Package)’에 245억호주달러를 투입하여 호주의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 또한 ‘유아 교육에 보편적 접근에 관한 국가 파트너십 협정(The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Universal Access to Early Childhood Education)’을 2019년¹⁷⁰⁾까지 연장하기 위해 4억 4천만호주달러를 제공하여 각 가정이 유치원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
- (지방 교육 지원) 지역 내 하위 학사 프로그램(sub-bachelor program) 접근 확대를 위해 FY2018-19부터 4년간 총 2,820만호주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연구 허브(Regional Study Hub)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을 위한 장소를 추가로 조성하는 데 총 1,400만호주달러를 지원
- (주거)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외곽 원주민들의 재산 및 임차 관리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노던 준주 정부와 새로운 양자 협약을 체결
 - 새로운 양자 협약을 통해 호주 정부는 FY2018-19부터 FY2022-23까지 5년간 연 1억 1천만호주달러씩 총 5억 5천만호주달러를 지원함

다. 안전

- (안보)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외부의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과 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책정함
 - 연안경비함인 Australian Border Force Cutter(ABFC) Ocean Shield를 서지 용량(surge capacity) 수준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바다를 통한 밀입국과 밀수 방지를 위한 연안 경계 활동을 지속하는 데 6,220만호주달러 제공 테러리스트 및 기타 항공 승객, 항공 화물과 국제 우편을 통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강화를 위해 약 2억 9,400만호주달러 투자
 - 9개 주요 국내·국제공항에 호주 연방 경찰과 호주 국경 수비대의 배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2,200만호주달러를 사용
 - 호주로 들어오는 항공화물 및 국제 우편들을 심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신형 장비와 첨단 기술 도입에 1억 2,200만호주달러 사용
 - 64개 지방 공항의 심사 기술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기 위해 5,100만호주달러를 지원

170) 역년(calendar year)

- 비자처리, 신원 관리 및 위협 분석을 위한 ICT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해 1억 3천만호주 달러 사용

□ (치안) 국가 및 지역 범죄 해결을 위해 예산을 책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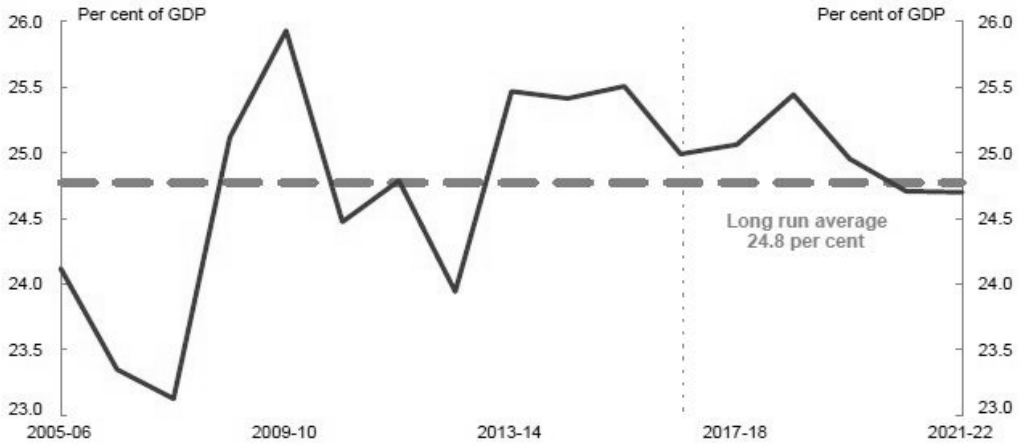
-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 착취 대응 센터를 설립하는 데 6,860만호주달러 투자
- 범법자들이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도피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범죄 정보 시스템 개발에 5,910만호주달러 지출
- 지역 사회 보안 향상을 위해 CCTV설치, 조명 및 방범 프로그램 개선 등으로 3천만호주달러 지출

라. 재정건전화

□ (균형재정) FY2018-19 예산안은 작년과 동일하게 균형재정 및 중기적 흑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출(payments)은 FY2020-21에 30년 평균수준(GDP 대비 24.8%)을 밑도는 GDP 대비 24.7% 규모로 감소할 전망

-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보다는 튼튼한 경제를 만들면서 지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고자 함
- 2013년부터 진행해왔던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에 힘입어, FY2013-14 GDP 대비 3%였던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적자가 FY2018-19에는 FY2013-14년 대비 2.2%p 감소한 GDP 대비 0.8%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FY2021-22에는 예산수지 적자가 예산수지 흑자로 돌아서 GDP 대비 0.8% 재정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정부지출 실질증가율은 연평균 1.9%로 유지되도록 지출을 통제

[그림 VII-6] GDP 대비 지출 추이 및 전망



출처: Budget Paper Overview 2018-19, The Treasury, 2018, 5.

- 향후 5년간 해외 일반의 비자 발급을 통한 의사 부족 상황 개선¹⁷¹⁾, 제너릭·바이오시밀러 이용 확대를 통한 의약품 접근성 개선, 복지부(DHS)의 회계부정 적발과 부채 회수 활동 확대, 내무부문 포트폴리오(Home Affairs Portfolio) 신설을 통한 효율성 증진, 신규이민자들의 복지 혜택 획득까지의 대기 기간연장 등을 통해 총 18억 6,700만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

(표 VII-9) 주요 절감 조치(Major savings)

(단위: 백만호주달러)

절감조치(계획)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계
일반의 비자 발급-의사부족지역 타기팅 (Visas for General Practitioners-targeting areas of doctor shortages)	0.0	0.4	57.8	132.4	224.9	415.5
의약품 접근성 개선-제너릭, 바이오시밀러 이용 확대 (Improving Access to medicines-encouraging greater use of generic and biosimilar medicines)	-4.5	-17.2	39.0	119.7	165.5	302.6
사회복지부채 회수 (Social Welfare Debt Recovery)	0.0	0.0	-8.8	-8.1	316.1	299.3

171) 호주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연간 약 2,100명의 해외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s)에게 비자를 발급하여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FY2021-22까지 총 4억 1,550만호주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절감조치(계획)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총계
내무부문 포트폴리오 신설-효율화 (Establishment of the Home Affairs Portfolio-efficiencies)	0.6	28.6	52.7	76.6	97.7	256.3
신규이민자 자립 유도 (Encouraging Self-Sufficiency for Newly Arrived Migrants)	0.7	-0.2	-1.0	-1.6	204.6	202.5
공적개발원조(ODA) 수준 유지 (Maintaining the Leve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0.0	10.2	10.2	10.2	110.5	141.1
의약품 접근성 개선-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의 질 강화 (Improving Access to medicines-strengthening the quality use of healthcare services)	-0.1	-1.2	8.9	28.2	41.8	77.6
난민을 위한 서비스 간소화 (Streamlining Services for Refugees)	0.0	4.0	16.8	21.8	25.6	68.1
‘노력 리더십 프로그램(Endeavour Leadership Program)’-효율화 (Endeavour Leadership Program-efficiencies)	0.0	7.2	15.2	17.2	23.3	62.9
치과 및 관련 건강 서비스 개선 (Improved Dental and Allied Health)	0.0	-1.1	17.2	13.8	10.7	40.7

출처: Budget Paper Overview 2018-19, The Treasury, 2018. 5.

정책분석 19-02

주요국 예산안 2019

발 행 2019년 3월 30일
발 행 인 김 유 찬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代)
홈 페이지 www.kj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쇄 디자인 범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